

## 글쓴이

-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중국현대사 전공  
일제하 만주국 연구, 중일전쟁과 중국혁명 외 다수
- 윤영인**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시아관계사 전공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본의 중국중심적 문화론 비판,  
Mongols and Western Asians in the Late Koryo Ruling  
Stratum 외 다수
- 오강원**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공  
비파형 동검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 연구, 중국 동북지역  
세 청동단검문화의 문화지형과 교섭관계 외 다수
- 송호정** 한국고원대학교 교수, 한국고대사 전공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고조선의 국가형성과 사회  
성격 외 다수
- 김경숙**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고구려사 전공  
고구려 국내성 천도의 역사적 의미, 고구려 전기 정치사  
연구 외 다수
-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발해사 전공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일본 및 중국 역사 교과서의 발해사  
관련 내용 분석 외 다수
- 노기식**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북아시아사 전공  
후금시기 만주와 몽고 관계 연구, 만주의 흥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외 다수
- 최덕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러시아 외교사 전공  
러시아의 대만주정책과 통창철도, 러시아의 외교혁명과  
일본의 한국병합 외 다수
- 다카미이치** 교토세이카대학 강사, 일본 근현대사 전공  
**田中隆一** 일본 역사학의 '방법론적' 전환과 '동아시아'의 '근대',  
일제의 '만주국' 통치와 재만 한인 문제 외 다수
- 한석정** 동아대학교 교수, 역사사회학 전공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외 다수
- 김기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중국현대사 전공  
일제하 만주 이민 정책 연구, 근대 중국동북사 연구의 동향
- 배성준**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한국 근현대사  
'경성'지역 식민지 공업의 형성, 한말 울릉도·독도 영토  
분쟁의 대두와 울도군 설치 외 다수
- 장세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한국 근현대사 전공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 북한  
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 외 다수
- 김경일** 한국한중양연구원 교수, 역사사회학 전공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 20세기 전반기 만주의  
조선인(공자),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외 다수

# 일러두기

1. 이 책은 만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올바른 이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출간되는 만주의 역사 관련 단행본이다. 만주 관련 전공자들이 만주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골라 서술하였다.
2.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 서적으로서의 성격과 역사 전공자들에게 만주 역사의 요체를 간략하게 알리기 위한 학술 서적으로서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다. 따라서 각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억제하고 학계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보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단, 집필자 개인의 고유한 시각은 전체 균형을 크게 깨뜨리지 않는 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3. 이 책은 쉽게 읽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한글을 사용하였고, 지명이나 책 이름, 사람 이름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4. 글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국 고유명사의 표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서술 원칙에 따라 한글식 명칭으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5. 원고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출간된 만주 관련 연구 성과들을 대거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참고한 연구 성과를 일일이 명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를 발간하며

‘만주’라는 말은 원래 민족 명칭이었지만 근대 이래 만주족이 살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지역 명칭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 한족들은 이곳을 ‘요동’ 또는 ‘백산흑수’ 등으로 부르면서 한낱 ‘미개한 이민족의 생활공간’ 정도로 인식하였을 뿐이어서, 이곳은 늘 북방 민족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들은 한족 정권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은 채 강대한 힘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동 혹은 만주를 기반으로 흥기한 북방민족들은 한반도 및 요동(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을 넘어 중앙아시아나 유럽까지 세력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근현대 시기에 이르러 만주는 러시아와 일본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촉발되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동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게 굳어진 ‘만주’라는 명칭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에 ‘동북지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주’라는 말이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동아시아의 특수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만주’라는 말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의 제목을 ‘만주’로 정한 것은, ‘만주’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서 다른 용어로는 이 지역 명칭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만주’ 이외의 다른 용어로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지정학적·문화적 역할이나 위상, 한반도와의 상관성 등을 담아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주’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했고 그 용어 자체도 역사적 함의를 띠고 있어서 이제 역사의 기억 속에서 털어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Prologue

하여튼 상술한 것처럼 만주는 동아시아 각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주는 우리의 현재를 비롯해서 미래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역할은 향후 한·중관계나 통일 한반도의 위상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동북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 문제나 역사 문제를 포함한 만주 문제는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소지가 큼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때, 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연구재단에서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 만주의 역사적·지정학적 특성과 위상을 우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만주뿐만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의 상관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5년 12월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김정배

# 차례

# CONTENTS

##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 들어가며

-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110
- 만주라는 이름에 대하여 124

### 제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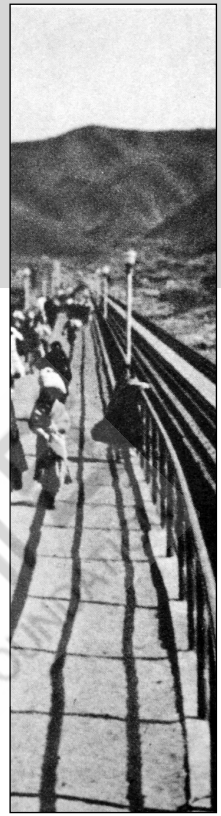
#### 만주와 우리 역사

- 동북아시아의 청동기문화와 요령 그리고 한반도 130
-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144
- 한민족의 웅비, 고구려 160
- 해동성국, 발해는 어떤 국가인가 180

### 제 2 부

#### 만주와 정복왕조

- 정복왕조 요·금·원은 중국사인가 1100
- 만주족은 어떻게 청나라를 세웠을까 1118



### 제 3 부 만주와 제국주의

- 러시아는 왜 만주에 관심을 가졌을까 | 138
- 일본인에게 만주국은 무엇인가 | 156
- 만주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70

### 제 4 부 만주와 조선인

- 조선인은 왜 만주로 갔을까 | 182
- 간도협약이 무효면 간도는 우리 땅인가 | 196
- 만주 지역 독립운동과 한국 현대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 208
- 만주의 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 226

### 나오며

-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인가 | 244



滿

洲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 들어가며

-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 만주라는 이름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윤휘탁 | 고구려연구재단 |

## ❁ 만주의 특징과 어원

**최** 근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된 ‘만주(滿洲)’는 동아시아 전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만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띠게 될까? 만주는 현재 중국에서 ‘동북지구’로 불리고 있는 요령성(遼寧省)·길림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 등 3성을 지칭한다. 이들 3성의 인구는 2002년 말 기준으로 각각 4,203만 명, 2,699만 명, 3,813만 명, 합계 1억 715만 명으로 남북한 인구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중국 동포’라 불리는 조선족의 인구는 1990년 기준으로 192만 3천여 명이다. 이들 3성의 면적은 각각 14.57만km<sup>2</sup>, 18.70만km<sup>2</sup>, 46.90만km<sup>2</sup>, 합계 80.17만km<sup>2</sup>로 한반도 넓이의 약 4배에 해당한다. 1999년을 기준으로 이들 3성에서 생

산되는 소맥(小麥)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 옥수수의 비중은 30.1%, 대두(大豆)의 비중은 31.1%이다. 이들 3성은 개혁·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최대 중공업지대였지만, 이후 동남연해지대가 새로운 중공업지대로 부상하면서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이들 3성의 농업·임업과 지하자원의 산출량은 중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3성의 총생산량이 중국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약 11%이다.

각 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령의 경우 과수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과수 총면적과 과일 생산량이 전국 낙엽과수 재배지역에서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령성에는 철광·붕소·마그네사이트·금강석·스테아타이트·옥석 등이 풍부하여 광물의 매장량이 중국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요하(遼河)의 유전은 중국 3대 석유가스 유전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중국에서 각각 15%와 10%를 차지한다. 요령성의 어업자원은 매우 풍부하고 해수 양식면적은 전국 2위 규모이다. 길림성은 중국 6대 임야지역 중의 하나이다. 길림성의 석유 매장량은 중국 6위이고, 광물의 매장량은 5위권에 들며, 금의 매장량은 13위이다. 흑룡강성의 경우 경작과 임지(林地) 면적은 중국에서 1위이고, 목초지 면적도 7위이다. 흑룡강성의 개발가능 토지는 4위, 농경지 후보농지는 2위를 차지한다. 또한 흑룡강성의 산림 면적, 산림 비축량과 목재 생산량은 중국에서 가장 많으며, 중국의 중요한 국유 산림지역 및 최대 목재 생산지이다.

만주리는 명칭은 1636년 청 태종이 황제가 되면서 군신들의 권유로 후금국(後金國)을 만주로 개칭한 것을 계기로 순치제(順治帝)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만주의 어의(語義)에 관해서는 산스크리트어인

‘만주사리(曼珠師利, Man-chu-shih-li)’에서 나왔다는 설, 숙신(肅愼, Shu-chen)의 전음(轉音)인 주신(珠申, Chu-shen)에서 나왔다는 설, 만절(滿節)에서 전화되어 만주가 형성되었다는 설, 원래 건주여진족(建州女真族)의 가장 존귀한 칭호였던 만주(滿住)를 청 태조 누르하치가 계승해서 사용한 바가 있었는데, 청 태종이 그 존칭을 만주로 바꾸어 부족 명칭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 만주는 ‘건주(建州)와 같은 소리였는데, 이를 다르게 썼을 뿐이라는 설 등이 있다.

만주라는 명칭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 정권을 건립 하면서 자신을 ‘만주 칸(汗)’이라 하고 1635년 청 태종이 여진인을 만주인(滿洲人)으로 개칭한 후, 점차 부족 명칭에서 지명으로 바뀌어 전해 내려왔다. 즉, 만주라는 명칭은 청나라 초기에 여진족 자신의 부족 명칭이었다가 그들의 거주지 명칭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처음에 요서(遼西)·요동(遼東) 지방을 지칭하였지만 곧 만주 전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청말·민국 초(民國初)에는 만주가 ‘동삼성(東三省, 봉천성·길림성·흑룡강성)’으로 불렸다. 만주 명칭은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중국공산당의 조직명칭(中共滿洲省委員會, 東·西·南·北滿軍區 등)이 말해 주듯, 중화민국 시대까지도 중국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만주 명칭은 사라졌고 대신에 중국 동북지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만주’ 명칭이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뿐만 아니라 “만주는 중국의 온전한 영토가 아니다”라는 주변의 여러 견해를 연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만주라는 지명이 청조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면, 청조 이전에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 무엇이였을까? 그 지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역 명칭에 근접한 것으로는 ‘요동(遼東)’을 들 수 있다. 요동의 지역 개념은 전국(戰國)시대 연(燕)이 요동군(遼東郡)과 요서군(遼西郡)을 설치하면서 출현하였다.

## ❁ 전통사회에서의 요동(만주) – 동아시아 변동의 진원지

과거에 초원과 삼림으로 뒤덮여 있던 요동(만주) 지역은 농경기술이 낮고 위도가 높아 농경이 곤란했고 주거환경 역시 열악했다. 따라서 요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경을 주업으로 하던 한족(漢族)에게 매력적인 삶의 터전으로 비쳐지기보다는 ‘미개한 이민족의 생활공간’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요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족의 통치권 밖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목축업이나 삼림업에 종사하는 민족의 차지가 되었다. 이리하여 요동의 많은 유목(초원)민족은 한족 정권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았고, 때로는 강대한 힘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

요동에서는 진(秦) 이전 시기에는 숙신(肅慎)이, 진·한(秦·漢) 시기에는 부여·고구려·옥저·읍루·오환·선비족이,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공손씨·물길·선비·해·거란·실위가, 수·당(隋·唐) 시기에는 돌궐·말갈족이, 송·원(宋·元) 시기에는 거란족·여진족·몽골족이, 청대에는 만주족이 생활했다. 요동을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은 고구려와 발해를, 선비모용씨는 전연(前燕)·후연(後燕)을, 거란족은 요(遼)를, 여진족은 금(金)을 건국했고, 몽골족은 원(元)을, 만주족은 청(淸)을 건국했다.

특히 고구려의 건국은 동아시아에서 진·한(秦·漢) 중심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구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독자적인 정치·문화 영역을 싹틔우고 보존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 주었다. 고구려의 멸망은 중국 문화가 요동 및 한반도, 일본으로 순조롭게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수·당(隋·唐) 제국의 완성을 앞당겨 주었다. 송대 요와 금의 건국은 한족문화권과 요동을 발판으로 한 유목문화권 사이의 우열(優劣)관계에 변화를 초래했고 유목문화를 중원(中原)에까지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금에 의한 북송(北宋)의 멸망은 유목민족이 한족문화권을 절반 이상 차지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요동을 기반으로 흥기한 유목민족이 더 이상 한족 왕조의 속국이 아니며 한족과는 견줄 수 없는 미개한 민족이 아닐 뿐더러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힘마저 지니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더 나아가 몽골 초원과 일부 요동 지역을 기반으로 흥기한 몽골족의 금·고려·남송(南宋)의 정벌과 유라시아 대륙의 석권은, 동아시아 및 지구상에 일대 격변을 일으켰으며, 동양 유목세력의 강대함을 만천하에 알림과 동시에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켜 동·서양인에게 새로운 세계인식을 가져다 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만주족의 등장과 청의 건국은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융합을 가져와 양 세력의 대결을 약화시켜 동아시아의 상대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청의 조선 정벌(병자호란, 정묘호란)은 조선을 중화제국의 질서 속에 편입시켜 조선의 역동성을 약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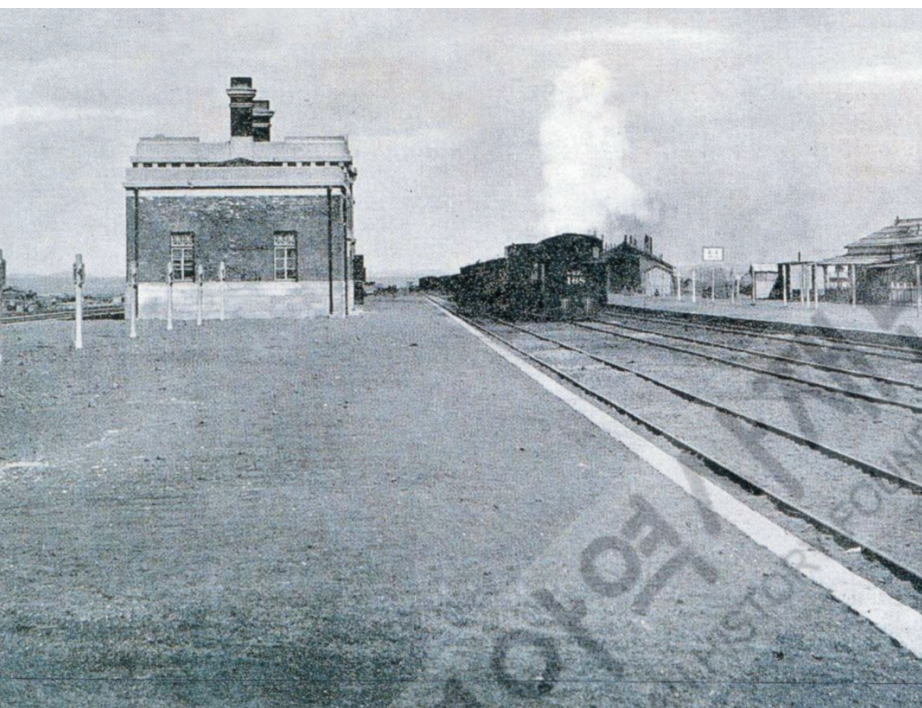
결국 요동에서 흥기한 유목(초원)민족들의 관내(關內, 중국 山海關 이남 지역) 진출과 정복은 다른 지역에서 야기된 변화보다도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 빈도도 잦았다. 이러한 점에서

요동(만주)은 ‘동아시아 변동의 시발점(始發點)’ 혹은 ‘진원지(震源地)’와 같은 작용을 했던 것이다.

## 근현대 시기의 만주 – 동아시아 모순의 교차지

청조를 수립한 만주족은 만주를 ‘조상의 성지’라 하여 봉금(封禁)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으로의 이민족 유입을 금지시켰다. 이리하여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무주공산(無主空山)’처럼 변했다. 이 상황은 부동항(不凍港)을 얻기 위해 남진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제정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아편전쟁(1840) 이후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곤궁에 처한 청조를 겁박해서 아이훈(璦琿)조약과 북경조약을 맺고 각각 흑룡강 이북의 땅(60여만km<sup>2</sup>)과 우수리강(烏蘇里江) 이동의 연해주(약 40만km<sup>2</sup>)를 빼앗았다. 이 시기 중국의 대규모 영토상실은 지금도 중국인들의 회한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청조는 제정 러시아의 남침저지, 관내지역의 사회모순 해소, 재정궁핍의 타개를 위해 1860년대 이후 봉금정책을 완화하고 한족의 만주 이민을 방관·장려했다. 그 결과 한족의 이민이 급증했고 한족의 관습과 문화, 경영방식 등도 만주에 전파되면서 만주족의 한족화(漢族化)를 자극했다. 선진적인 농경기술과 상업능력을 지닌 한족은 토착의 만주족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족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만주 사회의 주도권은 만주족 수중에서 한족 이민자로 넘어갔다. 만주 사회의 한족화는 이민족의 생활공간이었



〈그림 1〉 | 만주국 수립 전 장춘역과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속 증기 기관차의 모습

던 '변지(邊地)'를 한족의 문화권인 '내지(內地)'로 승격시켜 주었다. 변지에서 내지로의 전화는 만주의 '중국화(中國化)' 혹은 만주의 '내적 식민지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만주의 중국화'가 곧바로 '불가침의 영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영토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있을 때만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근대 시기 약육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러시아는 원동(遠東)으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여기에 맞서 청조는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해양세력인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발버

등쳤다. 이 때 만주는 침략과 방어의 관문 역할을 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관동주(關東州)뿐만 아니라, 동청철도(東淸鐵道, 中東路) 이남 지역(즉, 남만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까지 확보했다. 국민당의 북벌(北伐)은 만주에 기반을 둔 봉천 군벌의 협조로 완수되었으며 일본의 중국 침략을 앞당겼다. 일본의 중국 침략(만주사변)은 만주에서 시작되었고, 괴뢰 '만주국'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만주국'의 출현은 만주를 둘러싼 중국·소련·일본 사이의 각축을 일시 잠재운 반면 중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의 기존질서를 흔들어 놓았고, 결국에는 동아시아 사회를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으로 몰아넣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소련군의 대일(對日) 선전포고와 만주 점령은 일제의 패망을 앞당겼다. 그 뒤를 이은 소련군의 북한 진주, 중국군의 6·25전쟁 참여는 모두 만주를 매개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남북분단 및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고착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동아시아 기존질서의 변동은 만주에서 촉발되었고 그 결과로 생겨난 동아시아의 신질서 역시 만주를 매개로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근·현대 만주는 '만주국'의 붕괴, 소련군의 만주 철수로 중국의 온전한 영토가 되기까지 전통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변동의 시발점'과 같은 작용을 해 왔던 것이다.

다른 한편 근·현대 만주는 '동아시아의 모순해소를 위한 돌파구'와도 같았다. 만주는 한족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관내의 과잉인구 및 경지부족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유희유 역할을 했으며,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이어주는 접점이었다. 만주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지였다. 만주는 일본의 대륙진출 교두보로서 제국주의 침략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일본 본토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실험대상의 땅'이기도 했다. 또

한 만주는 자국에 기반이 없는 일본인에게는 ‘폐쇄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 혹은 ‘유사망명공간(類似亡命空間)’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만주는 한반도의 과잉인구 배출구로서 모순을 완화시켜 주었고 한반도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조선의 항일분자에게는 정치적 망명지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기지였다. 만주는 유테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도망쳐온 이슬람족(回族), 10월혁명 후 소련에서 탄압받다가 도망쳐온 백계(白系) 러시아인들에게도 생활근거지였으며 ‘구원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만주는 동아시아(부분적으로는 유라시아)의 모순을 해소시켜 주는 ‘돌파구’였고 새로운 삶의 ‘안식처’였으며 동아시아 주변민족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킨 ‘동아시아 문화의 매개지역’이기도 했다. 반면에 만주는 동아시아의 기존 모순에다가 주변민족의 집결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모순까지 중첩되면서 ‘동아시아 모순의 교차지’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 민족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만주는 물리적 충돌의 ‘각축장’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동아시아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그 때문에 만주는 중국인에게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일 수밖에 없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만주가 더 이상 ‘동아시아 변동의 진원지’로 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중국의 ‘만주 전략’인 셈이다.

## 만주와 한반도

그렇다면 만주는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만주

(요동)는 고조선·고구려·발해의 고토(故土)이자 우리 조상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발해가 멸망한 이후 한국 왕조의 통치권역이 만주까지 확장된 적이 없고 만주에 한민족의 왕조가 건설된 적이 없다. 그렇다고 만주가 지정학적·문화적으로 한반도와 무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정학적으로 만주는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 주는 가교(架橋) 혹은 대륙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이기도 했다. 때로 만주는 대륙세력과 반도(혹은 해양)세력 사이의 충돌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지대이기도 했다. 반면에 선비족의 모용씨가 고구려를, 거란족·여진족·몽골족이 고려를, 만주족이 조선을 침략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는 한반도에 끊임없이 전운(戰雲)을 몰고 오는 '화근(禍根)의 온상'이자 '시련의 원천'이었다. 문화적으로 만주는 대륙의 선진문화를 한반도로 전파시켜 주는 매개지역으로서 한반도의 문화수준을 높여 주는 문화의 전도사 기능도 했다.

만주가 한민족의 역사 범주로 다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발해 멸망 이후 1천여 년 만인 근대였다. 즉,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를 계기로 만주는 우리 역사의 범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 시기 조선인의 월경(越境) 및 이민은 청조의 만주 개간 및 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었고 조선의 사회모순을 완화시켜 주었다. 반면에 그것은 조(朝)·청(淸) 간의 외교문제를 야기했고 양국 간의 국경선 획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적어도 일본의 조선 강점 이전까지 조선인의 만주 월경과 이주는 조선과 청조 사이의 문제였고 이주 조선인과 중국인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인 이주민을 대륙침략을 위한 침병으로 활용하면서 조선인 이민을 둘러싼 조·중 양 민족의 관계는 매우 복잡해졌다. 즉, 일본 식민당국은 조

선인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선인 보호’를 명목으로 만주 침략을 시도했다. 그 결과 조선인 이민자는 중국인에게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앞잡이’로 비쳐지기 시작했고, 중국인으로부터 미움과 경멸,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일본인 역시 괴뢰 ‘만주국’을 수립한 뒤 조선인 이민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그들을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시기 재만(在滿) 조선인은 일본본토·조선·만주국을 아우르는 일본제국(帝國)의 모순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재만 조



〈그림 2〉 | 만주국 지도

선인은 비록 ‘일본 신민(臣民)’으로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치외법권을 누리기도 했지만, 중·일 양 민족의 틈바구니에 끼여 서러운 삶을 꾸려나갔다. 비록 만주는 항일근거지였고, 일부 조선인에게는 꿈을 실현시켜 준 안식처였지만, 대다수의 재만 조선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주고 있었다. 만주에서 일부 조선인이 중국인과 더불어 항일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인에게 빌붙어 살고 있다는 재만(在滿) 조선인 내면의 자괴감을 털어 줄 수 있던 유일한 위안거리이자 자랑거리였다.

한편,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재만 조선인을 중요했던 중국인들, 특히 국민당 계열의 사람들 중에는 조선인이나 조선 마을을 습격하여 살해·폭행·강간·약탈 등을 자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와중에 1944년 7월 당시 230만 명이었던 재만 조선인 가운데 80여만 명이 귀국하였다.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한 뒤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은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이 되었다. 그들은 6·25전쟁에 참여하여 북한 정권의 존속에 일익을 담당했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부정적 역할도 했다. 그들은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을 공유하면서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반(反)우파투쟁(1958)과 문화대혁명 때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에 기초한 민족단결과 ‘한족화(漢族化)’를 강요당하면서 갖가지 고초를 겪었다. 연변(延邊)에서만 2천여 명이 사망했고 3천여 명이 불구자가 되었으며, 수만 명이 북한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비록 조선족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한과는 무관한 존재였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혈맹관계를 돈독히 해 주는 윤희유 역할을 했다. 조선족은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수십만

명 가량 남한에 체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남한의 사회상이나 문화를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 전파시켜 조선족과 남한을 엮어 주고 있다. 최근에 조선족은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면서 남한 사람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국적회복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분명 조선족은 문화적·경제적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연계시켜 주는 인적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반(半)한국인’으로 변해 가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선족의 ‘반한국인화(半韓國人化)’ 혹은 남한과의 밀착상황은 조선족을 ‘확고부동한 중국 민족(혹은 중화민족)’으로 만들어 새로운 소수민족 문제(즉, 조선족 문제)의 파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게다가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즉, 남북통일)라도 생기면 코리아안드림을 꿈꾸던 대규모의 조선족은 한반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대로 대규모의 북한 사람들(지도부를 포함해서)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만주로 도피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적 관련성을 단절시켜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동북지구의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중국 정부를 경악시킬 것이다.

결국 중국의 동북공정은 만주와 한반도를 단절시켜 상술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만주의 사회안정을 꾀하려는 중국 정부의 고뇌의 산물이다. 이것은 오늘날 중국에서 만주 명칭 대신 ‘중국 동북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만주가 ‘중국의 확고부동한 동북지구’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족의 ‘한국인화’와 한반도의 정세 변화로 불거질 수 있는 ‘조선족 문제’를 떠올리면, 만주는 여전히 ‘동아시아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만주는 한민족이 대륙으로 웅비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조선족은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지렛대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족을 '가난한 중국인'으로 박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귀중한 한민족'으로 포용할 것인지가 분명해진다.



# 만주라는 이름에 대하여

윤영인 | 고구려연구재단 |

**만** 주는 17세기 중원, 몽골, 티베트, 신강 등을 정복하고 전근대 세계사의 대제국인 청나라를 세운 민족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만주’라는 용어는 1613년 『구만주당(舊滿洲堂)』에 처음 보이며 1635년에 홍타이지(청 태종)가 기존의 여진을 대신하여 공식 이름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주족에는 여진인 외에도 한인, 몽골인, 그리고 조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만주라는 이름의 의미와 근원에 대한 정확한 문헌적 근거는 아직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만주라는 음과 한자표기의 뜻을 통해서 해석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학자들 간에 견해가 분분하다. 만주어로 용맹하다는 뜻의 ‘망가(mangga)’, 혹은 긴 화살을 의미하는 ‘마잔(majan)’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며 통구스어로 아무르(Amur) 강을 가리키는 ‘맘구(Mamgu)’ 혹은 ‘망구(mangu)’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또 청

황실의 수호신이자 청 황제의 화신(化身)으로 인식되던 문수(Manjusri) 보살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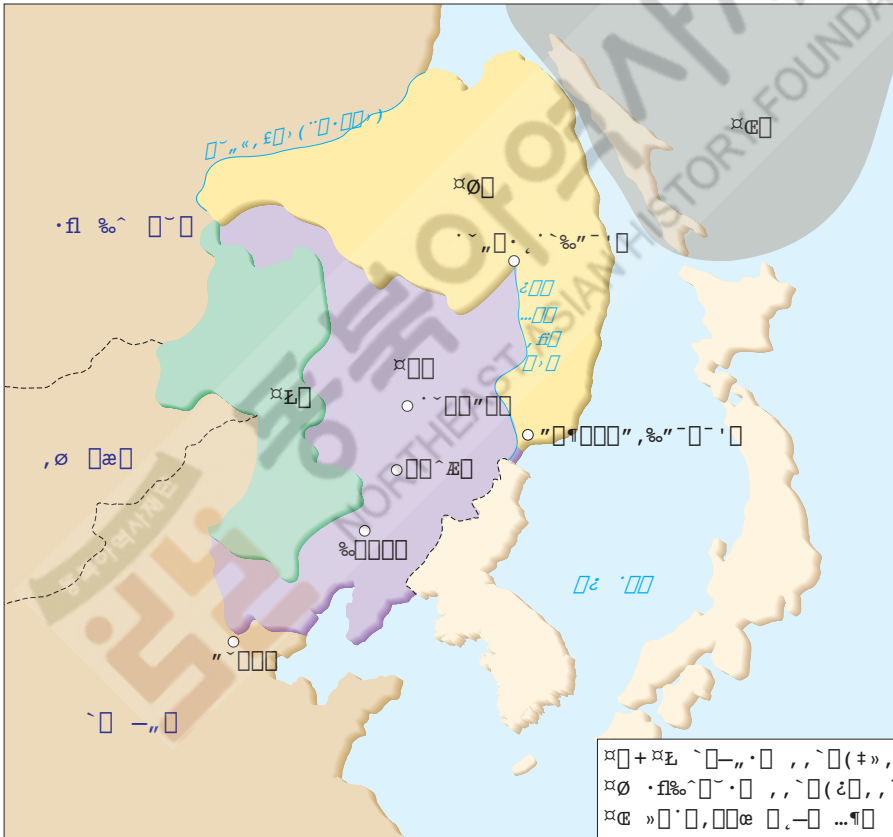
심지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설화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여진의 추장이 한족과 싸우다 패하여 도망치다가 돼지우리에 숨었는데 한족 병사가 그 우리를 수색하고는 돼지만 있다는 뜻으로 ‘만저(滿猪)’라고 외쳤다고 한다. 여기서 만주(滿洲, mǎnzhōu)와 만저(滿猪, mǎnzhū)의 한어 발음이 흡사한데, 당시 그 뜻을 알지 못한 추장이 그것을 부족 이름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또 오랑캐의 두목이라는 뜻의 만주(蠻主, mánzǔ), 오랑캐 족속의 뜻인 만족(滿族, mǎnzú)이라는 단어와 연관 짓기도 하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한족들의 북방민족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과 편견을 보여 주고 있다.

원래 하나의 부족(민족) 이름이었던 만주는 점차 지명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처음 만주가 지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일본 고지도이며 그 후 서구의 여러 지도에 만주가 지명으로 등장한다. 어쩌면 ‘지역’ 혹은 ‘대륙’의 뜻을 가진 ‘주(洲)’라는 한자 때문에 만주가 지명으로 잘못 인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다.

만주는 역사적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요, 금, 청 등 고대의 한국과 정복왕조들이 지배했던 동북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만주는 서로 몽골국, 북으로 시베리아, 서남으로 중원, 동남으로는 한국과 접해 있는데, 넓은 의미의 만주 범위는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 영토에 걸쳐 있다.

만주의 지역적 범위는 연구자의 관점과 정의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길림, 흑룡강, 요령성, 즉 동북(東北)만을 뜻하지만, ② 여기에 내몽골자치구의 동부지역과 승덕(承德)

부근 하북(河北)성 북쪽 지역(옛 열하(熱河)에 속한 곳)을 역사적 만주의 영역에 넣기도 한다. ①과 ②를 모두 더한 지역적 경계는 1932년에서 1945년까지 존재하였던 만주국의 영토와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 다시 ③ 소위 외만주 혹은 러시아령 만주를 더하기도 하는데, 아무르 강(흑룡강)과 우수리 강에서 스타노보이 산맥 그리고 동해(소위 일본해)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곳은 1689의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원래 청제국의 만주 지역 일부이었으나 1858년 아이훈 조약에 의해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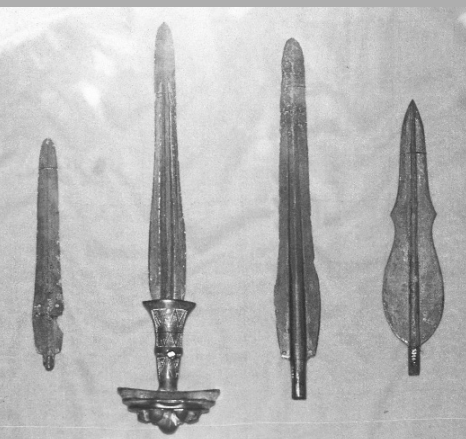
에 할양된 곳이다. ④ 그리고 사할린과 그 인근 섬들도 만주의 영역에 넣기도 하는데, 사할린 섬은 여러 고지도에 만주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 역사적 개념의 만주 영역에 이 지역과 역사전통 및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한반도, 쿠릴 열도, 그리고 일본 열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현재 만주리는 명칭이 20세기 러시아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도움으로 성립된 만주국을 연상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북(東北)'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만주국 앞에도 거의 빠짐없이 가짜라는 의미의 '위(僞)자'를 붙인다. 만주라는 용어를 기피하려는 경향은 심지어 만주족이라는 민족 이름도 줄여서 만족(滿族)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洲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 제 1 부

# 만주와 우리 역사

- 동북아시아의 청동기문화와 요령 그리고 한반도
-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 한민족의 웅비, 고구려
- 해동성국, 발해는 어떤 국가인가

# 동북아시아의 청동기문화와 요령 그리고 한반도

오강원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p** 근 ‘동북아시아’라는 용어처럼 우리들의 일상어에서 흔히 쓰이는 말도 드물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동북아시아와 다자 협력’, ‘동북아시아 전략’, ‘동북아시아 허브’, ‘동북아시아의 문화’, ‘동북아시아의 민족’,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와 같이 정치·군사·사회·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 동북아시아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동북아시아가 역사·문화·사회적인 면은 차지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또 동북아시아가 있다면, 동남아시아, 서북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시아와 남아시아도 있을 것인데, 이들 지역 명칭도 그저 막연하게 쓰이고 있을 뿐 그 실체가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다.

게다가 아시아라는 말조차 사실은 역사·문화·사회·자연지리

적으로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사성이 강한 대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라는 명칭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어졌는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분분하지만,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살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 건너 아나톨리아 고원 일대를 부르던 명칭에서 기원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튼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 속의 요령(遼寧)과 한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의 공간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서, 남·북의 상대 방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는 좁게는 동·서 투르크스탄(신강성,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만을 의미하나, 넓게는 이 밖에 카자흐스탄, 중가르, 티베트, 아프가니스탄 북부, 이란 동부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넓은 범위의 중앙아시아를 기준으로 할 때, 동북아시아는 엄밀하게 황하 양안과 그 북쪽의 중국, 몽고, 러시아 연방의 연해주·하바로프스크·시할린스크, 한국, 일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면, 동남아시아는 넓게 보아 양자강 남쪽으로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타이, 미얀마 등이 되고, 북아시아는 러시아 연방의 서시베리아 저지로부터 추코츠키 반도까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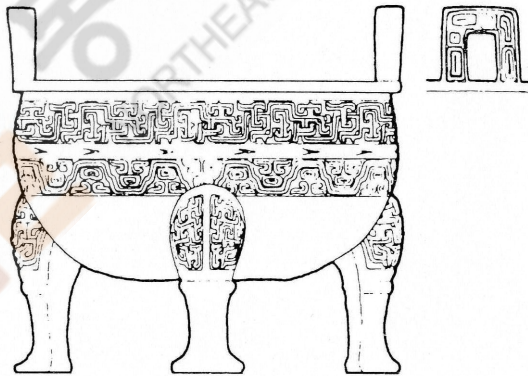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의 공간성이 위와 같으므로, 이제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상의 요령과 한반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상황이 어떠하였기에 만주와 한반도, 심지어 일본의 청동기문화를 말할 때 언제나 동북아시아라는

명칭이 붙어 다니게 되는 것일까? 또 한국 민족문화의 형성과 요령은 어떠한 관계에 있기에 항상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원'이라는 중국 내지의 청동기문화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보더라도 중국 내지가 주변 지역과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독특한 문화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중원 지역이란 하남성, 산서성, 섬서성을 말하는데, 이 일대에서는 고대 중국 문화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선사문화가 단절됨 없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즉, 전기 신석기시대(기원전 7000~5000)의 배리강(裴李崗)과 노관대(老官臺)유형, 후기 신석기시대(기원전 5000~3000)의 양소문화(仰韶文化), 신석기시대 말기 또는 동석병용시대(기원전 3000~2200)의 용산문화(龍山文化), 전기 청동기시대(기원전 2200~1500)의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 중기 청동기시대(기원전 1500~1100)의 상문화(이리강



〈그림 1〉 | 중국의 청동 예기(갑숙성 예헌(禮獻) 원정산(圓頂山), 춘추 진(秦))

(二里崗 문화), 후기 청동기시대(기원전 1100~249)의 주문화가 중원 지역의 전형적인 문화이다.

이들 문화는 금속기의 사용 여부를 떠나서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강한 문화적 동질성을 보이는데, 살아서는 집약적이면서도 방어성이 강한 환호 취락에 살고, 죽어서는 때에 따라 목관곽을 갖춘 토광묘를 쓰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끈새끼문이 장식된 세발 달린 그릇을 쓰고 묻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도 단일성이 강하여 많은 혼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인의 기본 줄기를 이루고 있다.

아무튼 중원 지역의 선사문화는 신석기시대로부터 중간의 동석병용시대를 거쳐 기원전 2200년 무렵 청동기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 중국 청동기문화의 전형은 아무래도 상나라와 주나라의 청동기문화이다. 상나라와 주나라 때에는 앞 시대의 문화적 속성에 추가하여 왕의 정치권력 행사와 관련된 공궐, 중국식 예제와 관련된 종묘, 청동예기, 청동악기, 정보 전달과 관련된 문자, 거주형태와 관련된 도시가 새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유물 요소가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중국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유물 복합은 중원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장성 연선,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연안, 동쪽으로는 동중국해 연안, 서쪽으로는 티베트 고원 연선과 위하(渭河)·경하(涇河) 상류, 동북쪽으로는 화북 평원의 말단부에 있는 북경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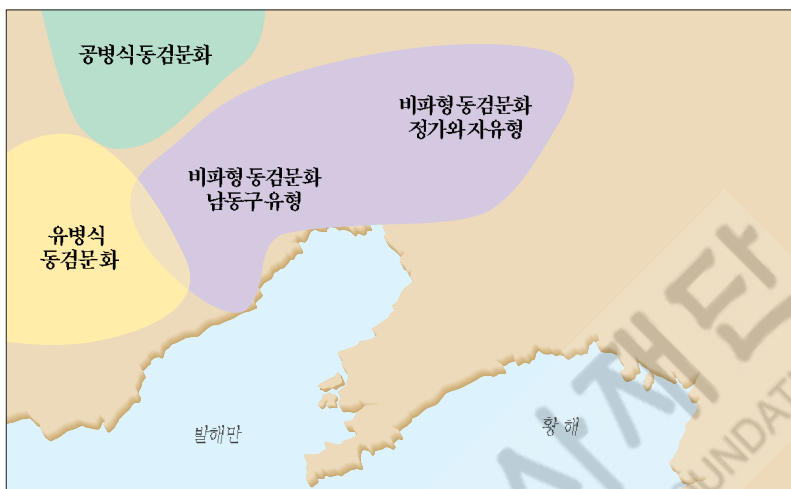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내외 몽고와 중국 동북지역 등은 중국 문화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북방문화권에 속하게 된다. 실제로 이 지역들의 청

동기문화는 중국 청동기문화의 일부 개별적인 요소가 정치·군사적인 관계와 교역 등으로 간간히 복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중국문화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화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청동기시대 중국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마을과 생활방식으로 살았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장성 북쪽의 북방문화권은 극단적인 대비, 즉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체질과 형질 인류학적으로 중국 사람과 같은가 다른가, 중국 사람과 생활방식이 같은가 다른가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인 면에서 같은 문화권으로 분류될 뿐, 실제로는 자연지리, 사회경제, 문화, 민족적으로 많은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북방 또한 몇 개의 문화권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북방문화권을 가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산맥과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지리, 특정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둘러싸고 형성된 생태환경,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거주형태, 일상 용기와 금속기, 무덤의 구조와 부장 양상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북방문화권에서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청동단검이다. 물론 무덤도 강한 문화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이 너무 세분된다는 점에서, 중범위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청동단검을 기준으로 한 북방문화권의 문화 지형은 어떻게 짜여질까? 크게 볼 때 북경 동북쪽 산간지역, 즉 칠로도(七老圖) 산맥과 노로아호(努魯兒虎) 산맥에 의해 형성된 Y자형 분수령을 경계로, Y자형의 서쪽 지대(하북성 북부, 섬서 북부, 산서 북부, 내몽고 중부)에서는 유병식동검(有柄式銅劍)이라 부르는 단검이, 동쪽 지대(요령, 길림 중부, 한반도)에서는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이, 중간 지대(내몽고 동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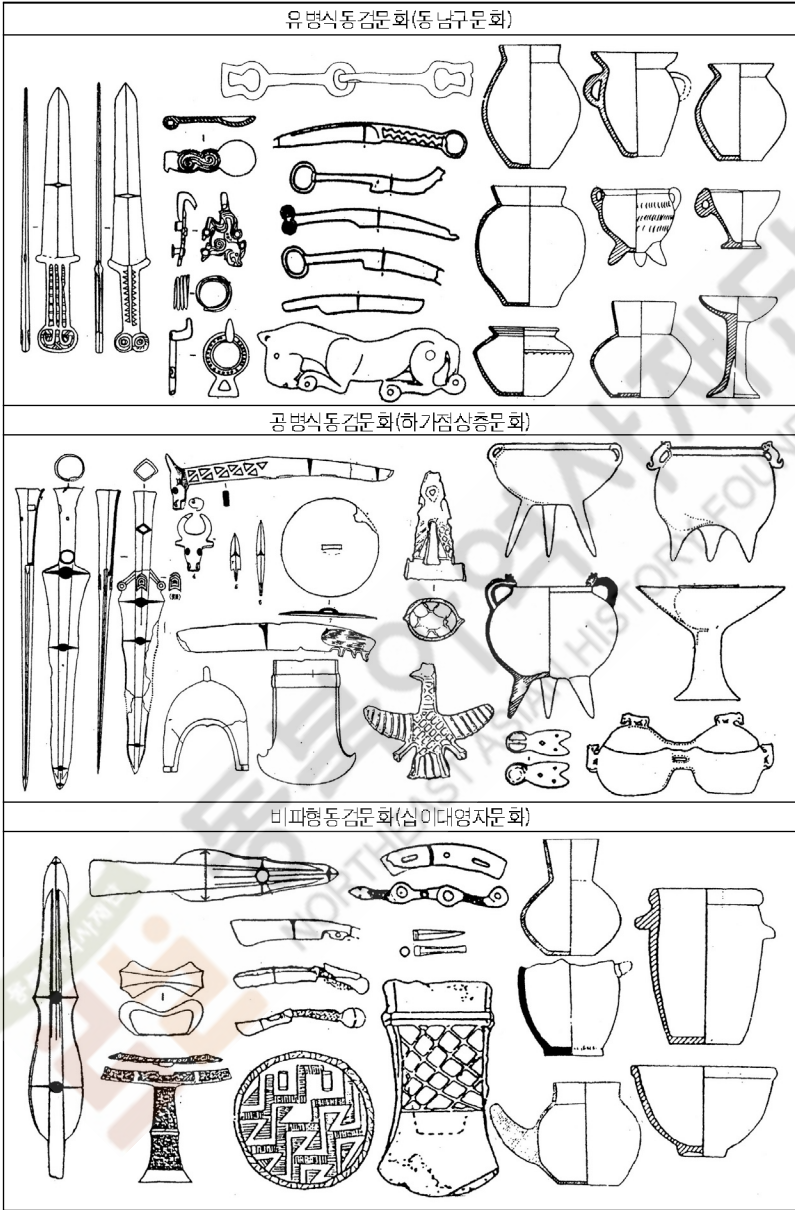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동북지역의 세 청동 단검문화(기원전 8~5세기)

부)에서는 칼자루 끝의 속이 비어 있는 공병식동검(鏑柄式銅劍)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중국 문화와 지역에 대비된 개념으로서의 중국 북방문화권은 청동단검을 기준으로 유병식동검문화권, 비파형동검문화권, 공병식동검문화권의 세 문화권으로 크게 갈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공병식동검문화권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유병식동검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이 문화의 유적들에 주변 문화의 청동단검이 적지 않게 공반한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유병식동검문화권과 공병식동검문화권은 전반적으로 목축문화권에 속하는 반면, 비파형동검문화권은 소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경문화권에 속



〈그림 3〉 세 청동 단검 문화의 유물 비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들 문화 간의 상대적인 유사성과 차별성은 청동단검을 제작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앞의 두 문화의 청동단검은 손잡이와 검날이 붙어 있는 반면, 비파형동검은 따로 제작하여



〈그림 4〉 비파형동검(조양 십이대영자)

조립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과 가축을 무덤에 꺼묻는 순생 습속에서도 드러난다. 즉, 앞의 두 문화에서는 외곽지의 문양이 없는 청동거울(단뉴무문경(短鄒無文鏡))이 유행한 반면, 비파형동검문화권에서는 여러 꼭지의 기하학문이 장식된 청동거울(다뉴기하학문경(多鄒幾何學文鏡))이 유행하였다. 또 앞의 두 문화권에서는 양, 소, 말, 개 등을 무덤에 꺼묻거나 또는 청동기 등에 시문한 반면, 비파형동검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거나 아예 유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령, 길림 중부, 한반도를 북방문화권 중에서도 별개의 문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독특한 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다.



〈그림 5〉 | 정가와자형호(심양 정가와자)



〈그림 6〉 서단신문화의 각종 토기

그런데 비파형동검문화권은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 요령 지역만을 보더라도 그 내부에 구조, 형태, 기술성, 시공간성, 문화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물 요소들이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동 남단 지역의 다인 화장과 지상 적석부와 군집 묘실로 상징되는 적석묘는 요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단인장과 단독 묘실로 상징되는 석곽묘 등과, 흑색 마연 및 회전대 빗기로 상징되는 심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정가와자형호는 요동 지역의 적갈색 무문토기와 전혀 다른 기술성과 지역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유물 양상은 요령만 해도 여러 개의 지역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비파형동검문화권을 단순히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관련 청동기가 유행하였다는 것만으로 동질적인 문화 단위로 묶을 것이 아니라, 무덤과 토기 등 비파형동검 이외의 유물 요소

를 함께 고려하여 다시 나눌 필요가 있는데, 비파형동검문화권 내의 지역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석관묘와 원대자식토기 및 동령강식토기 등이 조합하는 십이대영자유형(요서), 석관묘와 미송리형호 등이 조합하는 이도하자유형(요동 북부), 지식묘와 쌍방형토기 등이 조합하는 쌍방유형, 직석묘와 강상형토기 등이 조합하는 강상유형, 대이수구식토기 등이 조합하는 대이수구유형, 석관묘와 서단산형토기 등이 조합하는 서단산유형, 지식묘와 팽이형토기 등이 조합하는 석탄리유형 등이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이들 유형이 비파형동검문화권으로 묶여진다 뿐이지, 실상은 일상생활과 장속(葬俗)에서 많은 다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일대의 청동기문화를 단순히 청동기의 양식적인 유사성만으로 증범위 분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의 관계성을 보다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령 등지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의 시간적인 틀을 짜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유물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유물로는 T자형 청동제 검손잡이, 청동거울, 후기 북방계 유물군, 전국 연나라 유물 등이 있다. 그 중 청동검병은 기술적인 혁신을, 청동거울 특히 단뉴무문경은 이러한 유형의 거울이 공병식동검문화 남산근기(南山根期)의 전형유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후기 북방계 유물군과 전국 연나라 유물은 시대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시간적 틀을 짜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 유물들을 근거로 할 때, 요령 등지의 비파형동검기는 비파형동검 외에 청동기 유물 조합이 아직 미분화된 1단계(기원전 9세기 전반~중반), 청동제 검손잡이와 비파형동모 등이 공반하지 않는 2단계(기원

전 9세기 중반~8세기 중반), 청동제 검손잡이,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를 비롯한 관련 청동기 유물군이 공반하는 3단계(기원전 8세기 중후반~7세기), 후기 북방계 유물군이 공반하는 4단계(기원전 6~5세기), 중세형동검, 다뉴조세문경, 협봉동모 등과 전국 연나라 유물이 공반하는 5



〈그림 7〉 | 서북한 세형동검문화 유적 출토 청동기

단계(기원전 4~3세기)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관련 청동기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양한 공간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1단계에는 요서 서북부에서만, 2단계에는 요서에서만, 3단계에는 요령과 길림 중부 및 한반도의 일부 지점에서만, 4~5단계에는 비파형동검문화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파형동검과 그 후계 형식인 중세형동검이 발견된다. 따라서 비파형동검 등이 요서에서 발생하여 요동과 길림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파형동검문화권의 출발선과 원형이 요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점이다. 요서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 계보가 한반도가 아닌 요동 또는 길림으로 흘러갔다가 그 후 주변 문화와 복합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주류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파형동검문화는 요동의 중세형동검문화를 거쳐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은 요서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 청동기(비파형동검, T자형 청동제 검손잡이, 검병두식, 비파형동모, 다뉴기하학문경, 선형동부)가 요동 중세형동검문화 및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와 연속적인 변화상을 보이며 모두 대응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비파형동검의 조립성에서도 확인되는데, 비파형동검과 중세형동검 단계의 요령 지역 및 세형동검 단계의 한반도 지역의 경우 검병두식·T자형 청동제 검손잡이·검신을 조립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반면, 비파형동검과 중세형동검 단계의 요령 이외 지역

및 세형동검 단계의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유지되지 않았을 뿐더러 손잡이와 검신 또한 다른 동검 양식이 많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의 기원이 직접적으로는 요동, 간접적으로는 요서에까지 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굳이 청동기를 놓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의 주요한 유물 요소인 돌덧널무덤, 움무덤, 흑색 마연 장경호(정가와자형호), 점토 대토기 등이 중세형동검 단계(기원전 4~3세기)의 요동 지역, 특히 심양 일대의 정가와자유형과 대련 일대의 윤가촌유형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편, 비파형동검 단계의 요동 남부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하나의 문화적 양상을 보이며 유행하였던 고인돌문화는, 비파형동검·세형동검문화가 각지로 확산되면서, 때로는 동검문화에 흡수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검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지역 형식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는데, 한반도의 경우 넓게 보아 동검문화의 하위문화이자 토착문화로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 청동기문화와 관련하여 비파형동검문화권 전체를 주변의 다른 동검문화와 차별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광역의 동질적인 문화 단위로, 요령의 비파형동검문화를 한국 청동기문화의 원형이자 출발점으로, 요동의 중세형동검문화를 한국 세형동검문화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문화의 주인공이 한국사의 첫 출발점인 고조선과 주변 소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는 물론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송호정 | 한국교원대학교 |

滿洲

## ✿ 고조선의 사공간적 범주

**고** 조선은 우리 역사상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에서 형성된 가장 이른 시기의 국가였다.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는 황하 유역의 북중국 청동기문화나 유목민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문화와 다른 특징과 개성을 지녔다. 때문에 고조선은 13세기 말 『삼국유사』에서 우리 민족사의 출발로서 서술된 이래 그 뒤의 모든 사서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함과 동원성(同源性)의 상징으로 서술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면서 동포 의식과 결합하여 단군이 민족의 상징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한국인의 의식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

고조선은 당시 부여·동옥저·삼한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와 다

양한 문화적 교류와 영향 관계에 있었고, 멸망 후에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국가형성과 정치적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앞선 사회였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를 형성한 고조선사에 대한 해명은 매우 중요하다. 고조선에서 남북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국가 발전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한국 고대사의 체계적인 서술은 완성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일반 사람들은 ‘고조선사’라 하면 대부분 단군신화로 표현된 단군조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단군조선사는 기본적으로 단군신화로 표현된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역사상이다. 여기에는 신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군신화를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바라보아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개 단군왕검이 세운 단군조선(檀君朝鮮)과 이후의 기자조선(箕子朝鮮), 그리고 위만(衛滿)이 세운 위만조선(衛滿朝鮮)이라는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한다. 바꾸어 말하면 고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가 중심이 되어 개창한 조선(朝鮮) 왕조와 대비되어 그 이전에 ‘조선(朝鮮)’의 칭호를 쓴 나라에 대한 역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선진(先秦)시대 문헌인 『관자(管子)』에 따르면 고조선이 등장하는 시기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청동기문화가 개화하는 기원전 8~7세기 이후이다. 그렇다면 이 때부터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는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보낸 군대에 의해 멸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고조선이란 바로 남만주,

즉 중국 동북지방에서 청동기문화가 개화하여 발전하기 시작하는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 한나라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공간적으로 고조선 사람들은 남만주의 요동 일대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살았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한 곳이다. 이곳의 주민은 주로 예족과 맥족으로, 언어와 풍속이 서로 비슷했고 일찍부터 한반도 서북부와 남만주 발해만 일대에 퍼져 살았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조그마한 정치집단이 군데군데 생겨나 그 중 우세한 세력을 중심으로 다른 집단이 정복당하거나 통합되었다. 이러한 고조선사의 시기와 범주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고조선사 연구는 계속해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 초기 고조선사와 비파형동검문화

일연(一然)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세운 왕검조선(王儉朝鮮)을 말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일연의 이러한 서술과 단군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신화 형태로 전하고 있는 만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고조선사의 첫 단계로 인식해 왔던 단군신화나 단군조선의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초기 국가가 출현하는 단계의 역사적 경험을 신화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조선의 초기 단계인 소위 단군조선은 고조선의 국가권력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지배층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화 속의 역사이며, 그것이 실재했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단군 이

야기를 일정한 지배권력이 형성된 정치체로서 설명하기에는 역사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단군조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남만주 지역에서 개화한 비파형동검문화와 연관해서 보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단군조선 이후에 등장하는 기자조선의 역사는 초기 고조선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시기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다. 기자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 중국 요령성 지역에 분포하는 비파형동검문화를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과 담당 주민집단을 고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헌 기록상에 보이는 기자(箕子)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11세



〈그림 1〉 | 중국 동부지방 출토 비파형단검

기경이다. 그러나 기자조선 이야기는 한대(漢代) 이후 『상서대전(尙書大典)』에 처음 나온다. 그리고 남만주 요서(遼西) 지역 객좌현(喀左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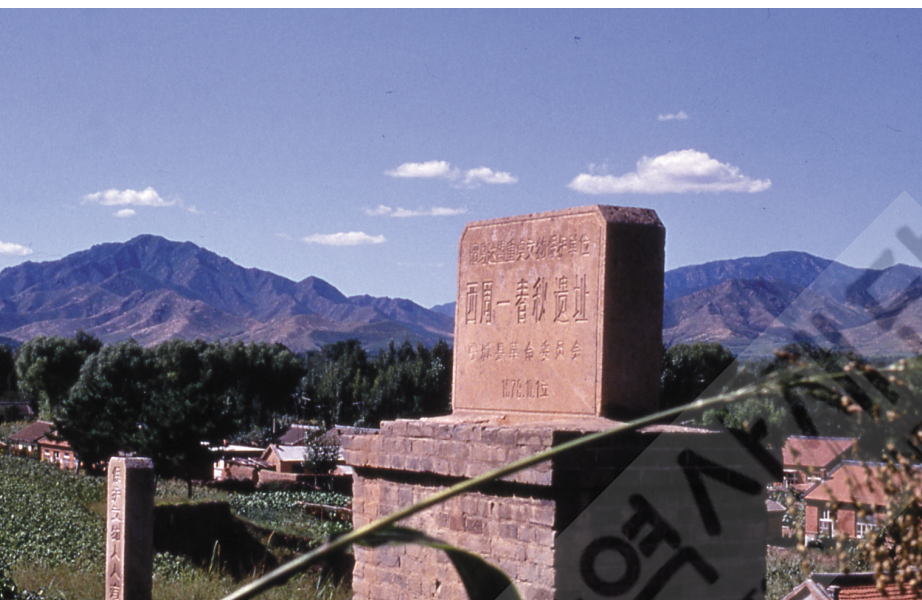
일대에 집중하는 은주(殷周) 시기 청동예기(靑銅禮器)는 당시 은나라 유민들이 남긴 것인데, 요동 지역이나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선진(先秦)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기자조선의 국가였다는 요하서쪽의 고죽국(孤竹國)이나 기국(箕國) 등은 모두 중국 연(燕)의 관할하에 있던 상족(商族)의 후예들이 거주하였던 국가였고, 그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산융(山戎)’ 등 유목민족 계통의 소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대 이후 문헌 기록에 나오는 ‘기자 동래설’은 문명의 전수자로서 기자를 강조하고자 하는 한나라 역사가의 관념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요서 지역에서 나온 ‘기후(箕侯)’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청동기는 산융(山戎) 등 융적 사회에 상나라 유민들이 살았다는 증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 초기 단계의 사회 성격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조선도 처음에는 일정 지역에 위치한 부족집단에서 성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은 주변 집단들에게 지역이나 종족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나라 이름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8~7세기 무렵이 되면 고조선이 역사상에 등장하게 된다.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일을 기록한 『관자(管子)』나 『전국책(戰國策)』 등에는 고조선 주민과 관련하여 ‘요동(遼東)’과 ‘조선(朝鮮)’이 따로 구분되어 나온다. 어떤 문헌에는 요동 지역의 주민집단은 ‘예맥(濊貊)’이라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요동 지역과 고조선, 예맥족의 연관성은 매우 깊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기는 대개 기원전 8~7세기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래 만주 지방 고고학 자료에 대한 논의는 이른바 ‘비파형(요령



〈그림 3〉 | 요서 영성현 남산군 유적과 칠로도 산맥



〈그림 4〉 | 남산군 석판묘 출토 청동 단검

식) 동검문화에 대한 해석 여부를 둘러싼 것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고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역시 요서(遼西) 지역 청동기문화의 담당자와 대릉하(大凌河) 동쪽에서 요동 지역에 분포하는 청동단검문화를 과연 어느 주민집단의 문화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

여러 형태의 청동단검이 주로 사용되던 시기는 기원전 8~7세기 이후이므로 그 주민집단을 단군조선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등장한 기자조선 사람들이 남긴 유물인지, 아니면 청동기시대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유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에 기원전 8~7세기 단계에 요령성 일대에서 활약한 군소 종족 가운데 여러 오랑캐족과 고조선이 주목된다.

선진시대 문헌에는 요서 지역에서 기원전 8~7세기경에 활동한 종족으로 산융(山戎)·동호족(東胡族)이 등장한다. 그 동쪽 지역에 예맥(濊貊)·조선(朝鮮)이 있었음이 보인다. 그런데 비파형동검은 산융족이 활동한 요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비파형동검의 기원지가 요서 지역



<그림 5> | 미송리식 토기(1·2)와 평이형토기(3·4)



〈그림 6〉 | 요동 지역 탁자식 고인돌(해성시 석목성)

인지 요동 지역인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주된 사용 지역은 요서 지역이다. 따라서 남만주 일대에서 비파형동검문화를 주도한 민족은 요서 지역에 거주한 ‘산융’ 등 여러 ‘오랑캐족(戎狄)’이라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고조선은 초기에는 여러 종족 집단을 강력하게 통치하지 못했지만 기원전 4~3세기가 되면 중국의 연나라와 겨룰 정도로 나라의 힘이 커진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고조선 사람들을 깎아내려 오랑캐라고 하였다. 더럽고 거친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예맥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고조선 사람을 ‘교만하고 사납다’고 할 정도였다. 따라서 고조선사와 관련해 남만주의 요동 지역과 예맥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당시 고조선 사람들의 활동 모습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그들이 남긴 생활 흔적만을 추적할 수 있을 뿐이다. 요동 지역과 한반도 서북지방에 살았던 예맥족과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대표적 문화로는 비파형동검 외에 고인돌(지석묘)과 미송리형 토기가 주목된다. 특히 당시에는 탁자식(북방식) 고인돌이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고 요동 지역에서 서북한 지역에 걸쳐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지역은 요동반도 이남에서 한반도 서북지방에 걸쳐 일정한 범위를 이루고 있어 특정 정치집단의 존재와 연결된다. 이 때 요하 이동에서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정치체로는 고조선 외에 달리 언급할 세력이 없다. 그리고 서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탁자식 고인돌과 팽이형토기문화 역시 요동 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문화와 함께 고조선의 중심 청동기문화로 발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위략』에는 당시 요동 지역에서 성장한 세력을 ‘조선후국(朝鮮侯國)’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왕(王)을 칭’하는 등 교활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요동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주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상당히 강한 지배권력을 수립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 고조선은 기원전 5세기가 되면 중국 세력이 요령 지역에 진출하고 점차 중국의 선진문물을 흡수하면서 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즉, 기원전 5~4세기에는 중국 전국시대 문화 전파 및 주민의 이주 등으로 요령 지역과 한반도 지역에 움무덤과 초기 철기문화라는 새로운 문화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고조선이라는 국가체는 언제 형성되었고, ‘고조선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때 전제해야 될 것은 종전의 인식대로 청동기문화, 즉 비파형동검문화가 고조선 문화의 전부라는 인식

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이다.

고조선이 중국이나 주변 종족집단들에게 하나의 정치체나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철기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사기』 등의 문헌 자료를 보아도 철기문화가 남만주 지역에 전래되기 시작한 기원전 4~3세기 이후에 와서야 관료체제의 모습이나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고조선은 청동기 사회의 발전을 바탕으로 철기를 비롯한 금속문화가 보급되면서 농업생산력이 일층 발전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분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선진 철기문화를 누리던 세력의 압박 등이 이루어지면서 기원전 4~3세기경 점진적으로 중앙 지배권력이 성립하였다.

## ❁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이래 중국 연(燕) 세력이 남만주 지역으로 진출하자 그들이 누리던 선진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중앙 왕실의 지배권력을 다져나갔다. 이제 어느덧 국가 단계로 성장하고, 요동 일대의 예맥족이 거주하던 지역까지 세력권에 포함시켜 연맹 상태의 국가체제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후기 단계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문화로는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및 청동기 등과 달리 움무덤과 세형동검 및 각종 철제 무기들이 있다.

기원전 5~4세기에 이르면 요동 지역에는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움무덤이 등장하는데, 이들 움무덤에는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청동단

검이 출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청동단검들은 벌써 비파형동검의 곡인(曲刃) 형태를 벗어나서 초기 세형동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 초기 세형동검문화를 누리던 지역집단들은 요동과 서북한 일대에서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 성장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요동 지역과 길림성 일대의 문화는 소멸하고 한반도 유형만이 요동 지역의 영향을 받아 보다 새로운 본격적 세형동검문화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요동과 서북한 일대에서 기원전 5~4세기에 광범위한 연맹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를 지나면서는 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가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전의 비파형동검문화도 이른바 세형동검문화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심지는 서북한 청천강 이남 지역에 있었다. 일찍이 청동기시대부터 서북한 지역에서 성장하던 주민 집단들은 요령 지역의 선진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이 세형동검문화를 창조해 낸 것이다. 이 시기에 한반도 서북지방에는 위만으로 대표되는 여러 중국 유이민 세력이 등장하고 서서히 국가체를 이루어 나갔다.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에는 기원전 4세기 당시 ‘조선후국(朝鮮侯國)’이 ‘왕’을 칭하고 연(燕)나라를 공격하려고 한 사실과 일정한 수준의 지배체제를 성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조선후국’의 왕은 주변에 산재한 지역집단의 연맹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만큼 미숙하나마 관료체제를 마련하였다. 이 당시 고조선은 이미 국가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기원전 3세기 이후가 되면 연나라가 동호를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요동 지역 천산산맥 일대까지 장성(長城)을 설치하였다. 이 때 설



〈그림 7〉 | 연학대 장성 주변 출토 외당

치된 장성 근처에는 다량의 외당, 명도전, 철기 등이 발견되는데, 이 유물들은 서북한 지역의 청천강 유역을 경계로 그 이북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 자료의 분포를 통해, 연이 기원전 3세기 초 요서 지역에 위치한 동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에 대해서도 공략을 하여 요동 지역에 존재하던 조선연맹체 지역집단들의 이동을 초래하고 고조선은 청천강(패수)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국가적 성장을 지속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진번’, ‘임둔’, ‘동옥저’ 등 여러 지역집단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던 고조선은 기원전 3~2세기 이래 계속되는 중국의 동진세력과 대립관계가 형성되면서 점차 국왕을 정점으로 전 지역을 포괄하는 지배체제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고대국가 형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북한 지역에는 기원전 4~3세기경부터 평안남도 운성리(雲城里)나 성현리(成峴里)처럼 거대한 읍락을 형성하고 토성까지 축조하는

독자적 지역집단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산리, 반천리, 석산리 등 읍무덤에 세형동검과 청동과(戈)와 철제 도끼 등이 부장되고, 그것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점에서 방증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층 무덤의 집중현상은 기원전 2세기를 지나면서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곽무덤이 조영되면서 보다 강화된다.

고조선은 국가 형성과정에서 족적 유대감이 강한 단위정치체의 대소 족장 세력을 연맹·결속시키면서 국가의 지배신분층으로 편제하였다. ‘상(相)’ 과 ‘장군(將軍)’ 직으로 편제된 이들은 지역기반을 가진 세습귀족을 형성하고 왕 밑에서 귀족회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림 8〉 | 낙랑 토성 성벽

고조선 지배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지역기반을 가진 족장세력들을 중앙 관료직으로 편입하는 중층적 구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통치체제의 모습은 범금팔조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엄격한 추궁과 응보주의(應報主義) 요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 정백동 37호 나무 곽무덤

고조선 후기 단계의 지배체제를 보면, 지방 세력들이 중앙으로 올라와 귀족집단을 형성하고 왕과 협의하여 통치를 함으로써 왕이 초월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대외적인 교류나 제의(祭儀) 등을 통해 지역집단을 통할한다는 점에서 삼국 초기의 지배체제인 부(部) 중심의 정치구조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고대사회의 기본 통치단위였던 ‘부(部)’가 고조선에 존재했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고조선 지배체제가 삼국과 차이가 있었고 그 직전의 단계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 ❁ 고조선의 역사적 경험은 삼국사회로 어떻게 이어졌을까

최초의 국가 경험이 이후 사회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야말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한다는 역사학의 궁극적 과제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일 것이다. 고조선에 뒤이어 등장한 고구려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안에서 성장했고, 압록강 유역의 예맥 집단이 세형동검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다가 고구려 주몽 집단과 연합하여 고구려 사회를 건설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조선의 국가적 경험은 고구려 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쪽의 신라 사회에서도 초기의 사로 6촌들이 고조선 유민이라 자칭한 사실은 고조선의 주민들이 신라 사회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시 공동체 사회의 해체와 국가 형성은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을 일정한 획기(劃期)로 설정하고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관된 논리체계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의 본질적 성격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의 국가 형성도 요동 지방과 서북한 지방에 존재한 여러 소국(小國)들이 중심 소국을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연합체(연맹체)를 이루고 국가로 발전하여갔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당시의 문헌 자료로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동북지방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 유적과 주변 주거지 등 취락집단이나 토성, 나아가 유물들을 함께 분석해야만 당시 사회관계에 대해 더 명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민족의 웅비, 고구려

금경숙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 ✿ 주몽, 졸본지역에 고구려를 세우다

**환** 인은 하천을 따라 형성된 충적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정치문화의 중심지가 될 만한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부여에서 도망해 온 주몽의 무리가 처음으로 자리한 곳이 비류수가라고 하였다. 주몽 일행이 도읍한 곳을 흘승골성 또는 졸본성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은 오녀산성이라고 부른다.

오녀산성은 환인현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8.5km 떨어진 오녀산에 있다. 오녀산은 서남·동북쪽에 약간 낮은 곳이 있기도 하지만, 동남쪽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서·북·동쪽이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되어 있다. 외형상으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로 되어 있어 위용을 갖추고 있으나 산 정상은 평탄하다. 정상은 남북 1,000m, 동서 300m, 둘

레 2,440m의 넓은 평탄지이고 안에는 연못도 있다. 성 안에는 대형 건물터가 있는데, 왕궁터라고 한다. 또 장대가 있고, 연못이 있어 산꼭대기에서도 물이 모자라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기록에 의하면 혼강의 강물이 오녀산 동쪽에서 남쪽으로 굽이쳐 흐르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환인진(桓仁鎭)을 감싸안았고, 거기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흘렀다고 한다. 그러나 환인댐을 만드느라 혼강 유역이 수몰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고령묘자



〈그림 1〉 | 고구려 첫 번째 도읍인 졸본의 오녀산생모는 이로 하여금 웅혼함을 느끼게 한다

(高力墓子) 고분군이다.

환인담이 생기기 전 이 일대에는 고구려 무덤 100여 기가 몇 줄로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이곳 정상부에는 돌무지무덤, 산허리에는 계단식돌무지무덤, 아래에는 돌방흙무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무덤의 형태들로 보아 이 일대에는 고구려 초기부터 4~5세기까지의 무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 오녀산성 남문 성벽

오녀산성이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의 비상시의 성이었다면 평상시에는 평지의 성에서 왕이 거주하였을 것이다. 고구려 초기의 평지성은 오늘날 대체로 하고성자로 추정하고 있다.

하고성자 유적지는 환인현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으며, 행정지명은 요령성 환인현 육도하자향(六道河子鄉) 하고성자촌(下古城子村)이다. 오녀산성과 하고성자의 거리는 약 10km이다. 이 유

적은 현재 서·남·북쪽의 성벽만 일부 남아 있다. 동벽은 원래 혼강과 접하고 있었으나 홍수로 유실되었다고 한다. 성벽의 전체 형태는 장방형이고,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 북벽의 전체 길이는 240m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높이 약 2m의 서북쪽 모서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인데, 그나마 성벽 위에 민가가 들어서 있어 점차 훼손되고 있다. 서쪽 바깥벽에는 넓이 10m의 해자(壕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부 수심이 깊은 곳만 양어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고성자 무덤떼는 하고성자촌에서 멀지않은 환인현 육도하자향 상고성자촌(上古城子村)에 있다. 이곳에는 1960년대까지 200여 기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0여 기에 불과하다. 환인 지역에 남아 있는 유적 중 무덤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돌무지무덤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땅을 개간하거나 개발하면서 치워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고구려 유적을 등록하면서 정비하고 있는데, 이곳의 무덤들이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중국의 개발 속도와 고구려 유적의 훼손 속도는 비례하고 있는 듯하다.

환인현성에서 남쪽으로 혼강을 따라 10km 정도 내려가면 미창구(米倉溝)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북쪽 구릉에 고구려 무덤 10여기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1호무덤이 ‘미창구장군묘’라고 하는 돌방흙무덤이다. 이 무덤은 대체로 고구려 중기 이후인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본다. 미창구 1호무덤은 환인 지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대형 벽화무덤이다. 아마도 이 지역의 세력가가 축조하였을 것이다.

‘미창구(米倉溝)’라는 지명에 ‘미창(米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19세기 말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 이곳에 와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환인 지역의 이봉전자(二棚甸子)나 사침자향(沙尖子鄉)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니 시간의 흐름이 무심치 않다. 환인현 시내에는 1910년대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 민족사학인 동창학교가 있었다. 이곳에서 박은식·신채호·이극로 등이 교사로서 재직하면서 한인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집안현의 고구려 유적을 도보로 답사했다고 한다. 단재 신채호는 이러한 답사 체험을 통하여 『조선상고사』를 저술하고 “집안현의 고구려 유적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환인과 이곳에 살았던 고구려 사람

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곳에 옮겨 온 일제 강점기의 이주민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 ❁ 고구려 장차의 환호와 아픔이 깃든 곳, 집안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인 집안에는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성이 자리잡고 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환인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지만 외적과의 전쟁에서 방어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전쟁에서 공격과 방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공격을 잘 하더라도 방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집안은 적절한 곳이며 이곳을 수도로 정하여 거점으로 하면서 400여 년 동안 번성하였다.

집안 지역은 전형적인 분지로 남쪽으로 압록강이 흐르고 있다. 아마도 고구려는 압록강과 그 지류를 통하여 교역도 하였을 것이다. 집안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국가체제를 정비해 가면서 발전해 나갔다. 그 발전과정에서 이민족과 격렬하게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으며, 교역을 통하여 자신들의 특산물과 문화를 전하는 한편 한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국내성은 왕성이기도 하였는데, 성은 대체로 네모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동쪽 약 560m, 서쪽 약 670m, 남쪽 약 752m, 북쪽 약 720m, 그 둘레는 2,700m 정도 된다. 국내성은 또 남쪽과 서쪽에 압록강과 통구하라는 자연해자가 있었고, 그 바깥에 약 10m 넓이의 해자를

만들었다. 이곳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고구려의 중심지였으며, 온갖 영욕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림 3> | 장군총과 광개토왕비

평지성인 국내성과 짝하는 환도산성은 고구려 산성의 한 표본을 보여 준다. 도읍지를 향해서 적이 공격해 오면 고구려 지배층은 평지성인 국내성을 떠나 산성으로 들어가 방어에 주력하였다. 환도산성은 집안 시내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최고봉이 676m이다. 고구려는 이곳을 거점으로, 태조왕 66년 서쪽으로 한(漢)의 현도를 습격하여 화려성(華麗城)을 치기도 하였으며, 69년에는 한의 유주자사(幽州刺史) 풍환(馮煥)과 현도태수 요광(姚光), 요동태수 채풍(蔡颯)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태조왕 때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하였다.

제9대 고국천왕은 외척 세력들의 횡포를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압록곡 좌물촌에서 농사지으며 살던 을파소를 등용하여 그와 함께 개혁정치를 펴나갔으며, 빈민구제법인 진대법을 실시하여 공민(公民)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고국천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 한 후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결과 형인 발기가 반란을 일으켜 일종의 내란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제11대 동천왕(東川王) 때에는 위(魏)의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毌丘儉)이 침입하여 왕이 남옥저 쪽으로 피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어하기 용이했던 국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던 고구려가 중원(中原) 세력과 접촉하는 교통로는 남도(南道)와 북도(北道) 두 갈래가 있었다. 남도와 북도는 고구려가 전연(前燕)의 모용씨와의 대결에서 정세를 뒤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전연은 3세기 말에 선비족인 모용씨가 세운 나라이다. 이들은 342년 도읍을 요서(遼西)의 용성(龍城)으로 천도한 후 장차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도모하였다. 그런데 중원으로 공격해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배후에 있던 고구려와 탁발 우문(宇文)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고구려를 먼저 치고, 우문씨를 멸한 다음 중원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전연은 용성을 출발한 후 일차적으로 요동의 양평(오늘날의 요양)에 집결하여 이곳에서 전력을 점검하고 고구려의 수도인 집안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요동 지역에서 압록강 중류 유역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료에 의하면 당시 “남도는 좁고 험하며 북도는 평탄하다”고 하였다. 고구려의 남도와 북도에 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으나, 근래에는 다음의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

하나는 요령성 성도(省都)인 심양에서 무순을 지나 혼하를 따라 가다가 소자하에서 남진하면서 환인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은 대체로 평탄하여 사료에서 언급한 ‘북도’와 흡사하다.

또 하나인 남도는 심양에서 본계를 거쳐 태자하 유역을 경유해 환인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남도를 지나오는 길에 백암성으로 알려진 산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로의 요소요소에는 고구려의 산성들이 험준한 자연 지세에 의지해서 축성되었다.

고구려는 이 두 개의 교통로를 이용하여 요동의 중원 세력과 접촉하였을 것이다. 결국 적이 공격에 이용한 도로는 고구려에서 요동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교통로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에 접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재창조해 나갔다. 고구려의 문화 가운데 독특한 것이 고구려의 돌무지무덤들이다. 첫 번째 수도였던 환인 지역에도 이러한 유적을 남겨 놓은 고구려는 400여 년간 수도였던 집안 지역에 새롭고 거대한 석조문화를 구축해 나가 고구려만의 개성을

드러내었다. 이들의 무덤 양식은 중원 세력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들은 강과 산에 널려 있는 돌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이 이승의 세계를 사후로 연결하는 고리라면 살아서 끈질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산성이다.

고구려는 또 광개토왕비라는 거대한 비석을 세워서 규모나 내용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성과 천하관을 드러내었다. 또 장수왕은 고구려 발전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고분문화를 창출하여 동아시아에 그 획을 분명히 하였다. 고분의 벽화는 고구려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벽화에서 자신들만의 의식세계를 표출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미의식(美意識)을 표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고구려 사람들, 만주 벌판에 산성을 남기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에 고구려에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다”라고 언급하였다. 중원 한족의 눈에는 이 모습이 고구려에 대한 첫인상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야지대가 부족해 살기 힘든 곳이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들은 이를 자신들의 장점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산과 골짜기가 많으니 돌이 많았을 것이다. 또 큰 산이 많으니 자연 형세는 험하였을 것이다. 고구려는 자연의 험한 지세를 이용하여 산성을 쌓아 고구려만의 독특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학자들도 산성을 고구려인의 특징으로 꼽을 만큼 산성 축조는 독보적이었다.



〈그림 4〉 〓 현도 산성 서북벽. 고구려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평지성을 떠나 현도 산성에서 방어하였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서북으로 요동 지역, 동으로 동해안으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고구려의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만주의 대평원지대나 한반도 서남부 평야지대와 비교해 보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열악한 자연환경을 가졌다. 그렇지만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산악지형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압록강 중류 지역인 독로강·자성강·훈강 연안에는 곳곳에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일대의 고구려성은 소재지에 따라 평지성과 산성으로 구분하는데, 산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 성은 수륙교통의 요충지이거나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산성들의 입지조건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자연의 형세를 이용하여 매우 능률적으로 방어체계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산성은 주로 지세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는데, 산세에 따라 고로봉식(栲栳峰式) 산성, 자봉식(慈峰式) 산성, 사모봉식(紗帽峰式) 산성 등으로 구분한다. 가장 많은 산성의 모양이 고로봉식이다. 이 모양의 산성은 대나무나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처럼 가장자리가 높고 중앙이 꺼진 지형에 자리잡은 산성으로 방어에 가장 유리하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골짜기를 안고 있다는 의미에서 포곡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봉식 산성은 마늘처럼 산 정상은 평탄하고 넓으며 가장자리는 절벽으로 된 산봉우리에 위치한 산성으로 산정식(山頂式) 혹은 테피식 산성이라고 하며, 산허리에 있다고 하여 산복식(山腹式) 산성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모봉식 산성은 사모라는 모자처럼 장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고, 산의 가운데 부분에 성벽을 쌓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형에 자리잡은 산성이다.

압록강 유역의 평지성(평원성이라고도 한다)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내성이다. 그리고 환인의 하고성·나합성, 통화의 적백고성이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가 비옥한 하천 주위의 평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평면은 방형 또는 장방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지성은 산성이 석성인 것과 달리 토성(土城)이 많다.

다음으로 혼하·태자하 유역에서도 고구려성이 확인되었다. 이 산성들은 대체로 하천 연안로를 따라 축조되었다. 이 일대에는 무순의 고이산성, 소자하 유역의 철배산성, 영릉진고성 등이 배치되었다. 이 지역의 고구려성이 하천 연안로를 따라 분포한 것은 지역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구려는 초기 이래 현도군 등 중국 세력과 각축을 벌이면서 혼하·소자하 연안로 일대로 진출하였다. 또 4세기 전연(前燕) 등의 요동 세력과 이 일대를 놓고 각축전을 벌였다. 이에 고구려는 신성(新城)을 쌓았는데, 바로 오늘날 무순의 고이산성이다. 고구려는 이렇게 산성을 축조한 후 민정(民政)과 군정(軍政)을 겸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 성들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축조하였기 때문에 군사상 방어기능이 매우 탁월하였다.

한편, 요하(遼河) 하류와 천산(千山)산맥 일대에도 고구려성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성은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4세기 말 ~5세기 초 이후인 5세기대에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 지역에는 백암성을 비롯하여 안시성으로 비정되는 해성(海城)의 영성자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요하 유역의 성들은 요하를 건너 요동 평원을 거치고 천산산맥을 횡단하여 압록강 일대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

요하 유역의 방어체계는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혼하·태자하 일대가 전기의 수도였던 국내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면, 요하~천산산맥 일대는 중후기 수도인 평양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요하 중상류~길림 합달령산맥의 방어체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고구려는 영역을 확장해 가며,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다양한 방어체계를 구사하였다. 고구려가 입체적인 방어체계를 운용하던 양상은 7세기 전반 수·당과의 전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645년 당 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세 갈래의 도하로(渡河路)를 통해 요하를 건넌 다음 천산산맥 횡단로의 입구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공략하던 전황(戰況)은 요하~천산산맥 일대의 교통로상에 구축된 고구려 입체적 방어체계를 잘 보여 준다.

고구려의 산성을 보면 자연의 지형지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성을 쌓아 적의 공략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지방통치를 위한 거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수와 당을 격퇴시킨 고구려

고구려의 역사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 민족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발전해 갔다. 건국과정과 초기에는 한군현과의 투쟁이었고, 이들을 격퇴시킨 뒤에는 요동을 차지하기 위하여 선비족 등 유목민들과 경쟁을 하였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당시 동아시아의 대제국이었던 수·당과의 전쟁이다.

중국은 400여 년간의 분열을 끝내고 581년 수가 통일제국을 이

루었다. 그동안 중국의 분열 왕조 사이에서 실질적인 외교를 벌이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고구려로서는 수의 통일에 긴장하였다. 고구려는 수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화해국면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수는 고구려



〈그림 5〉 | 환도산성 남벽문 자리. 환도산성에는 현재 일곱 곳에서 문자리가 확인되었다.

에 대해서 신속(臣屬)을 강요하였다. 수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590년 영양왕이 즉위하면서 태도가 바뀌어 599년(영양왕 9) 요



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이로써 고구려의 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이에 수는 3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수 문제(文帝)는 수륙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자신의 넷째 아들을 전쟁에 출동시켰다. 그러나 육군은 임유관(臨瀛關)에서 홍수를 만나고, 군량을 제때에 수송하지 못해 군사들이 굶주림과 유행병에 시달려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다. 주라후(周羅睺)가 이끄는 수군도 평양을 향해 항해하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나 병선이 표류하거나 침몰하여 씨워 보지도 못하고 회군해야 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 때 죽은 병사가 10명 중 8·9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는 전쟁이 실패로 끝난 후 고구려왕에게 책봉한 관작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어 사죄함으로써 양국 간의 평화적인 관계가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문제에 이어 양제(煬帝)가 605년 즉위하였다. 양제는 즉위하자 곧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고,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돌궐의 세력이 변수로 작용하였다. 돌궐은 수대(隋代)에 들어와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열되었다. 585년 동돌궐이 복속되자 양제는 이들을 안무하기 위해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장막을 순시하였다. 이 때는 고구려의 영양왕 18년(607)으로 고구려 사신 또한 계민(啓民)에게 파견되어 공교롭게 양제와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양제와 배구(裴矩)는 고구려의 입조를 강요하며 입조하지 않으면 계민을 시켜 정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양제는 전국의 병사를 모으는 한편, 탁군(涿郡) 임삭궁(臨朔宮)에 이르러 참전하는 군대를 그곳에 모이도록 하였다. 그는 출병에 앞서 장문의 조서를 발표하였는데, 고구려 침략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였다. 그 내용은 고구려가 번성하고, 거란·말갈과 더불어 요서를 침범한다는 것, 여타 종족의 조공 길을 막는다는 것, 번례(蕃禮)를 하지 않는다는 것, 강호(強豪)가 국권을 잡고 혹독하게 정치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1차 정벌은 병사들의 전의 부족으로 실패로 끝났다.

수는 영양왕 23년(612) 2차 침입을 시도하였는데, 싸움은 요하에서 시작되었다. 요하를 수비하고 있던 고구려군은 완강히 저항하였지만 요하 방어에 실패하였다. 요하를 건넌 수나라 수군이 요동성을 포위하자 고구려군의 항전으로 전쟁이 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사상 유례가 없는 대병력을 동원했던 수나라 군대는 을지문덕의 전략에 말려들어 살수대첩에서 대패하였다.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수 양제는 영양왕 24년(614) 3차 침입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수 내부에서 반전 기운이 고조되고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나 수나라 군대는 많은 무기와 식량을 버리고 돌아갔다. 영양왕 25년(614)에도 수 양제는 백관들에게 고구려 침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 해 7월 수 양제가 군사들을 모으려 했으나, 징발된 병사조차 도망하는 형편이었다. 결국 수양제는 4차에 걸쳐서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이 실패가 원인이 되어 수나라는 멸망하기에 이른다.

수나라 멸망 후 618년 당을 건국한 고조 이연(李淵)은 처음에는 고구려와의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고구려 역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에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고구려는 수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 두었던 1만여 명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등 유화정책을 폈다. 영류왕 11년(628) 고구려는 당에 봉역도(封域圖)를 전하였는데, 이는 후일 당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평화적인 관

계를 유지하면서도 고구려는 영양왕 말기부터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영류왕 14년(631)에는 공사착수 16년 만에 완성하였다. 이 장성은 동북의 부여성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의 비사성(比沙城)까지 이르렀다. 이 장성은 수나라를 막아낸 직후 착공되었는데, 이후 건국된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축성을 서둘렀을 것이다. 영류왕 말기인 7세기 중엽 고구려 내정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실권자인 연개소문이 영류왕 25년(642) 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세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고구려에 대하여 당 중심의 질서를 강조하던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영류왕 시해를 빌미로 삼아 정벌론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장손무기(長孫無忌)의 신중론에 밀려 좀더 시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편, 백제 의자왕의 빈번한 침입과 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리던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에게 수십 개의 성을 공취당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며 구원을 요청하였다. 연개소문 역시 당에 대해서 강경책을 구사하여 두 나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당 태종은 644년 고구려 원정 명령을 내리고, 선박 100여 척을 건조하여 군량을 운송하게 하고, 영주도독 장검(張儉) 등에게 유주와 영주의 군사, 거란·해(奚)·말갈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정벌의 명분은 왕을 시해한 연개소문을 응징하고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과 수나라 원정 때에 전사한 백성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었다. 당의 육군은 현도성과 신성(新城)에 이어 요동성을 공격하였고, 수군은 비사성을 공격하였다. 수나라와의 전쟁과 달리 고구려의 군대는 전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요동 국경선 부근에서 당의 침략에 맞서 최후까지 항전한 곳은 안시성과 견안성이다. 고구려에서는 북부육살 고연수와 남부육살 고희진에게 고구려인과 말갈인

으로 편성된 15만 명의 군사를 주어 안시성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당 태종은 안시성을 포위하여 고구려군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당시 안시성은 당군에게 포위되어 하루 6, 7차례나 교전을 하였다. 당의 군대는 60일간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밤낮으로 토산(土山)을 쌓고 성 안을 굽어보며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토산이 무너지고, 9월로 접어들어 추위가 닥치자 당나라 군대는 견디기 어려웠다. 이에 당 태종은 안시성의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을 명령하였다.

당 태종은 이 원정을 크게 후회하였다고 하는데, 당군을 격퇴시킨 고구려로서도 손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요동의 큰 성들이 함락당하여 7만여 명이 당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야말로 인적·물적 손실이 양측 모두에게 컸던 전쟁이었다. 이 와중에서 안시성의 당군 격퇴는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당은 장기전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고구려가 수·당의 대대적인 공격을 막아낸 것에 의의를 찾는다면,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수·당 중심으로 역학관계를 이끌어가려던 시도를 막아냈다는 점이다. 결국 수나라는 이 전쟁의 실패로 국가가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며, 당나라 역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해동성국, 발해는 어떤 국가인가

임상선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발** 해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이 세운 나라이며, 신라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이루고 한때 해동성국이라고 할 만큼 번성한 국가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발해가 어떤 국가인지를 물으면, 자신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답하는 경우에도 '고구려 유민', '대조영', '해동성국', '발해 유민' 등의 몇 마디 단어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발해가 '수수께끼의 왕국' 혹은 '잃어버린 왕국' 등으로 알려진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람들과 발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나마 알고 있는 지식도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것은 각국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발해에 대한 지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의 발해사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역사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해국의 건국자인 대조영을 예로 든다면, 남북한의 학생들은 모두 그가 고구려 출신이라고 알고 있으나,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그를 일관되게 말갈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발해사에 대한 남북한과 중국 학계의 견해 차이는 크다. 발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혹은 어느 문화를 계승하고, 그 역사는 오늘날의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 하는 점 등이 쟁점이다. 이것은 발해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발해 이전과 이후 북방지역 역사에 대한 해석과 귀속으로까지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 발해의 건국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영주(營州) 일대에 끌려와 생활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은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의 지휘하에 696년 5월 이진충(李盡忠)이 난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당나라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그곳에서 탈출하였다.

이진충이 696년 9월 죽은 뒤, 당나라는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에 걸걸중상을 진국공(震國公)에 책봉하며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당의 제의를 거절하자, 당시 황제인 측천무후는 이해고에게 토벌을 명령한다.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의 사후 고구려 유민을 이끌던 대조영은 오늘날 휘발하와 혼하의 분수령으로 비정되는 천문령에서 이해고의 공격을 격퇴시킨다.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 길



〈그림 1〉 육정산 고분군(길림성 돈화시에 있으며, 정혜공주를 비롯한 발해 초기 지배세력의 무덤이 있다)

림성 돈화시 부근의 성산자산성으로 비정되는 동모산(東牟山)에 성을 쌓고 거주한다. 이 때가 바로 698년이고, 대조영은 건국한 후 진국왕(震國王)이라 자칭하였다고 한다.

발해의 건국은 계통적으로는 고구려계와 말갈계의 다양한 여러 집단이, 지역적으로는 요서 지역의 영주에서 요동과 동모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고구려 멸망 이후 69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일단락되었다. 발해 건국과정에 참여한 집단은 영주로부터의 동주 집단, 천문령전투 전후에 참여한 집단, 건국 직후에 참여한 집단 등이 있었다.

한편, 『신당서』에는 713년 당나라가 최훈(崔訥)을 파견하여 대조영을 좌효위원의대장군 발해군왕 흘한주도독(左驍衛員外大將軍 渤海郡王 忽汗州都督)에 책봉하고, 이 때부터 말갈(靺鞨)이라는 호칭을 버리

고 발해(渤海)라고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의 처음 국호는 ‘말갈’ 이고, 713년 이후 ‘발해’ 로 개칭되었다고 하며, 발해는 말갈이 세운 국가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말갈’ 이나 ‘발해’ 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발해가 아니라 당나라이고, 발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호가 별도로 있었다. 발해 사람들이 사용한 국호로서는 먼저 ‘진국’ 이 있다. 698년 대조영이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후 ‘진국왕’ 을 자칭하였다는 것에서 ‘진국(震國, 혹은 振國)’ 이 최초의 국호일 가능성이 많다. 발해 사람들이 자칭한 또 다른 국호로는 ‘고려’ 혹은 ‘고려국(高麗國)’ 이 있다.

고려라는 명칭은 727년 발해가 처음 일본에 사신을 보내며 첨부한 국서에서 ‘고려’ 를 언급하였고, 758년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하여 전달한 국서에서 당시의 왕인 문왕(文王)은 자신을 ‘고려국왕’ 이라 하였다. 이듬해 일본 조정이 돌아가는 발해 사신을 통하여 문왕에게 보낸 국서에서도 문왕을 고려국왕이라고 하였다. 이후 고려국왕 혹은 고려라는 명칭이 한동안 일본 기록에 등장한다.

이와 같이 발해인 스스로 자신을 ‘고려’ 혹은 ‘고려국’ 이라 하고 상대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 초기, 특히 문왕 시기 발해의 국호가 ‘고려’ 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발해의 강역과 천도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강역 안에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5경 중에서 중경은 오늘날의 길림성 화룡현 서고성



〈그림 2〉 | 발해 영광탑(사경 압록부 지역이었던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있으며, 5층, 높이 약 13m)

자, 상경은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 동경 용원부는 길림성 훈춘현 팔련성, 서경 압록부는 길림성 통화시 부근의 임강, 그리고 남경 남해부는 최근 함경북도 북청으로 비정되고 있다. 5경 중 중경, 상경, 동경은 모두 한때 발해의 수도였지만, 남경 남해부와 서경 압록부는 수도였다는 기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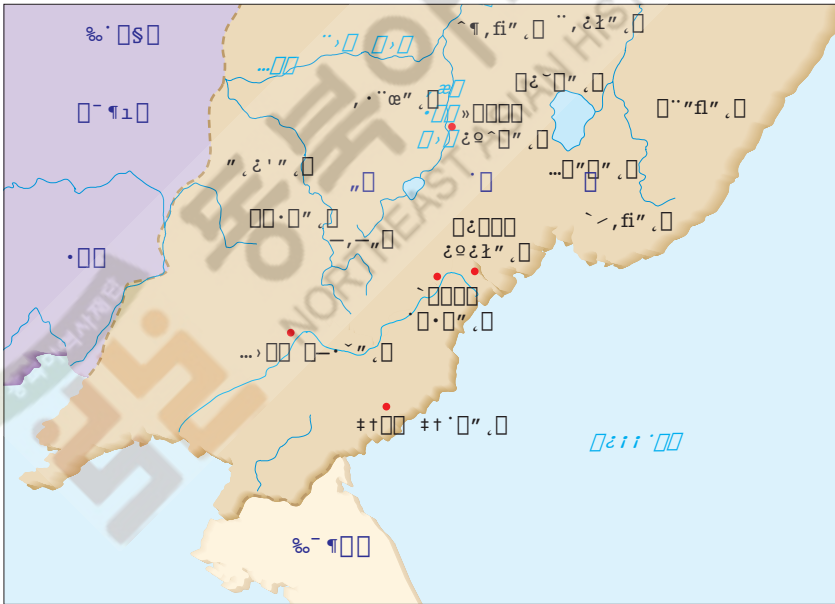
발해는 229년 동안의 존속기간 중 네 차례 수도를 옮겼는데, 모두 8세기에 이루어졌다. 먼저 천보 중(742~756)에는 발해가 건국된 '구국(舊國)'에서 '현주(中京)'로 이동하고, 천보 말에는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정원시(785~793)에는 상경을 떠나 동남쪽의 '동경'으로 천도하고, 얼마 뒤 제5대 성왕(成王)의 즉위와 함께 상경의



〈그림 3〉 | 발해 상경성 | KONOS 위성사진(흑룡강성 영안현에 있으며, 주위 둘레 약 16km)

로 돌아왔다. 이후 발해는 926년 멸망하기까지 '상경'에 정도하게 된다. 즉, 발해는 구국에서 현주 → 상경 → 동경 → 상경의 순으로 수도를 이전하였던 것이다.

발해의 영역 확대는 8세기 중반을 경계로 2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고왕(高王) 대조영이 건국한 시기부터 문왕(文王)이 중경으로 천도할 때까지이다. 특히 무왕(武王) 때에는 '영역을 크게 개척하여 동북의 여러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발해의 신하'가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문왕 초기 구국에서 중경으로의 천도도 건국 이후 늘어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구당서』에는 이 시기의 강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림 4〉 발해의 강역

그 땅이 영주(營州)로부터 동으로 2천 리 되는 곳에 있는데, 남으로 신라와 서로 접하고 (서쪽으로) 월희말갈(越喜靺鞨)과 접하며 동북쪽으로 흑수말갈(黑水靺鞨)에 이르는데, 영토의 크기는 사방 2천 리나 된다.

구국에서 건국한 이후, 동으로 목단강을 건너 두만강 지역에 이르고, 서쪽으로 길림·장춘을 넘어 압록강 하구에 이르렀으며, 북으로 철리·월희와 인접하였으며, 남으로 신라와 접경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기는 문왕이 상경으로 천도한 때부터 멸망하기까지이다. 문왕은 무왕의 정책을 이어받아 주변 민족에 대한 복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 8세기 중반에는 북쪽과 동쪽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문왕대 상경과 동경으로의 천도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선왕(宣王) 대인수(819~830) 시기에는 ‘바다 북쪽의 여러 부락을 정벌하여 크게 영토를 개척’ 하고, 영토가 광대해짐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완비된 관리체제인 5경 15부 62주가 설치되었다. 『신당서』 발해전에는 대체로 후기의 강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발해는 그 지역이 영주(營州)로부터 동쪽으로 2천 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남쪽으로 신라와 니하(泥河)를 경계로 삼고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며 서쪽으로 거란에 이르렀다. …… 영토의 크기는 사방 5천 리가 되며 가구는 10여만 호이고 정예의 군사가 수만 명이다. …… 부여, 옥저, 변한, 조선, 바다 북쪽의 여러 나라들을 모두 얻었다.

발해의 영역은 남으로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의 용흥강을 경계로

신라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멀리 연해주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흑룡강과 송화강의 중하류 전 지역을 그 세력범위에 두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대략적으로 발해 초기에는 압록강 하류에 이



〈그림 5〉 Ⅱ 포시메트 만(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에 있으며, 발해와 일본을 왕래할 때 이용한 항구)

르렀다가 점차 영역을 확대하여 9세기 전반부터 그 전성시기에는 요동 반도를 비롯한 요동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 대외교류

발해는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변 국가와 활발히 교류하였다.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주요 교통로에 일본도(日本道), 신라도(新羅道), 조공도(朝貢道), 영주도(營州道), 그리고 거란도(契丹道)가 있다고 하였다. 5개의 교통로는 발해가 교류하는 국가로 가는 주요 통로였고, 그 대상이 바로 당나라, 일본, 신라, 거란이었다.

발해는 당, 일본, 그리고 신라와 무역을 하였는데, 공식적인 무역 이외에도 일반인의 상업활동도 활발하였다. 당의 등주(登州, 오늘날의 산둥 봉래)와 청주(靑州, 오늘날의 산둥 익도)는 발해 상인이 당에서 활동하던 중심지였다. 일본의 학문승 원인(圓仁)은 문등현 청산포(靑山浦)에서 발해의 교관선이 정박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은 발해 사신의 왕래와 상업무역의 편의를 위해 등주에 신라관과 함께 발해관(渤海關)을 설치하였다.

한편, 남쪽의 신라와도 견직물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제교류가 있었는데, 양국 간의 교류로는 남경 남해부에서 신라의 동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이 주요 노선이었지만 민간상인들은 서경 압록부의 환주에서 만포를 거쳐 신라의 서북경으로 들어가는 길도 이용하였을 것이다.

발해의 대외무역은 8세기 중후반을 경계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건국 이후 8세기 중반까지는 당이나 일본과의 교류는 국가가 전면에 등장하는 공무역 형태였다. 그렇지만 8세기 후반을 지나 9세기로 접어들면 당·일본과의 관계에서 문화적·경제적 요소가 강조되고, 접촉의 빈도도 증가하면서 조공사절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에 의한 교역도 활발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9세기 중엽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하며 무역활동을 한 이연효(李延孝)와 이영각(李英覺)은 대표적인 무역상이다. 이들은 발해국 상주(商主)라고 불릴 정도로 일정 인원으로 이루어진 무역단을 이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연효는 853년 처음으로 등장하여 마지막으로 877년 일본에서 돌아오다가 익사하기까지 8차에 걸쳐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하였다.

또한 발해의 도가 수련인 이광현(李光玄)의 저술에 등장하는 발해 상인들도 이연효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산동반도와 양자강 사이를 왕래하며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따끔 중국 해안을 떠나 서해를 횡단하여 신라의 서쪽 해안에 도착하여 무역활동을 하고, 이곳에서 다시 발해 땅으로 이동하기도 하는 등 발해 상인들의 활동범위가 동아시아 각국에 미치고 있었다. 또한 발해 상인들은 연안 혹은 서해 횡단 원양무역을 하는 한편으로 왕래하는 도중에 이광현과 같은 종교인도 동승시켜 목적지에 하선시켜 주는 등 인적 교류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 발해의 사회

발해의 주민에 대해서 남북한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중국의 역사교과서에는 발해를 말갈, 그 중에서도 속말말갈의 정권이라고만 하고, 고구려계 주민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최근 새로이 발해족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 크라스키노성의 발해 온돌유구(고구려 문화가 발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적)

홍호(洪皓)의 『송막기문(松漠紀聞)』에 의하면 발해의 왕은 대씨(大氏)이며, 유력 성씨로는 고(高)·장(張)·양(楊)·두(竈)·오(烏)·이(李) 등 몇 개에 불과하고, 성이 없는 신분이었던 평민은 편호(編戶), 혹

은 백성(百姓)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서 평민은 고구려인에 비하여 말갈인이 다수였고 조세, 부역, 공물 등을 담당하는 계층이었다. 최하층에 속하는 것은 부곡(部曲)과 노비이며, 이들도 평민과 마찬가지로 성이 없었다. 이들은 중앙귀족세력이나 지방토착세력에 예속되고, 특히 지방토착세력인 수령(首領)의 세력기반이기도 하였다. 『유취국사(類聚國史)』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발해국은 고구려의 옛 땅이며 ……그 넓이가 2천 리이고 주현관역(州縣館驛)이 없고 곳곳에 촌리(村里)가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다. 그 백성(百姓)은 말갈이 많고 토인(土人)이 적다. 모두 토인으로 촌장(村長)을 삼는데, 대촌(大村)은 도독(都督)이라 하고, 다음(촌장)은 자사(刺史)라 하고, 그 아래(촌장)는 백성들이 모두 수령(首領)이라 한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는 지방의 유력부락에는 도독 혹은 자사를 파견하여 주변의 부락을 통할시키고, 그 기초가 되는 아래 단계의 촌락에는 수령으로 불리는 토착부락장에게 자치를 맡기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촌장은 모두 고구려인이며, 자사 아래 단계의 촌장도 수령이므로 도독, 자사뿐만 아니라 수령층의 다수도 말갈인에 비해 고구려인이 임명되었다. ‘말갈부락’에는 말갈인만이 아니라 소수의 토인(고구려인)도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각종 문헌상에 나타난 발해인 중 성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하면, 15명의 왕을 포함하여 대략 240~250여 명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성씨 중에서 고구려계 성씨로는 ‘고(高)·이(李)·왕(王)·장(張)·양(楊)·마(馬)·하(賀)·배(裴)·조(趙)’ 등을 들 수 있고, 말갈계로서는 ‘실(失)·아(阿)·주(朱)·오(烏)·미(味)·율(律)·공(公)·섭

(轟)·어(於)·목(木)·모(慕)·이(已)·지(智)·사(史)가 여기에 해당된다.

발해 사회에서 핵심세력, 즉 유력성씨는 왕족인 대씨 이외에 고·이·왕·양·오·모·하 등의 성씨가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유력성씨가 발해 사회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 시기는 무왕대에 단초가 시작되어 문왕대에 자리를 잡았고, 당시에 형성된 집단은 이후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발해 멸망 때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발해 멸망 후의 부흥운동

926년 1월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려에 내투한 발해인은 대광현 이외에 고려 태조 8년(925) 9월 발해 장군 신덕(申德) 등 500인을 시작으로 예종 11년(1116) 12월에 이르는 191년간에 대략 12만 명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고려 전기의 총인구 210만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발해인이 고려에 넘어온 시기는 발해 멸망 이후 이어진 부흥운동의 실패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발해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은 발해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후발해를 시작으로 정안국, 흥료국, 대발해국이 발해 멸망 후 100년이 넘도록 거란의 지배에 항거하며 등장한 부흥국가들이다.

발해가 멸망한 후 최초의 부흥국가인 후발해(後渤海)는 고정사(高正詞)가 발해 사신으로 후당에 갔던 929년경 처음 기록에 등장하고,

멸망 시기는 을야정권이 거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붕괴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1003년경으로 보고 있다.

발해의 서경 압록부가 있던 압록강 일대에서도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 정안국(定安國)을 세우고 거란에 대항하였다. 『송사(宋史)』 열전에 의하면, 정안국은 그 왕이 처음에는 열만화였다가 얼마 후에는 오현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왕권의 교체가 있었다. 오현명은 고구려의 옛 땅과 발해의 유민이라고 하며 고구려 → 발해 → 정안국이라는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고, 특히 원흥(元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정안국은 인접한 거란의 위협에 대항하는 한편으로 거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남쪽의 송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정안국 이후 발해의 또다른 부흥운동은 흥요국(興遼國)의 건국이다. 흥요국은 1029년 8월 초 요나라의 동경도(東京道) 관하에 있던 발해 시조 대조영의 7대손(혹은 11대손)이라는 대연림(大延琳)의 지휘하에 건국되었다. 대연림은 당초 여진의 호응과 고려와의 공동작전을 통한 반거란 항쟁을 기대하여 건국 직후인 1029년 9월 초에 고길덕(高吉德)을 고려에 보내 건국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결국은 진압되었다.

1116년 1월 발해 유민들은 요의 동경 요양 지방에서 고영창(高永昌)을 중심으로 다시 '대발해국(大渤海國)'을 세워 거란에 대항하였다. 고영창은 동경 요양부를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라 하고, 국호를 대발해, 연호를 융기(隆基)라고 하였다. 대발해국은 거란 동경도 관하의 79주 가운데 50주를 공략할 정도로 세력이 늘어났으나, 금나라의 공격으로 동경성이 함락되고, 남은 군사 5천과 함께 장송도(長松島)로 피하였으나 얼마 뒤 진압되면서, 마지막 발해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갔다.

## 발해사와 북방사연구

발해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대사 속에서도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단지 구색맞추기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은 발해가 당나라 시기 소수민족인 속말말갈(粟末靺鞨)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며,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제 분야에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해동성국이 되었으니, 발해는 중국 역사이지 세계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구려사까지도 중국사로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발해사에 대한 관심 부족이 바로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중국이 넘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다.

발해사 귀속 논쟁에서 한국측의 고구려 계승을 부인하던 중국 학계는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논리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종전까지 중국 학계는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을 말갈인이라는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주장을 극력 부정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왜곡하는 연구가 일반화된다면 대조영의 출신이 고구려인이든 말갈인이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가 속국시했다는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 심지어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조선까지도 언제 중국사라고 강변할지 알 수 없다.

한국은 북방지역을 과거로부터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발해로 내려오면서 한국사와 관련시켜 연구하여 왔다. 이와 달리 중국은 현재로부터 점차 과거로 올라가며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적 연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를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현재지향적 역

사인식이라면 후자는 그와 반대로 현재로부터 과거로 올라가는 과거지향적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필연적으로 중첩되는 역사시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최근까지 발해사였다.

그동안 한국의 북방사 연구는 중국의 동북지방사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중국적 사고와 여기에 근거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중국사가 아닌 북방사(한국사)적 입장에서 고구려나 발해로 대표되는 북방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滿

洲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 제 2 부

### 만주와 정복왕조

- 정복왕조 요 · 금 · 원은 중국사인가
- 만주족은 어떻게 청나라를 세웠을까

# 정복왕조 요·금·원은 중국사인가

윤영인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 ❁ 정복왕조론과 요·금·원

**역** 사에서 북방 유목민족은 항상 중원을 주시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려져 왔다. 그들은 척박한 초원의 생태 환경에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물자를 중원의 농경민족으로부터 무역과 약탈로 충당하려 하였고, 정착문명과 교류 과정에서 '낙후'된 유목문화가 '선진' 한족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저명한 거란 학자 칼 비트포겔(Karl Wittfogel)은 북방 초원과 만주 지역에서 흥기하여 중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통치한 요·금·원·청에 정복왕조(Conquest Dynasties)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한화(漢化)되어 사라진다는 기존의 관점을 초월한 '정복왕조론'은 변방민족왕조 혹은 이민족왕조

등의 애매한 개념으로 처리해 온 북방 유목민족의 정치적 성격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서구와 일본은 물론 대만과 홍콩 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만 유독 중국(대륙) 학계만 이 이론을 거의 무시해 왔다. 최근에도 어느 중국 학자는 ‘정복왕조론’을 20세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학 논리를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입장은 북방민족과 한족 간의 대립과 충돌을 강조하는 ‘정복왕조론’이 민족융합과 한화를 필연적 역사추세로 보는 중국 학계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원전 2세기경에 한족왕조 한나라와 초원의 흉노제국이 대립한 이래 18세기 청제국이 중앙유라시아의 준가르국을 정복하기까지 근 2000년 동안 중원 왕조들은 몽골과 만주에서 흥기한 북방민족의 군사



〈그림 1〉 거란 벽화 출행(出行)



〈그림 2〉 1044년 거란이 세운 심양시 소재 사리탑 (일명 무구정광사리탑(無垢淨光舍利塔))

적 압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한족들은 국제정세에서의 그들의 열세를 문화적 중화주의(中華主義)의 '우월감'으로 만회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중화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역사서술이었다. 역사기록에서의 편견과 왜곡의 결과는 만주를 한국, 중국, 몽골의 변경지역이며 주변의 '선진' 문화 영향을 받던 오지로만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사에서 만주 지역은 거대한 대제국의 원천지였다. 전근대 역사에서 중국은 한번도 남쪽으로부터 정복된 적이 없으며, 중국을 지배한 역대 왕조 중 몽골 원(元, 1206~1368)을 제외한 탁발(拓拔) 북위(北魏, 386~534), 거란(契丹) 요(916~1125), 여진(女眞) 금(1115~1234), 그리고 만주 청(1644~1910)이 모두 만주에서 흥기하였다. 당나라 이후 천여 년간 중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배한 왕조의 절대 다수는 한족왕조가 아닌 북방민족이 세운 정복왕조였다.

거란족의 요(907~1125)는 10세기 초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916~926)가 거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발해를 정복하면서 만주 지역을 장악하였다. 중국 오대(五代)의 하나인 후진(後晉)에 군사적 원조를 하여 그 보상으로 현재 북경 인근 지역인 연운(燕雲) 16주를 할양받았다. 이어서 남북으로 대치하던 송(宋)을 공격하여 1004년 전연지맹(澶淵之盟)을 맺어 매년 송으로부터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의 세폐(歲幣)를 받았다. 거란족의 언어는 몽골어계로 추정되는데, 10세기 초에 독자적인 거란 문자를 제작하여 사용한 점에서 그들의 민족·문화적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12세기 초에 금과 송의 협공을 받고 1125년 마지막 황제가 사로잡히자 멸망하였다. 그러나 황실의 일원인 야율대석(耶律大石)이 서쪽(지금의 신장 지역)으로 가서 카라키타이 혹은 서요(西遼, 1132~1211년)를 건국하였다.



〈그림 3〉 | 벽화에 보이는 거란 시녀



〈그림 4〉 몽골제국의 최대 영역

금(1115~1234)은 여진족이 건립한 왕조로 완안부(完顔部) 추장 아골타(阿骨打)가 여러 부족을 제압하며 점차 세력을 넓혀 나갔다. 송과 동맹을 맺고 요를 협공하여 마침내 거란을 대신하는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었다. 금은 1127년 송의 수도 변량(卞梁)을 함락하여 상황 휘종(徽宗, 1101~1135)과 황제 흠종(欽宗)을 사로잡았다. 이에 송은 망하고 다만 황실의 일원이 강남 지역으로 도망하여 남송을 일으켜 다시 명맥을 이어나갔다. 남송의 황제 고종은 금에 신하의 예로 대하며, 매년 은 25만냥과 비단 25만 필을 세제로 바친다는 조건으로 화의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금은 13세기 초 칭기즈칸의 몽골이 초원에서 흥기하자 큰 타격을 받고 도성을 남쪽 개봉(開封)으로 옮기면서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1134년 건국 120년 만에 멸망하였다. 여진어는 퉁구스어계로 추정되는

데, 거란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여진 문자를 만  
들어 사용하였다.

1206년 칭기즈  
칸으로 추대된 테무진  
과 그 후예들은 유라시  
아 대륙에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초원의 여러 부족과 탕  
구트족의 서하(西夏)왕  
국, 거란의 서요 등을  
정복하고 금마저 멸망  
시켰다. 칭기즈칸의 손  
자 쿠빌라이칸은 수도  
를 몽골 초원의 카라코  
름에서 화북(華北)에  
가까운 상도(上都, 현  
內蒙古自治區正藍旗)  
와 칸발릭(대도(大都),  
현 北京)로 옮기고 국  
호를 대원(大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남송  
(南宋)마저 정복한 쿠  
빌라이칸의 몽골제국



〈그림 5〉 거란 벽화의 악공



은 팍스 몽골리카나(Pax Mongolica)를 이루어 동·서의 문물교류와 국제무역을 촉진하였으나 14세기 중반 자연재해, 내부갈등과 정쟁은 강남지역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원장(朱元璋)이 세운 명(明)에 의해 1368년 몽골 초원으로 축출되었다. 몽골 역시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위구르와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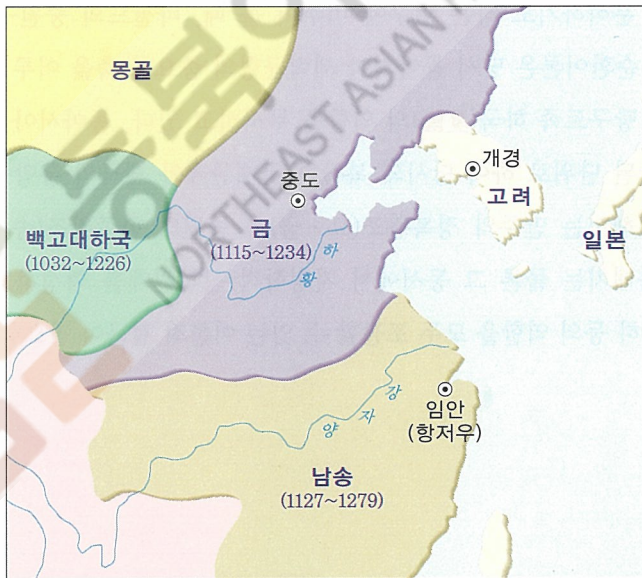
## ❁ 만주와 정복왕조

중국을 정복한 북방민족 제국이 몽골을 제외하고 모두 만주 지역에서 흥기하였다는 사실을 인류학자 바필드(Thomas Barfield)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의 초원-만주-중원의 문명과 지정학적 관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는 정착문명의 중원, 유목문명의 초원(몽골 지역), 그리고 삼림과 스텝문명의 만주가 동아시아에서 중원-초원제국의 이원적 체제의 성립과 붕괴, 북중국과 만주를 다스리는 만주 정복왕조의 성립과 멸망, 그리고 다시 중원-초원제국의 이원체제로 가는 흥망성쇠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보았다.

초원과 중원은 자연적·문화적 환경이 극단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유목제국과 한족왕조의 공존이 가능하였다. 중원의 한족왕조가 유목민족에게 보낸 물자가 초원에서 재분배되면서 유목제국의 정치구조를 지탱하였고, 그 물자를 제공하는 한족왕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였기에 유목민족들은 중국을 직접 통치하려 하지 않고 다만 세폐와 무역을 강요하는 동반의 관계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즉, 유목제국의 정치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경제구조를 가진 초원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중원의 한족왕조에 대응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제공받기 위해 조직화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목민족에게 한족왕조는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고 한족왕조가 내란에 처해 위태로울 때에는 여러 차례 군사를 동원해서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족왕조가 멸망하면 물자의 제공원이 없어지고 몽골 초원지역은 다시 정치적으로 분산되었는데,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만주의 북방민족들이 흥기하여 북중국 지역을 직접 정복·지배했다고 보았다.

바필드는 만주의 정복왕조를 월경국가(越境國家, Transborder States)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만주, 중원, 그리고 초원의 ‘자연’적 경계를 초월하는 변경지역을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이 바필드의 이론은 유목-정착 문명의 만남을 단지 ‘무역 혹은 약탈’로 보는 단순한 논리를 넘



<그림 6> | 12~13세기 동아시아

어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군사·정치·경제적 교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의 북방민족을 단순히 초원과 중원 제국의 몰락만을 기다리는 기회자로 묘사하는 듯하다. 또, 바필드의 주장과는 달리 초원의 유목민족과 만주의 소위 '반(半)유목' 민족은 문화적 차이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국가 형성과정, 제국적 이데올로기, 국가의례, 그리고 한족 통치의 구조와 패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 초원과 중원의 제국들이 동반하여 흥기하고 멸망하였다는 주장도 실제 상황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돌궐제국이 6세기 중반에 흥기하였을 때 중원에는 통일된 왕조가 아직 없었고, 거란의 요나라는 송의 건국 이전에 이미 세워졌으며, 몽골제국의 형성을 중원에 위치한 금과 남송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원-만주-한국의 삼각구도로 분석하기도 하는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바필드의 중원-초원의 역사적 순환이론은 당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던 고려와 탕구트족 하국(夏國)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 하여 당시의 복잡한 국제관계와 제국의 흥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만주의 정복왕조(요·금)와 중원의 한족왕조(송·남송)의 남북대치는 물론 그 동서에서 지정학적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고려와 하 등의 역할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7〉 쿠빌라이칸의 황후 차비



〈그림 8〉 쿠빌라이칸



〈그림 9〉 유관도(劉貫道)의 「원세조 출업도」

## 정복왕조의 이원적 통치체제

정복왕조의 힘은 우월한 기마병에서 나왔는데, 전근대 전투에서의 기마병은 현대전의 탱크에 비유되기도 한다. 1126년 보병 2,000명이 단 17명의 금나라 기병과 싸우다가 대패하여 죽은 자가 거의 반에 이르렀다는 기록에서 그 위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복왕조가 언제나 그들의 군사적 우세를 가지고 침략과 약탈을 자행한 것은 아니며 중원의 한족왕조로부터 안정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약체제가 성립되면 현상유지의 원만한 국제관계를 추구하였다. 오히려 조약을 파기하고 안정된 국제정세의 혼란과 변화를 꾀한 것은 '공격적'인 유목민의 정복왕조가 아니라,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진을 불러들여 거란을 치고, 후에 다시 몽골과 연합하여 여진을 친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향한 한족왕조 송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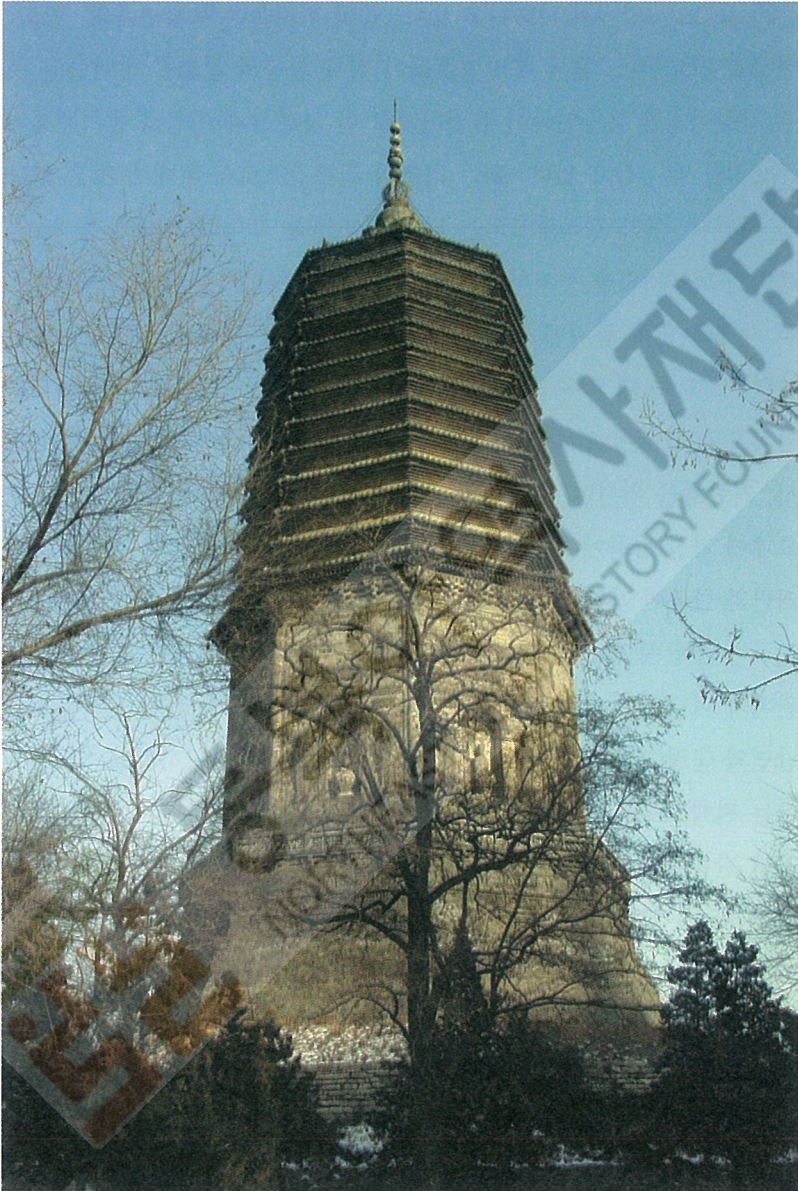
만주에서 흥기한 제국의 저력을 내륙 아시아 문화와의 연결성, 한족과의 차별성과 이원적 통치체제의 특수성 등에서 찾아야 한다. 북방민족은 독자적인 유목문화를 기반으로 한족에 대한 정복자로서의 강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족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였다. 그들은 유목민족 전통을 상실하면 다른 유목민족의 침공 대상이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화를 경계하며 고유의 유목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로 거란·여진·몽골 조정의 정치적 엘리트는 무신들로 문신 중심의 한족왕조와는 명백하게 대조를 보인다.

북방민족 제국통치의 구조적 특징은 이원적 통치체제이다. 정복왕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한족에 대한 차별은 정치·사회·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북방민족의 ‘한화’ 현상을 강조한다. 물론 북방민족들이 점차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방민족이 유지하려고 한 차별성과 이원적 통치체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요는 최초의 정복왕조로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여타 정복왕조와는 달리 본거지를 그대로 북방에 둔 채 정복지인 화북지역을 통치하였는데, 거란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체제를 한족 통치에 이용하는 이원적 체제를 실행하였다. 요나라는 문화와 ‘민족’의 기준으로 지역과 피통치민을 구분하였고 관직체제를 남북으로 나누어 한족과 발해민 등의 농경민은 남추밀원(南樞密院)에서, 거란족을 위시한 유목민은 북추밀원(北樞密院)에서 관할하였다. 또 요대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남경(현 북경)에서의 최근 고고학적 발굴은 거란과 한족이 각각 다른 곳에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비록 북면관과 남면관이 모두 황제에 직속되어 있었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국가의 중대사는 북면관에서 장악하였다. 군사문제는 남면의 군정(軍政)도 남추밀원이 아닌 북추밀원이 관장하였고, 그 장관에는 원칙적으로 거란인이 임명되었다. 즉, 남북의 구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한 지리적 혹은 행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거란인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북부의 관할 아래 있었다. 민족적 이원체제는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데, 북부에서는 거란의 전통의상을, 그리고 남부에서는 한족 복식을 입도록 조치한 것이 그 한 사례이다. 결국 요의 중심은 명백히 장성 이북의 유목지대였고, 여기에서 구축된 독자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남쪽 농경지대를 지배한 것이다.

정복왕조 요와 금은 다섯 개의 수도를 설치한 오경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북쪽에 위치한 상경(上京)이었다. 요



〈그림 10〉 | 금나라 세종(1161~1189) 시기에 건립된 요양 백탑(높이 71.2m로 20세기 이전까지 만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나라 황제들은 하나의 수도를 세우고 궁궐에서만 생활한 한족 황제와는 달리 계절마다 이동하면서 유목 전통을 유지하였다. 한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금나라 시기에도 여진 귀족들은 중도(中都, 지금의 북경)를 떠나 만주와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유목민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였다고 한다.

금나라가 지배한 화북지역의 인구는 약 4,800만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한족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거란인·발해인·한인 등은 여진인의 10배가 넘었고 여진족은 그들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의 여진족을 남으로 이주시켰다. 정복왕조의 이원적 체제를 이어받아 여진족에 대해서는 고유의 부락체제인 동시에 정치·행정·군사조직인 맹안모극(猛安謀克) 제도로, 한족에 대해서는 중국식 주현제로 통치하였다.

금과 송을 모두 정복한 몽골제국은 한족중심주의를 완전히 뒤집었다. 몽골은 제국의 인구를 4등급으로 나누어 몽골인을 ‘국족(國族)’으로 가장 우대하고, 색목(色目, 중국 서북과 서남, 중앙유라시아에 거주한 여러 부족), 한인(漢人, 금나라 영역 내의 한족과 거란, 여진, 고려인, 그리고 남송보다 먼저 정복된 운남과 사천성 등의 각 민족), 그리고 남인(南人, 한족을 비롯한 남송 경내의 여러 민족)을 차별대우하였다. 원대에 최고 관료직인 중서성 우좌승상에 임명된 한인은 쿠빌라이칸 초기 사천택(史天澤) 단 한 명이었고, 군권을 장악한 추밀원(樞密院)과 감찰기관 어사대(御史臺)의 수장으로 등용된 한족(한인 혹은 남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몽골제국 시기에 정복지의 감시를 위해 파견한 감찰관인 다루하치(達魯火赤)도 몽골족만이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그 인원이 부족할 때 색목인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먼

남방 지역에만 부득이하게 한인을 임명하였다고 한다. 또, 한인과 남인에게는 활을 비롯한 무기의 소지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며 같은 죄에도 형량이 각 민족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몽골 시기의 과거제도에서는 몽골과 색목인에게 한인과 남인보다 쉽고 짧은 문제가 주어졌고, 원 조정은 3년에 한 번씩 거행되는 향시(鄉試) 급제자의 정원은 300명으로, 회시(會試)의 정원은 100으로 제한하였다. 급제자의 수는 몽골, 색목, 한인, 남인에 각각 4분의 1씩 배정하여 당시 총 인구의 3%에 불과한 몽골인과 색목인에게 50%가 주어졌 반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 남인에게는 단 25%가 할당되었을 뿐이다.

### ❁ 요·금·원은 중국사인가

요·금·원은 정복왕조로서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문화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이원적 국가체제로 제국을 통치하였다. 이 시대의 동아시아에는 다원적 국제관계가 성립되었고 북방의 정복왕조는 남방의 한족왕조보다 우월한 혹은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한족 중심적 '조공체제'의 형식과 실재를 혼동하여 독자적 문화와 역사를 가진 전근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를 모두 전근대 '중국 질서' 나아가서는 '중국 국가'의 범주에 넣으려고 한다.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며, 한족왕조인 송과 명은 물론 요·금 그리고 원과 청도 모두 '중국왕조'라고 단정한다. 몽골인들이 초원에서 흥기하여 중국은 물론 유

라시아 대부분을 정복한 민족이 아니라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의 판도를 확장한 '중화민족 대가정의 중요성원' 이었다는 주장은 중국의 '중화다민족국가(中華多民族國家)' 라는 현대적 개념을 과거에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 현재주의적 발상이다. 즉,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불투명한 민족과 영토의 경계에 현대 민족국가가 '만들어 낸' 경계를 새로 획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식 논리대로라면 독일의 대표적 철학자 칸트(Kant)는 러시아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칸트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동프러시아의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는 지금 러시아의 영토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의 비논리적 역사관이 중국 내부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민족, 문화, 혹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비슷한 성격의 지정학적 용어에 불과하였다. 요·금·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한쪽의 관점에서만 보려는 연구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 만주족은 어떻게 청나라를 세웠을까

노기식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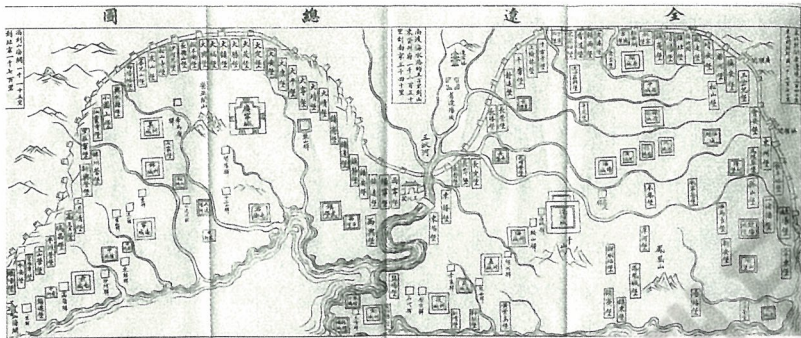
**만** 주족은 어떻게 명나라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곳에서 흥기하여 후금을 건국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명나라의 요동 지역으로 쳐들어가 그곳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여진족과 만주족은 서로 같은 민족인가 다른 민족인가? 후금에서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은 언제, 왜인가? 그리고 몽골과는 어떤 관계인가? 만주의 입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644년 이후 만주족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더라도 입관 전 만주 땅에서 전개된 청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소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몽골이 중국 지배를 포기하고 초원으로 돌아간 후 다시 만주 땅에서 만주인들이 일어나 중국을 지배하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 ❁ 초원으로 돌아간 몽골

원(元)나라 순제(順帝)는 명나라 군대가 가까이 진군해 오자 수도 북경을 버리고 북쪽 초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북원(北元)이라고 한다. 북원은 특히 요동 지역에 남아 있던 원군을 통해 명군과 대치하는 한편 고려의 지원을 얻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농경사회 지배를 통해 거두어들이던 국가재정 수입이 끊긴데다가 요동에 남아 있던 원의 마지막 세력마저 명나라에게 항복하자 북원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 순제가 죽은 후 제위 계승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몽골 황실의 권위는 날로 추락하여 갔다. 결국 북원은 초원 깊숙이 공격해 들어온 명나라 군대에 쫓겨 다니다가 와해되고 말았다. 북원 붕괴 이후 몽골에서는 새로운 초원의 패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북원의 뒤를 이은 타타르부와 원대부터 몽골 서부에 남아 있던 오이라트부의 양자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 ❁ 명나라가 쇠기로 박아둔 요동도사

명(明)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몽골을 북쪽 초원으로 몰아낸 이후 원나라가 통치하던 영토를 모두 차지하려고 북쪽으로 계속 진군했다. 그러나 원나라의 요동행성(遼東行省) 지역에는 여전히 나하추 등 몽골의 잔여세력이 남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군은 더 이상 북쪽으로 공세를 펴나가지 못하고 요동 경략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그림 1〉 『전요지(全遠志)』에 실려 있는 명대 요동총도

에 없었다. 먼저 요동으로 상륙하여 그곳에 남아 있는 원의 잔여세력에 대한 공격과 회유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요동에 남아 있던 원 세력이 투항하자 지금의 중국 요령성(遼寧省)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행정 기구인 요동도사(遼東都司)를 설치하였다. 요동도사는 북으로는 몽골, 동으로는 여진, 남으로는 조선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명나라로서는 북방 군사 전략상 중요한 곳을 차지한 셈이다.

### ❁ 고려와 조선의 교체

원과 명의 교체라는 국제질서의 변동은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고려는 힘의 공백상태가 된 요동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나 원과 명의 교체를 바라보는 고려 조정 내의 의견이 엇갈려 일관된 대외정책은 시행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한 다음 명나라와 관계를 형성하였다.

## ❁ 자유로워진 여진

이 때 요동도사의 동쪽, 조선의 북쪽에 위치한 여진족은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어느 세력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여진족은 소규모의 사회조직으로 분열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두만강에 접근한 일부 여진족은 조선과의 관계를 수립하여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도 이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였다. 여진 추장 중에는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고 조공을 하거나 아예 조선으로 귀화한 자도 있었다.

## ❁ 영락제의 몽골 정책 변경

원과 명의 교체, 고려와 조선의 교체를 거쳐 형성된 국제질서는 영락제(永樂帝)의 몽골 정책 변경에 의해 다시 한번 변동을 겪게 되었다. 영락제는 홍무제가 수립한 소모적인 방어 위주의 몽골 정책을 폐기하고 몽골과의 관계를 안정적인 전통 방식의 조공책봉체제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몽골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여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 북방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몽골이 정치적으로 복속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영락제는 홍무제가 실시했던, 왕자들을 북변에 주둔시켜 몽골 방어를 담당하게 했던 제도를 없애는 한편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북변 몽골 방어선을 대거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또 몽골 방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겼다. 몽골의 타타

르와 오이라트에 대해서는 조공을 요구하는 한편 그 대가로 대규모 말(馬) 교역을 허락하였다. 몽골이 정치적으로 복속하면 경제적 이익을 주어 변경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영락제는 다섯 차례나 몽골 친정을 단행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몽골을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영락제는 결국 몽골 친정 후 돌아오는 도중에 죽고 말았다.

## ❁ 몽골과 여진을 격리

홍무제 때에는 몽골의 재침입만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여진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요동도사를 설치하여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가 안정되고, 몽골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영락제는 여진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통제책을 강구하였다. 역사적으로 몽골 초원과 만주 삼림지대에서 활동하던 북방민족이 통합되었을 때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곧바로 한족들이 거주하는 남방을 위협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진 통제가 불가피하였다. 몽골과 여진을 분리하여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여진은 규모가 작은 집단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서처럼 무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농경 사회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정치적 복속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진의 수많은 크고 작은 추장들에게는 명나라의 군인계급을 수여하고 그 속하의 여진 집단은 기미(羈縻) 위소(衛所)로 편성하였다. 위소관에 임명된 여진 추장들에게는 조공이라는 정치적 의무와 함께 무역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권한이 부여되었다. 여진 추장들

이 명나라에 조공하러 가서 위소관직을 받아오는 일이 영락연간에 상당 시기 계속되자 명나라는 흑룡강 하류에 노아간도사를 설치하여 여진 위소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또 일부 여진 추장은 명조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요동도사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 ❁ 조선과 여진의 단절

여진 추장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북변 방위의 필요성에서 여진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락제는 조선에게 여진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다. 여진을 철저히 명나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여진으로서는 이익이 큰 명조와의 관계도 필요했지만, 가까운 조선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에 왕래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저지할 경우에는 약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명나라와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진 문제에 대해 단절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우호적이었던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고, 조선이 결국 4군 6진을 쌓아 여진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반전에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역학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 ❁ 명나라의 소극적인 북방정책과 마시

영락제는 명나라 북방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해 놓았고 이후 북

방정책은 이 체제 아래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영락제의 북방정책은 그의 사후 명나라에게 커다란 국방상의 부담을 안겨 주었다. 국경선의 남하와 수도의 북상으로 명과 몽골은 매우 근접하게 되었다. 평화적인 조공책봉체제가 유지된다 해도 몽골에게 무역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여 몽골의 군대가 남하하면 명의 심장부인 수도 북경은 순식간에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명조의 북방정책은 갈수록 소극적으로 변해 갔고, 여진에 대한 대우도 소홀해졌다. 영락제 이후 군사력을 이용하여 몽골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소극적인 방어정책만이 이어졌다. 몽골은 막대한 조공무역을 요구하며 명조 북변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려고 출병했던 명 황제가 포로로 붙잡히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여진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여진은 소극적인 명조에 대해 좀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였고, 일부 세력은 요동과 조선의 변경에서 약탈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약탈행위에 대해 명과 조선은 공동으로 출병하여 여진 세력 소탕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한편, 명나라는 몽골과 여진에 둘러싸여 있는 요동의 장기적인 방어를 위해 요동에 M자 모양의 변장(邊牆)을 쌓는 한편 여진에 대해서는 조공이라는 정치적인 정책보다는 마시(馬市) 또는 호시(互市)라 불리는 변경무역을 통해 여진을 통제하는 경제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 ❁ 여진의 무역 확대와 정치적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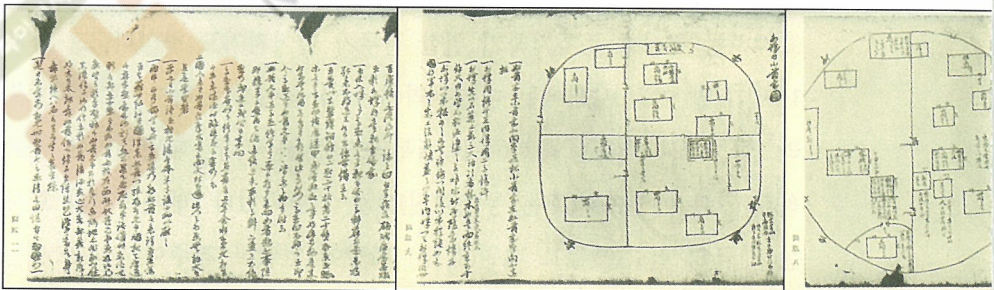
명나라의 북방정책은 몽골의 침공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침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였다. 그러나 몽골이 명의 북변을 침공하는 것은 다시 중국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명말에 이르러 만리장성 각지의 군부대에 시장을 개설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면서부터 몽골은 분산 거주하면서 명과 평화관계를 지속하였다. 이와는 달리 요동 지역에서 명나라는 여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드는 조공을 제한하는 대신 요동 변장에서의 호시(互市)를 확대하고 조공권을 가진 위소관에게 호시무역권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대외경제의 변화에 따라 여진 사회에서는 명 중기 이후 명과의 무역권을 둘러싸고 부족 간에 정치적인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초피, 산삼, 진주, 버섯 등이 대명 무역의 주요한 상품이었는데, 이들 상품을 생산지에서 수집하는 것을 장악한 세력 집단과 호시에서 거래를 장악한 세력 집단이 나타났다. 무역량이 많아짐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조공무역권의 통합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정치·군사적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조공권을 표시하는 칙서를 독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16세기 말 여진 사회에는 대명무역에 적극 참여하는 하다, 호이파, 올라, 여허라고 불리는 해서(海西) 4부와 건주(建州)부, 대명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야인여진(또는 동해여진)으로 재편되었다. 해서여진의 호시는 지금의 철령(鐵嶺)·개원(開原) 지방에 있었고 건주여진의 호시는 무순(撫順)에 있었다.

## ❁ 명과 무역전쟁을 치른 누르하치

여진 사회 내부의 대외무역 장악을 위한 분쟁에서 승리한 것은 건주부의 누르하치였다. 누르하치는 대외무역권을 장악해 가는 한편 팔기(八旗)제라는 군사조직을 창안하여 강고한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또한 몽골 문자를 응용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만주어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1595년 누르하치의 도성 허투알라를 방문했던 조선 무관 신충일(申忠一)은 건주여진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누르하치는 여진 각부를 통합하여 1616년 후금을 건국하고 한(汗)이 되었다. 1618년에는 그동안 여진 내부 분쟁에 간섭하면서 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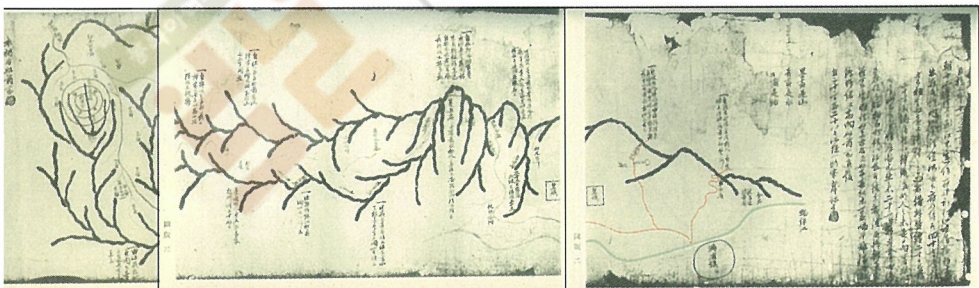


〈그림 2〉 신충일이 허투알라 성에 갔다 와서 쓴 기록 『建州聞見錄』

하치의 여진 통일을 방해하였던 명나라에 대해 일곱 가지 원한을 발표하고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명나라는 1619년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서 허투알라를 공격하여 누르하치 세력을 섬멸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임진왜란 때의 지원을 거론하며 조선에게 지원병을 요청하였다. 왜란을 겪으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해 감각을 익힌 광해군은 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강홍립(姜弘立)을 지휘자로 한 지원군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르하치는 명과 조선 연합군의 공격 시차를 이용하여 타격을 가해 대승리를 거두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사르후인데, 지금 그곳에는 저수지가 만들어져 물 속에 잠겨 있다.

### ❁ 위기에 빠진 후금의 요동 한인 지배

사르후전에서 승리한 누르하치는 명의 요동도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1623년에는 요양(遼陽)으로 이주하여 요동 한인(漢人)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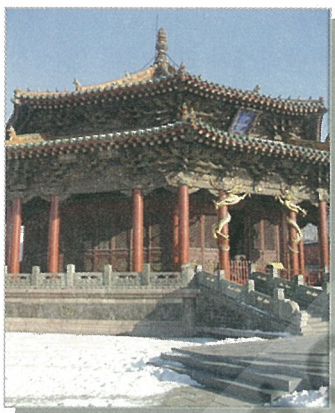
〈그림 3〉 | 누르하치의 첫 도성 퍼알라 성이 있던 자리(중국 요령성 신빈현 소재)



〈그림 4〉 | 『만주실록』에 실려 있는 누르하치 즉위식 모습

지배하는 정복왕조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명군과 대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요동 한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된 후금은 체제 붕괴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였다. 누르하치는 많은 수의 저항 한인을 도륙하고 심양(瀋陽)으로 천도하는 한편 조선과는 무역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요동 지배의 안정을 꾀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명을 공격하여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후금군은 산해관(山海關)을 돌파할 수 없었고 오히려 누르하치는 명군과의



〈그림 5〉 | 심양 고궁의 심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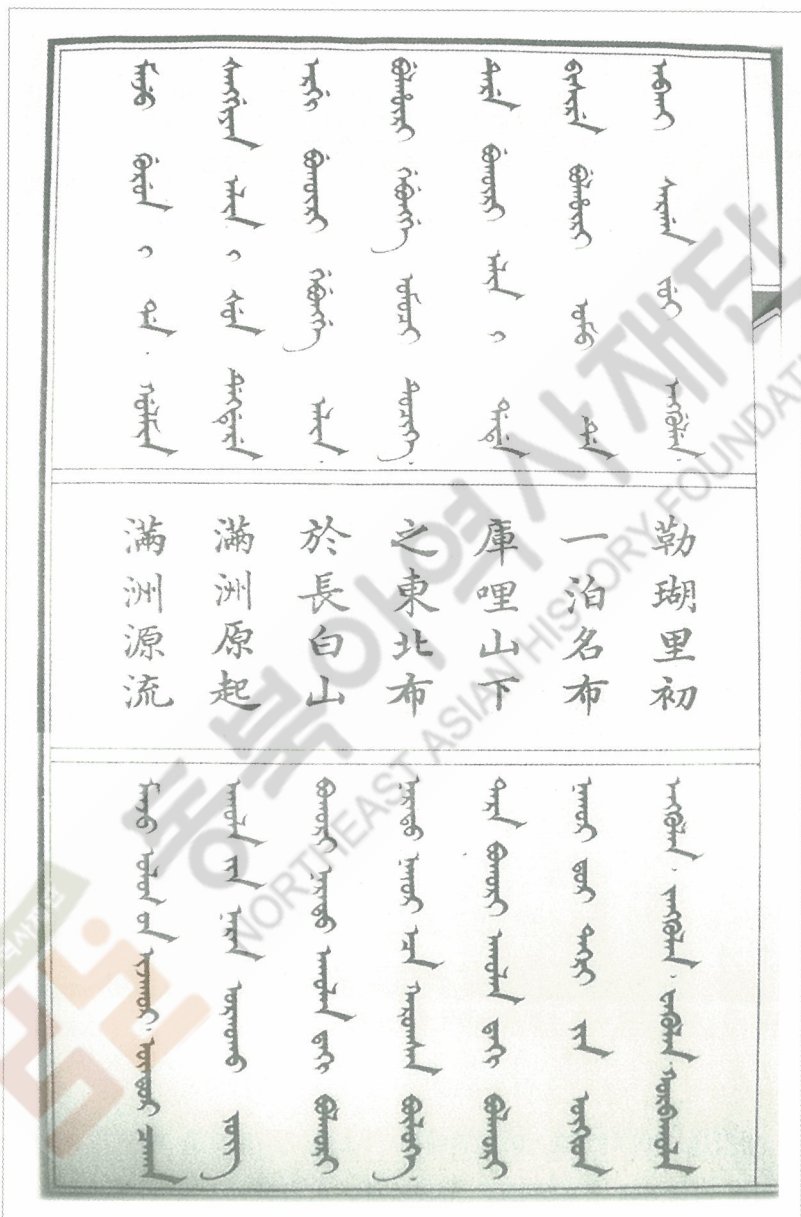
전투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죽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간 것은 뒤를 이어 한(汗) 자리에 오른 흥타이지였다.

## ❁ 흥타이지의 위기 탈출

흥타이지는 요동이 명, 몽골, 조선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조선을 공격하여 명과의 관계를 끊는 한편 무역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 전쟁이 정묘호란이다. 몽골과는 일부 세력과 연맹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하여 몽골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몽골 지역을 경유하여 만리장성을 넘어 명의 내지를 공격해서 명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대치 중이던 산해관 지역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정치체제에서도 커다란 변혁을 시도하였다. 만주인들의 팔기체제에 더하여 요동 한인 지배를 고려하여 육부(六部) 등 중국식의 관료체제를 추가로 채택하였다.

## ❁ 만몽한의 청나라 건국

이러한 대내외적인 개혁을 통해 흥타이지는 취약했던 만주 한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몽골 칸의 지위를 이어받았고 동시에 요동 한인을 지배하는 중국식의 황제가 되었다. 이른바 만몽한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원나라 때부터 몽골의 지배 아래 있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라는 새로운 민



〈그림 6〉 | 만한몽문으로 씌어진 「만주실록」



〈그림 7〉 홍타이지의 무덤, 소릉(북릉)(중국 심양시 소재)

족 명칭을 반포하였다. 1636년에는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고 이러한 사실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조선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그림 8〉 청나라 황제들이 동순하여 조상에게 제사지내던 영릉(중국 요령성 신빈현 소재)

외교적인 면에서 후금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갖고 있던 광해군을 비판하며 반정을 통해 집권한 당시 인조 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조선은 일전을 불사할 태세로 강경했고 결국 청군은 다시 조선을 공격하여 무력으로 인조를 굴복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부르는 전쟁이다.

## ❁ 명나라와 대치

몽골,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명의 관계를 단절 시킴으로써 청은 국제관계 속에서 명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대립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해관을 뚫지 못한 청나라는 여전히 고립되어 무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을 면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나라는 명나라에게 계속해서 화의를 요구하면서 때로는 몽골 지역을 거쳐 만리장성을 넘어 명나라의 내지로 쳐들어가 많은 인력과 물자를 약탈해와 일시적으로 궁핍을 면하기도 하였다. 청나라가 여러 차례 공격에 성공했다고 해도 선불리 명나라와 전면전을 치러 승리할 자신은 없었다. 홍타이지는 중국 정복을 권유하는 한인 관료들을 나무라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자고 했다.

## ❁ 청나라 입관 이후 텅 비게 된 만주

홍타이지는 죽으면서도 명나라와의 대치상태가 그렇게 쉽게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죽은 지 채 1년도 안 된 1644년 청나라 군대는 농민 반란군이 명의 수도를 함락시킨 것을 틈타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장군 오삼계의 요청으로 쉽게 입관(入關)하였다. 입관 후 청은 자신들이 통치하던 요동과 그 이동 지역을 봉금(封禁) 상태로 유지하였다. 명나라가 몽골과 여진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쌓았던 요동 변장처럼 청나라도 이 지역을 한인들의 진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조변(柳條邊)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들이 가끔 이곳에 왔다 가

는 동순(東巡)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텅 빈 채 남아 있던 이 지역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지로부터는 한인들이 들어가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동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말에 이르면 여기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일본이 경제적 이권을 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세력 확장을 시도했다. 마침내 일본은 여기에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식민통치를 하기까지 하였다. 근현대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봉금 지역은 만주 또는 만추리아라는 지명으로 불리었다. 민족명이었던 만주가 이 때에는 지명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지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을 동삼성(東三省)이라 불렀고 현재는 동북(東北) 또는 동북삼성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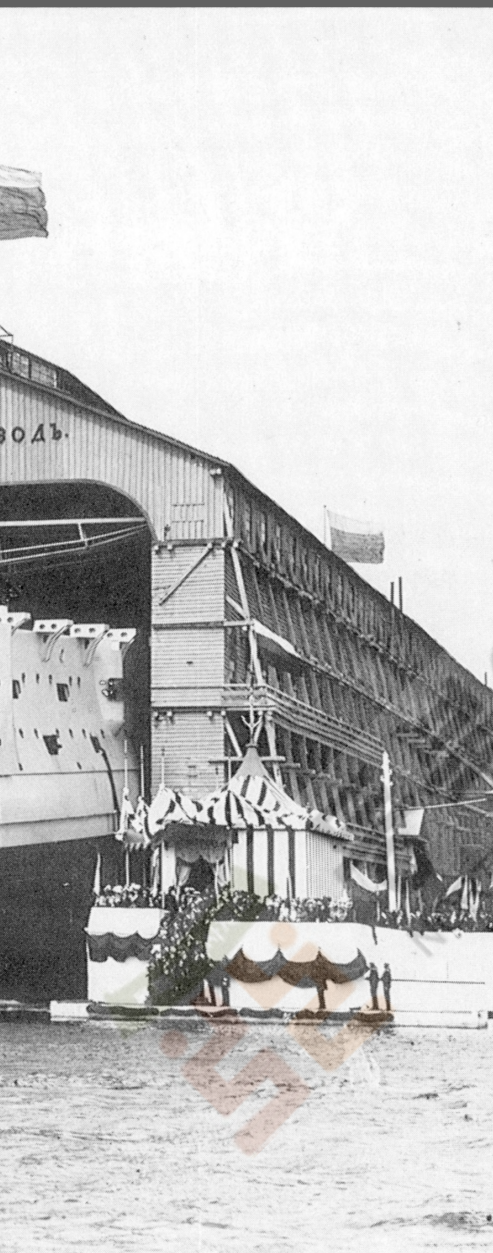
청의 입관과 요동 봉금은 조선에게도 대외관계 측면에서 커다란 전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이 힘의 공백상태가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조선 후기의 역사전개가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滿

洲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 제 3 부

## 만주와 제국주의

- 러시아는 왜 만주에 관심을 가졌을까
- 일본인에게 만주국은 무엇인가
- 만주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러시아는 왜 만주에 관심을 가졌을까

최덕규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러시아가 광활한 시베리아의 개발을 뒤로 미룬 채 19세기 말부터 만주 진출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로 하여금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 아시아 국가를 아우른 대제국의 맹주라는 환상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만주 진출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국의 고위관리 이홍장에게 건네기로 한 300만 루블의 뇌물이 러시아의 만주 침투와 개발정책과는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오랫동안 외부에 닫혀 있던 만주를 왜 러시아가 처음으로 본격 개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뒤를 이어 러일전쟁 이후 만주 개발을 일본이 주도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중국이 개발의 관할권을 장악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러시아, 일본, 중국으로 구분되는 만주 개발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개발 사례인 러시아

의 만주 개발정책을 그들의 만주 인식, 러시아의 만주 개발론의 사상적 배경 그리고 정책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 제국주의 시대의 만주 인식 — 새로운 엘도라도, 동양의 화약고

시베리아 철도 부설사업과 만주 진출정책을 주도한 러시아 재무상 비테는 러시아에게 만주는 인구가 많고 부유한 중국 남부로 진출하기 위한 시발역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반면, 20세기 초반 단재 신재호는 동아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의 주요 침탈대상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만주를 주목했다. 단재가 판단하기에 만주는 동아시아의 화약고였기에 동아시아 패권 다툼의 중심무대가 바로 만주라는 것이다. 따



〈그림 1〉 |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의 총책임자, 황제 니콜라이 2세

라서 만주는 황금빛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의 땅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황금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과 대립을 초래한 '동양의 발칸'이기도 하였다.

러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 중국 간의 통상의 기원은 16~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유럽 열강의 중국 진출은 아편전쟁이 종결된 184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5개 항구



〈그림 2〉 | 발틱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하는 러시아 전함 포테마 호(1900년 5월)

를 개방하고 통관상품에 대해 일률적인 5% 관세를 부과하고 열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해야만 했다. 1844년 당시 유럽과 중국의 교역량은 6,100만 달러(수입: 2,800만 달러, 수출: 3,300만 달러)였으며 이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수입의 경우 영국 68%, 러시아 19%, 미국 7%, 여타 국가 6%의 비중이었다. 수출의 경우 영국 60%, 러시아 16%, 미국 20%, 여타 국가는 4%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중·러 간의 국경무역은 카흐타를 중심으로 한 육상무역이 중심이었고 최근 10년간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경우, 중국 본토는 거의 영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따라서 중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의 역사는 1860년부터 중국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제2차 아편전쟁(1858~1860) 이후부터 중국 해관은 총세무사인 영국인 로버트 하트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1898년의 협정을 통하여 그의 임기가 확정될 때까지 영국의 대 중국 무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을 능가하고 있었다. 반면 아편전쟁을 계기로 영국에서 시작된 중국에 대한 무력침공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여타 열강의 중국 변경지역에 대한 침략의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러시아는 영국의 뒤를 이어 1858년부터 청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동북 및 서북변경에 대한 침탈을 단행하여 아무르 지역, 연해주 그리고 일리 지역을 자국에 병합하였고 프랑스와 일본 역시 그 뒤를 이어 안남과 유구(琉球)를 복속했다. 따라서 이후 경쟁적으로 이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은 열강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비화되기보다는 중국의 변방에서 중국 내륙으로의 침투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91년 2월 23일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직접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중앙러시아에서 극동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갖게 되었다. 1892년 말부터 본격화된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공사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연평균 약 590km를 시공하여 1895년에 이르러 1,254베르스트(1 베르스트=1.067km)에 이르렀다. 이 철도의 부설자금은 대부분 프랑스 파리 증권시장에서 발행된 러시아 채권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만주 개발정책이 프랑스 자본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큰 반면, 동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던 영국과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했다.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사업을 주도한 재무상 비테는 이 철도가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교통로의 대변혁을 촉발하고 러시아에게 통상의 중개자 역할을 맡게 해 줄 것이라 평가했다. 그리고 이 철도 사업으로 “세계사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국제경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시베리아 철도 사업에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시베리아 철도에 대한 비테의 이 같은 평가는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통상을 중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천혜의 조건도 가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러시아의 지리적 장점을 철도부설을 통해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던 바, 이는 “유럽에서 벌린 차관의 이자를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이득으로 변제”하고자 한 그의 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적극적인 극동진출 정책은 대내적으로 산업화 정책의 외연

을 확대하는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1893년 비테는 재무성 산하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국가와의 교역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착수하였다. 이 당시 그는 다음의 이유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청국, 조선, 일본과의 교역증진에 큰 관심을 보였다. ① 청국과 조선의 내륙지방은 유럽인들의 접근이 곤란한 반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통상증진을 위한 훌륭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② 청·한·일 3국의 총인구는 4억 6천만 명에 이르고 이들 3국의 교역 규모가 연간 7억 5천만 루블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 국가들은 러시아 상품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 ③ 비록 현지점에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물류 중심에 불과하나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될 경우 모스크바는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대한 구상을 배경으로 모색된 러시아의 만주 진출과 개발계획은 청일전쟁(1894~1895)을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패배한 청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승전국 일본의 대륙침략 음모가 노골화되자,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이며 일본을 남만주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청국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청국으로부터 만주 진출에 중요한 이권을 획득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청철도 부설권이다. 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공사 가운데 가장 난공사 구간이었던 바이칼 호수 동부지역에서 아무르 지역까지의 구간을 대체하여 만주를 관통하는 직선노선을 건설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하는 철도였다. 요컨대 시베리아 철도구간 일부를 러시아 영토가 아닌 만주 땅에

부설하려는 계획을 청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만주 개발은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다.

러시아에게 만주는 시장이 넓고 인구가 많은 중국 남부로 남하할 수 있는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항인 여순과 대련을 균형과 무역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하 정책과 부동항 정책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정책담당자들은 한반도와 중국 남부로 나아가는 통로이자 천혜의 부동항을 보유한 만주가 궁극적으로 자국에 병합되어야 할 곳이라 판단하였고, 만주에 대한 문호쇄정책을 통해 이곳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1898년 2월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동아시아 문제 특별 회의를 주재하고 여순과 대련을 포함한 요동반도를 중국으로부터 25년간 조차하고 이곳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순항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에 부동항을 제공하였으며 여순에서 하얼빈을 잇는 남만지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황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경과 가까운 여순항에 러시아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었고 러시아 육군 역시 바이칼 동부와 연해주에서 남만지선을 통해 5일 만에 여순에 당도할 수 있게 되었다. 차르의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에 의한 만주 개발의 시작이자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독점적인 지배권 확립을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만주 개발사업에 여타 열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 이른바 문호개방(open door)의 슬로건은 러시아의 만주 독점정책에 대항하는 일본, 영국, 미국을 결집시킬 수 있는 논리였다. 만주와 접경하지 않은 이들 국가들이 만주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전가 보도의 이론이었던 문호개방 원칙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만주 개발

에 전력을 기울이던 러시아로서는 결코 수락할 수 없는 요구였다. 러시아는 국내자본과 외국차관을 동원하여 만주에서 철도와 부동항의 건설



〈그림 3〉 |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공사의 주역, 재무상 비테



〈그림 4〉 | 여순 항 전경(20세기 초엽)

이라는 수륙 양면의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광산 및 벌목사업 등 다양한 이권사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영·미·일의 만주 개방 요구에 맞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곳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1903년 7월 러시아 육군상 쿠로파트킨은 일본을 방문한 후 귀국 길에 극동총독이 위치한 여순에 들러 동아시아 3국(한·중·일) 주재 공사들이 참석한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 같은 정책결정의 산물이었다.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회피하고 군비태세를 증강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논의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확신하고 있던 일본은 만주를 선점하여 이곳에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던 러시아를 축출하고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상보다는 전쟁을 선택했다.

## 만주 개발론의 사상적 배경 - 슬라브주의

러시아의 만주 진출론의 사상적 기원은 ‘슬라브주의’라 할 수 있다. 이를 신봉하는 슬라브주의자들은 서양 문화와 슬라브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에 착목하여 러시아 고유의 발전노선을 모색한다. 그들은 러시아를, 그 심연에 자신의 고유한 도덕규범과 독자적인 지적·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유기체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양 역사의 진화과정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새롭고 완벽한 문화를 창조할 주체였다. 그 결과 이른바 ‘러시아의 길’을 아시아에서 모색하던 슬라브주의자들이 동아시아 진출론자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슬라브주의는 서구지향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그 사상체계를 정립하였고 이 논쟁은 러시아 문화를 서구 문화와 비교하면서 시작되었다.

슬라브주의자들은 극도의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문화로 인해 쇠퇴한 유럽과 나란히 서는 것을 거부하고 러시아는 그 자신의 고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순수 러시아적인 가치들이 인류사의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 지성계에서 슬라브주의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의 역사적 사명을 확신하고 이를 영토팽창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함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구현할 새로운 무대로 떠오른 지역이 바로 아시아였다.

세계문명을 동·서·러시아로 나누어 보는 3분법에서 출발한 슬라브주의는 러시아만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러나 슬라브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인식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였으며, 그 다양성의 근저에는 동서문명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아시아와 연대하여 유럽에 대항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럽과 연대하여 아시아에 대항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아시아 연대론과 유럽 연대론 간의 논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아시아 연대론의 대표적인 논객은 러시아 황실 측근 인사이자 언론인이었던 옥토프스키이다. 그는 1890~1891년 황태자 시절의 니콜라이 2세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한 후,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 목적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그들의 식민지의 해방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가 황태자를 보좌하여 동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3권의 여행기를 발간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러시아와 아시아 간의 정신적인 유대감을 공고히 하였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만주 왕조의 보전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으로 표출되었다. 그는 1898년 여순과 대련을 조차함으로써 중국의 분할에 동참한 당시 외상 무라비요프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오히려 만주를 관통하는 동청철도 부설권을 얻어낸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였다. 그의 러시아와 아시아 간의 연대론은 1900년 의화단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이를 진압하기 위한 유럽 연합군에 러시아가 가담하였을 때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 열강의 탐욕적인 정책에 의해 반란과 소요가 발생한 동방세계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사명은 바로 러시아에게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 간의 충돌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양대 세계(유럽과 아시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해결의 실마리를 갖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광활한 초원 가운데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

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는 평화적으로 힘을 비축함으로써 아시아를 지배했던 칭기즈칸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표적인 유럽 연대론자는 시인이자 철학자, 종교사상이었던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1853~1900)였다. 솔로비요프는 유럽 세력의 침탈을 받고 있던 아시아 문명권의 문화적 수준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기독교권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동방민족들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필요한 진보를 거부하며 자발적으로 자국 문화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는 향후 도래할 충돌에 대비하여 기독교 문명을 동방에 전파해야 할 선구자적 사명을 띠고 있는 바, 기독교 세계와 고립되거나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 대적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바, 러시아제국은 유럽 열강, 특히 영국·프랑스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이 같은 견해는 트루베츠크의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육토크스키가 발행하고 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식지의 편집장이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트루베츠크이가 유럽 외교의 졸렬성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과 신문 발행인 육토크스키가 유럽의 식민제국과의 투쟁을 위해 러시아와 아시아 간의 연대를 주창한 것은 일견 양자간의 반 서구적 정서상의 동질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육토크스키가 아시아 국가를 지도할 백인 황제(차르)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 서구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트루베츠크이는 중국의 위협을 근절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중국의 분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제국은 이

를 위한 공동의 노력보다는 탐욕적인 자국 이기주의적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아쉬워하였던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교 목표가 중국과의 동맹체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반면, 영국은 오히려 러시아를 겨냥하여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것은 유럽 외교의 졸렬성의 극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솔로비요프가 사망한 후 4년이 지난 뒤, 옥토프스키는 1904년 『위험한 미래—러일전쟁에 대하여』라는 자신의 소책자에서 솔로비요프가 제기한 범몽골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옥토프스키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유산은 아시아 및 중국인들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르가 통치하는 러시아가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범몽골주의도, 어떠한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슬로건도 그리고 일본 역시 동방을 고무시켜 유럽에 대항시킬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고대와 중세의 위대한 제왕들이 견지하던 세계 지배사상은 타타르의 지배를 과감히 물리친 러시아 인민의 혈관 속에 녹아들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제 용맹한 군대의 지도자, 불패의 제국, 강인한 국가정신의 담지자는 러시아제국이라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 연대론과 유럽 연대론으로 표출된 러시아의 아시아 인식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같이 상반된 아시아 인식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 교대로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1896년 아시아 연대론에 근거하여 중국과의 동맹체결을 통하여 만주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러시아는 여순 점령(1898)과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중국 분할에 앞장섬으로써 침략자의 이미지를 동방에 심어 주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러시아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고립은 러일전쟁의 패배로 귀결됨으로써 유럽의 탐욕과 아시아의 정체(停滯)를 극복할 대안으로서의 러시아의 우월성에 대한 자긍심 역시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 ❁ 러시아의 민주개발정책의 한계 - 모험과 뇌물

러시아가 철도와 은행을 통해 근대적으로 만주를 개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을 고비로 그 정책이 좌절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관계의 불평등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국을 대등한 정책 파트너라기보다는 그를 보호해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비대칭적 동맹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만주를 개발한 방식 역시 모험과 뇌물이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점철되었다. 그 모험적 정책의 극치는 1896년에 만주에 부설한 동청철도(東淸鐵道, Chinese Eastern Railway)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일부 구간을 중국 영토인 만주를 관통하여 부설한 이 철도는 치타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약 800km에 달하는 이 노선의 부설공사는 국가의 기간철도 노선을 외국영토에 부설함으로써 예견되는 운용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러·청 간의 국경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이었다. 더욱이 이 철도는 러시아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정책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막대한 건설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차르체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만주 정책의 초점은 여타 열강의 개입을 차단하여 이곳을 철도와 은행을 통해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데 맞춰

졌고 나아가 러·청 관계가 양국 간의 폭넓은 민간교류에 근거하기보다는 시베리아 철도사업을 주관한 재무상 비테와 청국 관리 이홍장 간의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산업화는 후발 산업국가 산업정책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러시아 재무성이 중심이 된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후진 러시아와 선진 유럽 열강 간의 경제적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발방식이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부의 간섭이 가능했던 차르체제의 유지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바, 전제체제의 토양 위에 자본주의를 이식해야 한다는 상충적인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재무상 비테가 자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내적으로 차르체제와 자본주의를 공존시키고, 대외적으로 자본의 원천인 유럽과 시장으로서의 아시아를 동시에 아우르는 치밀한 외교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는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러시아 재무성이 대외정책, 특히 대 만주 정책의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화 정책을 동아시아 정책과 연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의 좌절은 대내적으로 차르체제의 붕괴와 맞물리게 되는 연쇄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제정러시아의 만주 정책은 전제적 정치질서에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차르체제의 특수성이 투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만주 정책은 산업화를 주도하던 재무상 비테의 자본주의적 팽창정책과 군사력에 기반한 니콜라이 2세의 봉건적 팽창주의가 교대로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동아시아로의 자본수출과 철도

부설이라는 경제적 팽창수단이 동반된 비테의 ‘평화적인 침투정책’ 이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한 러시아 황실의 전통적인 영토팽창정책이 잇따르게 된다. 이 같은 양상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주요 관심 지역이었던 만주와 한반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러시아의 대만주 정책은 러청은행의 설립과 동청철도 부설을 주도한 비테의 정책에 이어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군대의 만주 점령과 그 점령 정책의 지속이라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책 역시 한러은행의 설립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조선의 철도망을 연계하려는 정책에 뒤이어 압록강 지역을 군사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책들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정책을 연계시킨 정책이 자본의 투자수익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동아시아 시장의 독점권을 둘러싼 열강과의 경쟁을 고조시켰던바, 막대한 자본이 투하된 자국의 이권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에 의존하는 정책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즉, 재무상 비테의 동아시아 정책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팽창주의 노선에 그 당시 제국주의 열강이 채택했던 경제적 침투수단을 접목시킨 것에 불과했음을 의미하는바, 본질적으로 그 침략적 속성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적 팽창노선과 맥락을 같이하였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평화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비테의 정책과 ‘침략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니콜라이 2세의 정책은 단지 수단과 방법의 차이일 뿐 팽창이라는 측면에서는 맥을 같이한다 하겠다.

러시아의 만주 정책은 청국(淸國)의 봉건적인 전제질서의 유지에 그 초점이 맞춰진바, 이 체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이홍장이 만주 진출을 위한 러시아의 교섭대상이었다. 러시아의 만주 정책의 청국측 파트너였던 이홍장은 1896년 5월 23일 모스크바에

서 열린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허용하는 대가로 300만 루블의 뇌물을 받기로 약정한다. 결국 그는 사례금 가운데 100만 루블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채 1901년 사망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은 한편으로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독점적인 지위는 인정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술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야심 찬 만주 정책이 뇌물공여 정책의 실패로 좌절되었다기보다는 이홍장 역시 러시아를 기만하였다는 데 시안의 중요성이 있음을 의미했다. 러시아의 만주 정책은 국내적으로 광범위하고 폭넓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러·청 관계에서도 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책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시베리아 철도부설사업을 기점으로 재무상 비테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러시아의 만주 침투정책은 동청철도의 부설로 그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홍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요동반도의 조차 및 하얼빈과 여순을 연결하는 남만주 철도부설사업은 열강의 개입과 간섭을 초래하면서 결국 러일전쟁으로 치닫고 말았다.

러일전쟁(1904~1905)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기존의 군사력을 통한 만주 독점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협상과 타협이라는 외교방식을 통해 만주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신임 외상 이즈볼스키가 종래의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일접근을 모색한 것도 이 같은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이즈볼스키의 ‘외교혁명’은 1909년 10월 일본측 협상대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와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얼빈 역에 도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양자 간에 논의될 현안이란 몽

골과 한국을 러시아와 일본의 특수권역임을 상호 인정하고 중국의 분할에 양국이 공동협력하기로 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저격사건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러시아가 만주에서 동청철도와 남만철도를 부설하면서 개발된 도시들인 하얼빈과 여순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근현대사의 편린들이 남게 되었다. 아울러 이 도시들은 러시아가 주도한 만주 개발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기도 하였다.

# 일본인에게 만주국은 무엇인가

다나카 류이치 | 교토세이카대학 |

滿洲

**8월** 15일을 한국에서는 광복절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종전기념 일이라고 한다. 8월 15일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즉 미일 전쟁의 종결을 기념하는 날이다.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는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의 커다란 차가 가로놓여 있다. 8월 15일에 일본에서는 신문 보도 및 텔레비전을 통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B29 폭격기의 도쿄·오사카 대공습, 오키나와 전투 등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평화에의 맹세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의 비극이란, 실은 미일전쟁이 중심이 되어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의 평화주의는 미국과의 협조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반전주의와는 모순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일본의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 중에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인의 '잘못된 과거사' 라는 것은 전쟁 — 그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민지 해방전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지, 식민지 지배의 기억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의 기억은 '공적인 기억' 에서는 아직도 계속 '망각' 되고 있다.

그것은 만주를 둘러싼 기억에도 해당된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에게 만주의 기억이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45년의 소련 참전으로 만주 개척 식민자들이 당했던 고난이며, 오락영화를 통해 '만주국'에 푸이(溥儀)라는 황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일부 철도 마니아들이 남만주철도(만철)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이다. 그것은 만주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세대가 감소한다는 점보다도, 종전 이후의 '국가'에 의한 망각정책(다케우치 요시미)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일본인들에게 만주는 노스텔지어의 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게 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일본인의 만주 경험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날까지 짙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재만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가라유키상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만주 침략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그러나 1931년의 만주사변 이전에는 일본인의 거주지는 대체로 여순·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조차지인 관동주와, 장춘과 여순 간의 남만주철도 부속지, 그리고 영사관이 관할하는 개방지에 한정되어 있었다. 관동주에는 관동도독부 및 관동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있어서 많은 일본인

관료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 외에, 만철 사원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관동주 및 만철 부속지에는 이러한 일본인을 상대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많은 음식점, 소매점, 무역업자, 병원이 있었고, 일본인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었다. 1906년에 창립된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는 특급 '아시아 호'로 대표되는 것처럼 철도회사로 유명하지만, 단순한 철도사업에 그치지 않고 무순·연대의 광산 경영 등 자원과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다각경영을 하였으며, 철도 부속지 내의 각종 공공사업, 예를 들어 학교·병원 경영, 도로 건설, 상·하수도 정비 등을 하였다. 또한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高藤新平)의 '문장적 무비(文装的武備)'



〈그림 1〉 | 대련에 있는 만철의 사원 주택

리는 말에서 보듯, 만철조사부라는 전문적 조사 능력을 지닌 싱크탱크 기관을 사내에 두는 등, 참으로 일제의 만주 경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국책 대행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관동주 및 만철 부속지 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중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었고 대체로 일본 국내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중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만주의 일본인 사회의 형성에 주목해야 할 특징 중의 하나로 일본의 ‘공창(公娼) 제도’의 이식이 있다. 실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나 하얼빈, 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반도의 러시아 조차지에도 이미 많은 일본인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884년 3월의 블라디보스토크 시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 약 1만 명 중 성인 러시아인 남성이 4,191명에 여성이 818명인데 대해, 일본인은 남성 119명에 여성 276명, 한국인은 남성 347명에 여성 7명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일본인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 여성의 대다수는 당시 ‘가라유키상’이라고 불렸던 매춘부였다. 당시 만주는 새로운 개척지였고, 주둔 중인 군대 및 철도 건설을 위해 모인 노동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일본인 매춘부가 급증하여, 1905년 당시 여순·대련의 관동주에 거주 중인 일본인 약 2,500명 중 50% 이상을 점하고 있었으며, 또한 1907년의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의 보고서에도 일본인 남성 292명에 여성은 335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이나타 하루(16세), 아베 다카(20세)라는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당시의 재판 일본인 사회의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의 군정하에서 일본군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대상으로 하

여 매춘부 허가증을 발급하고 성병 검진을 하는 등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였는데, 그것은 민정으로 이양된 뒤에도 계승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일본군 및 일본 정부에 의한 공창제도는 만철 부속지 및 일본 영사관 관할 구역으로도 확대되었다.

## 관동군과 만주국

관동주와 만철 부속지를 군사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관동군이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수비병력을 둘 권리를 획득하였는데, 이 군대가 관동군의 전신이다. 1906년, 전후 경영을 위한 일제의 만주 침략 기관으로서 관동도독부가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1개 주둔사단과 독립 수비대 6개 대대가 배치되었다. 1919년, 민정과 군정의 분리라는 행정개혁 방침에 의해 관동도독부는 폐지되었고 그 대신 관동청과 관동군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이 때 관동군이 설치되었다. 관동군의 기본적 성격은 소련에 대항한 전쟁준비에 있었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빈번히 중국 내정에 간섭하였고, 장작림을 폭살(1928)하고 만주사변(1931)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만주사변을 거쳐 이듬해인 1932년에 만주국이 성립된 이후, 관동군은 만주 전역에 전개되었다. 만주국에는 만주국군이라는 괴뢰군이 존재하였지만, 이 만주국군에 대한 통솔권을 비롯하여 군사·정치·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만주국 지배의 핵심부분을 관동군이 장악하였다. 만주국 황제 부의에게는 정치적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는 관동군 사령

관이 만주국의 원수가 되었으며, 미나미 지로와 같이 관동군 사령관을 거쳐 조선 총독에 취임하는 인물도 있었다.

일제의 만주국 통치와 한국 식민지 정책은 재만 한국인 문제 및 만철과 조선 철도의 교통정책을 비롯하여 상호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서 추진되었는데, 그것은 독립운동 때문이든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 이유는 다양하다 하더라도, 일제 치하의 한국인들이 한반도와 만주를 이동하였던 사실과 상응하는 것이다. 게다가 관동군 참모였던 세지마 류조의 경우와 같이, 전후 시베리아에 억류된 뒤 이 토추 상사의 중역이 되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전후 일본 정치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도 있다.

만주국은 방대한 관료기구를 보유하였고, 만주국 지배 정책의 입안에서 운영까지 많은 일본인 관료들이 그것을 담당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기시 노부스케와 시나 에츠사부로가 있다.

1896년에 아마구치



<그림 2> 관동군 참모 이세하라 겐지

현에서 태어난 기시의 원래 성은 사토인데, 훗날 수상이 된 사토 에이 사쿠는 그의 친동생이고, 현재의 아베신조 내각 관방장관은 기시의 외손자이다. 기시는 1920년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상공성에 입사하면서 정치에 들어섰으며, 1936년에 만주국 실업부 차장에 취임하면서 만주국의 중요 산업통제법 제정, 만주국 경제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만주국의 계획경제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1939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이 되었고, 동시에 중의원 의원이 되는 등 일본의 전시 동원체제의 중심인물이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에는 A급 전범으로서 체포되었지만, 불기소되어 1948년에 석방되었다. 1952년에 공직추방에서 해제되면서 자유당에 입당한 뒤 1957년에 수상이 되었고, 미일안보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쇼와(昭和)의 요괴’라고 불릴 만큼 전후 일본의 보수정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나 에츠사부로는 1898년에 이와테현 미즈사와에서 태어났고, 만철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의 조카이다. 1923년에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농상무성에 입사하였으며, 1933년에 기시 노부스케의 추천으로 만주국 정부 관료가 되어 자원조사·경제관료로 활동하였다. 1939년에 일본으로 돌아온 뒤 기시 노부스케가 상공대신이었던 시기에는 상공차관을 역임하였다. 전후 공직추방 처분을 받았지만 해제된 뒤 민주당에 소속되었고, 1955년에는 중의원 의원이 되었다. 기시 노부스케 내각 시기에는 관방장관이 되었고, 한·일 수교시의 외무대신으로도 유명하다.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도 이와테현 미즈사와 출신이다.

## ❁ 일본인의 만주 이민과 중국 잔류부인 · 고아 문제

만주사변 이전까지는 일본인의 만주 거주 구역이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에 대체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 각지로 이주지 확대가 시도되었다.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만주 이민 정책으로, 1932년의 제1차 무장 이민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약 22만 명이 송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의 만주 이민은 혹독한 기후조건 및 현지 중국인들의 항일운동에 직면하면서 결코 용이하지만은 않았다.

일본인의 만주 이민은 정책의 성격에 따라 3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1932년에서 1935년까지의 시험 이민기, 제2기는 국책에 따라 대량 이민이 실시된 시기, 제3기는 1942년에서 1945년까지 만몽 청소년 의용군이 주체가 되어서 송출된 시기이다.

제1기 시험 이민기에는 당초 일본의 도호쿠 및 호쿠리쿠 등 기후적으로 한랭한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한 무장 이민이 주류였다. 그러나 1933년에 사문동이 이끄는 현지 중국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토평산 사건에 직면하는 등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1936년에 히로타고키 내각은 만주 이민을 '7대 국책'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이후 제2기에는 본격적인 국책 농업 이민이 실시되었다. 제2기 만주 이민의 특징은 분촌이민(分村移民), 분향이민(分郷移民)이라 할 수 있는 촌·향 단위의 집단이민이었다. 특히 나가노현의 오히나타 촌이나 야마가타현의 아즈나이 등 당시 농업 공황으로 고통받고 있던 신슈및 도호쿠의 농촌 지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성인 남성 이민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38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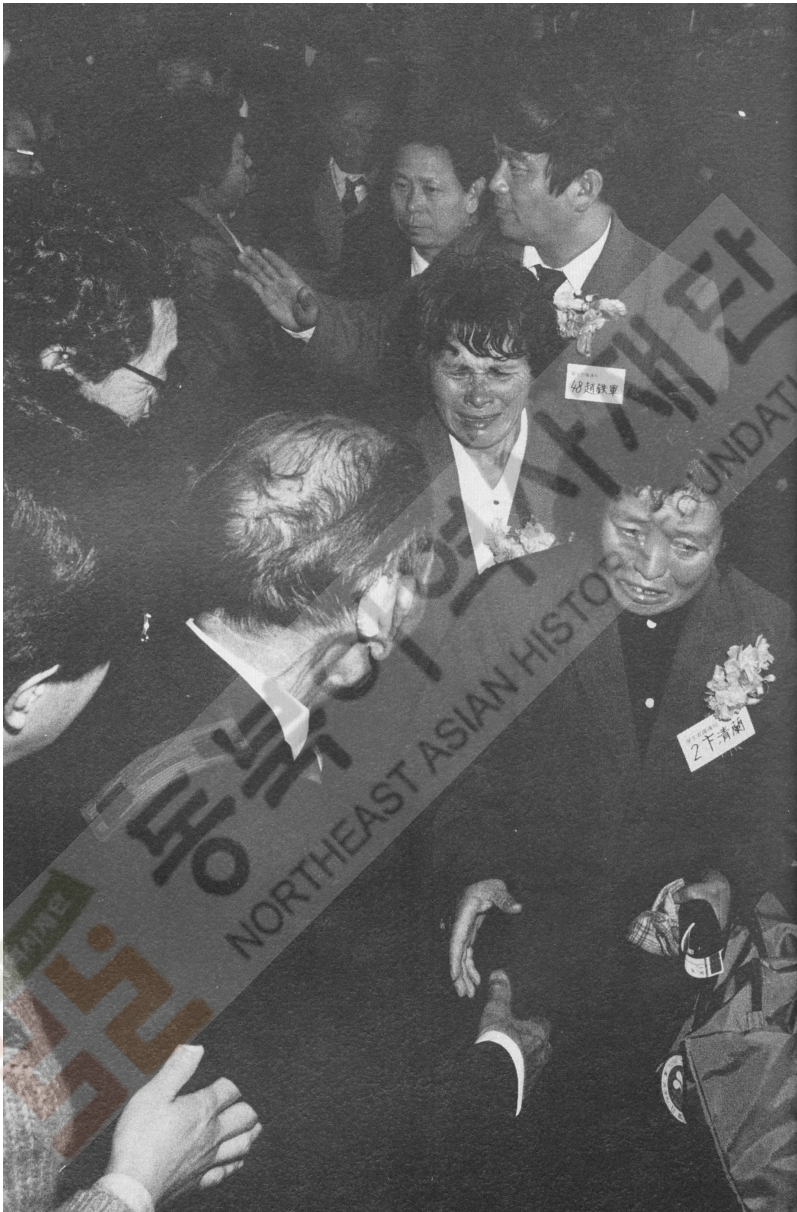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만몽청소년의용군(滿蒙靑少年義勇軍)'을 만주로 송출하였는데, 그 수는 8만 6,000명에 이른다. 제3기에 실시된 이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 이민은 사실상 의용군이었고, 주로 소련에 대한 전쟁준비를 위해 국경 부근에 배치되었다.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만주 침공으로 재만 일본인 개척단원의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척단원 중 많은 성인 남성들은 관동군에 소집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 당시 22만 명의 개척단원의 대다수는 노인과 부녀자였다. 그들의 도피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 중에서도 북만주의 동안역에서는 36량(혹은 50량이라고도 함)이나 되는 긴 열차에 타고 있던 일본인 피난민들을 관동군이 폭살하는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도피과정에서 양친이나 육친과 사별 또는 생이별한 수많은 일본



〈그림 3〉 | 만몽 개척 청소년의용군



〈그림 4〉 중국 전류 고아 조사사업

인 고아·여성이 생겨났다. 고아의 대다수는 중국인 양부모에게 양육되었고, 일본인 여성 중에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중국 잔류 고아’, ‘중국 잔류 부인’이라고 하는 이들로서, 잔류 고아는 2,500명, 잔류 부인은 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중국인 양부모에 의해 정상적으로 양육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일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들도 있다.

종전 후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는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사와 귀국사업은 진전되지 않았다. 1972년의 중·일 수교를 계기로 1981년부터 ‘중국 잔류 고아’의 육친 찾기 및 방일 조사가 시작되었고, 1999년의 마지막 집단 방일 조사에 이르기까지 2,000명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직 문제나 일본어 구사 문제 등 귀국자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할 경우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 731부대와세군전

1932년 일본 육군에 세군병기 개발을 위한 방역 연구실이 설치되었고, 동시에 점령지 하얼빈 근교에 도교 부대라는 세군전 부대 설립이 추진되었다. 1936년에는 이 도교 부대를 모체로 관동군 방역부가 설치되었고, 1938년에는 하얼빈 교외에 있는 평방(平房)의 광대한 ‘특별 군사구역’에 세군병기 개발을 위한 인체실험장을 설립하였다. 이 관동군 방역부는 1940년에는 관동군 방역급수부, 1941년에는 관동군 731부

대로 개칭되었다. 731부대는 세균병기 개발을 주도한 육군 군의관 이시이 시로의 이름을 따서 이시이 부대라고도 불린다.

이 731부대는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마루타 라고 불린 중국인 및 러시아인, 그리고 한국인에 대하여 세균 및 세균폭탄 개발을 위한 인체실험을 자행하였다. 731부대에 학살당한 희생자는 3,000명에 이른다고 추계되며, 731부대의 활동에는 교토대학 의학부나 도쿄대학 전염병 연구소 등 일본 학계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명백해지고 있다.

또한 심각한 것은 일본군은 이들 세균병기를 실전에서는 물론 한국인 독립운동 탄압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1939년 만주국과 소련 국경에서 발생한 노몽한 사건이 있다.



〈그림 5〉 | 731부대 유적지

관동군과 만주국군은 소련군에게 피멸적인 타격을 받고, 패배하기 직전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할하강 지류에 장티푸스균을 흘려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 동북지방인 길림의 농안현에서 731부대는 페스트균을 살포한 것 외에, 중일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절강성의 영파 및 구현, 금화에서 페스트균을 비행기로 살포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하시 고이치로와 평안북도 경찰부장이었던 후루카와 가네히데는 전후 “티푸스균을 뿌렸는데도 티푸스가 발생하지 않았지(미하시)”, “비행기가 선회하자 모두들 깜짝 놀라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쪽 스파이로부터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니 오늘날의 티푸스균도 밀가루 안에 넣어서 습격했으니까요(후루카와)”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총독부에 의해서도 세균 병기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미공개자로 조선총독부 관계자 녹음 기록(4)」, 『동양문화연구』 5호, 2003). 게다가 전후 인체실험연구 데이터와 세균전에 관한 정보를 독점 입수하기 위하여 미국은 도쿄재판이나 B·C급 전범재판에서 세균전을 취급하지 않았고, 731부대 관계자들은 전범에서 면책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의 대다수는 일본의 각 대학 의학부 교수 등 고위직에 취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국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만주 침략의 산물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괴뢰국가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연·혈연·학연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축된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주의는 전후 도쿄재판에서의 천황 면책 및 731부대원의 전범소추 회피, 공직추방 해제, 재벌해체의 불철저에서

보이는 ‘역코스’ 현상, 그리고 ‘레드 퍼지’ 라고 하는 반공체제의 구축 등 냉전하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내에서 온존된 채 계속되어 왔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만주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점이 일본 사회의 민주화를 제약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식민주의와 군국주의 그림자는 주도면밀하게 은폐되고 ‘공적인 기억’에서는 망각되어 왔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메우기 힘든 역사 인식의 골을 만들고, ‘과거사 청산’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일찍이 일본의 대표적인 아시아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는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던가? 일본인은 언젠가 이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1963)고 말하였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은 아직도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만주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석정 | 동아대학교 |

滿洲

**만** 주국(1932~1945)은 일제가, 정확히는 남만주철도를 지키려는 구실로 파병된 일본의 관동군이 일본 정부와 육군본부의 지령 없이 단독으로 오늘날 중국의 동북(이른바 만주)의 군벌체제를 무력으로 쫓아내고(9·18사변 혹은 만주사변) 이듬해 세운 나라이다. 1934년부터는 황제 푸이(溥儀)가 등극, '만주제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괴뢰국이라고 간주하는 당시나, 전후의 역사 기술은 준엄하다. 뒷날 일본이 중국에 대해 도발한 중일전쟁(1937~1945)은 1,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희생자를 초래했는데, 만주국은 전쟁의 배후기지가 되어, 이곳에서 살인적인 인적·물적 동원, 생체실험 등 숭한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다.

만주국에 대한 동북아 사회의 인식은 일종의 망각상태에 있었다. 중국인들은 그 앞에 종교적 신념으로 가짜라는 말을 붙이면서(‘위

(僞만주국), 존재해서는 안 될 악몽으로 여긴다. 일본인들 중에는 만주국의 이상만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만주국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만주는 오랫동안 항일투쟁 외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계가 분명한 한·중·일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에게 만주국의 소속은 불분명했다.



〈그림 1〉 만주국 황제 푸이

만주국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만주는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사방의 문화요소들이 뒤섞인 융합의 공간이다. 융합은 전후 예술세계에서 작용했다. 그리고 만주국은 제국주의의 기술에서 중요한 혁신을 이룬 새 전략이다. 또한 한·중·일 동북아 현대 정치·경제사의 중요한 열쇠이다. 특히 한국에 극단적인 근대국가의 인자를 전해 주었다.

## ❁ 혼합의 무대

만주는 역사적으로 만주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외에 다우얼, 오로첸, 골디, 혹은 허저족(赫哲族) 등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발흥한 만주족은 한족(중국 대륙의 다수민족) 왕조인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웠다. 청조는 오랫동안 한족 내셔널리즘에

물든 학자들로부터 외면당해 과소평가되었다. 그 주장이 대부분의 중국 연구자들이 신봉하는 소위 한족화론(Sinicization thesis, 지배자인 만주족이 오히려 문화수준이 월등한 피지배자에 의해 흡수되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청조는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한 강국으로, 그 비결은 오늘날 폐쇄적 민족주의 시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적 융합이었다. 만족, 한족, 몽고, 위구르, 티베트의 문화가 섞여 296년간 나라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청조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적 전통 결합의 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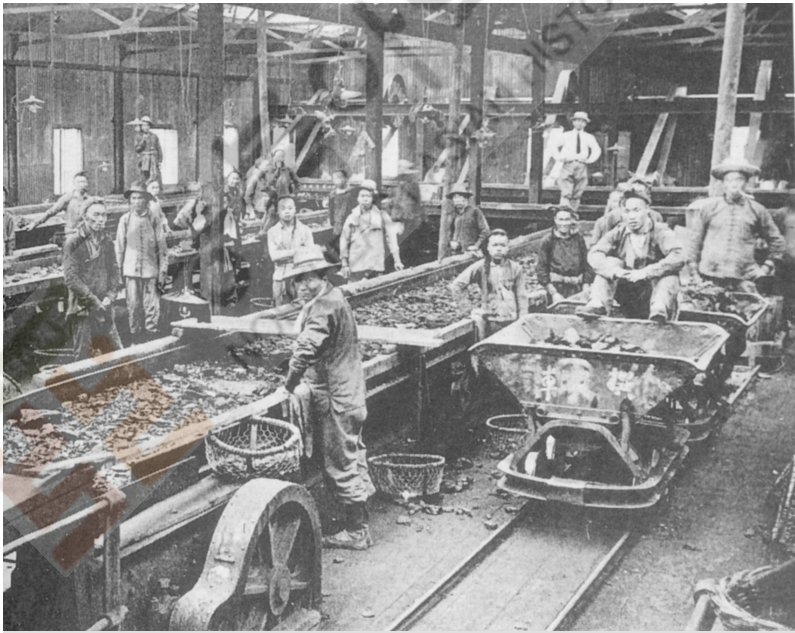
이것은 만주국 시대에도 이어졌다. 이곳은 한족, 만주족, 러시아인, 조선인, 일본인, 몽고인들이 함께 거주한 곳이었다. 국제도시 하얼빈(러시아인들이 동청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에는 이들뿐 아니라 유대인, 프랑스인, 독일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등 50개 이상의 민족, 45개의 언어가 혼재했다. 만주국 통치자들이 고안했던 거창한 국가이념 ‘오족협화’는 이런 현실도 감안한 것이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1930년대 조선 사회에서는 만주행 엑소더스, 만주 붐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책적 ‘개척이민’을 포함, 도합 120여만 명(조선인 70만 명, 일본인 50만 명)의 이주가 있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1920~1930년대 중국 북부에서 만주로 이주한 수백만 명의 기록 다음의 대규모였다(1940년 만주국 센서스에 의하면 일본인 82만 명, 조선인 145만 명이 만주국에 거주했고, 광복 당시 조선인은 216만 명, 일본인 15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예술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만주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조선, 서양의 요소들이 뒤섞였다. 중국 근가의 아버지 정율성, 한국



<그림 2> | 만주국 수도新京(新京)의 일본인 전용 거주지



<그림 3> | 증산운동에 동원된 무산 탄광의 중국인 노동자

영화의 선구자 나운규·윤봉춘도 만주에서 자랐다. 정율성이 만든 '인민해방군가'는 러시아, 유럽, 중국풍이 섞여 있다. 유치환, 이태준, 한설야, 강경애 등의 조선인 그리고 일본의 예술인 다수가 만주를 방문(일부는 이주), 만주를 형상화했고, 만주 기행문이 유행했다. 만주는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각종 주제의 실험장이 되었다. 조선과 일본에서 만주에 관한 가요도 500곡(조선 110곡, 일본 400곡) 이상 만들어졌다. 제국주의는 예술세계의 확장을 초래했다.

## ❁ 신제국주의의 원형

만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는 신제국주의(neoimperialism)의 원형이 되었다. 즉, 패권국(hegemon)이 주변부를 독립국 형태로 유지한 채 간섭하는 혁신적 방법이다. 만주사변 이전 일제의 만주 경영은 위탁회사 형식으로 침식하는 서구 제국주의의 방식을 모방했다. 1894~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타이완과 관동주를 청나라로부터 할양받고, 1905~1906년 러일전쟁에서도 승리, 만주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문장적 무비(文裝的武備, 문치적 형식으로 무력 진출을 위장)'라는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만주에 이권을 갖고 있는 서양 열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일본은 당시 열강을 상대로 싸울 만한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만주의 군벌 장작립 체제를 파트너로 삼고, 남만주철도회사라는 국책기업을 통해 만주를 관리했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동인도회사 같은 위탁회사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에 진출한 방법을 모방한 것이다. 즉, 일제는 만주를 이룬

바 ‘비공식제국’으로 삼은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외친 민족자결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합병, 식민지 획득이 어렵게 되었다. 만주국 건국은 이런 상황에서 고안된 것이다. 독립국 형식은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었다. 만주국은 소련의 첫 위성국가 외몽골(1938년 소련이 내정 장악)과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비시 정부, 그 후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의 ‘괴뢰국’, 냉전말기 캄보디아 등의 전형이 되었다. 미·소 양국은 동구권, 동북아,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서 ‘꼭두각시 국가’를 만들어 조종했다.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주권국 형식, 피지배민족들을 융합으로 이끄는 ‘오족협화’, 서양의 패권에 대항하는 동양의 문명담론인 ‘왕도’나 ‘아시아주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만주국의 통치이념은 이론상 제국주의 역사에서 세련되고 은밀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후 제국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만주국의 주권 형식은 일본 거류민들의 노골적인 특혜를 다소 억제하고, 특히 초기에 만주국 통치자들이 맞서는 데에도 기여했다. 역사적 가정이지 만,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초기 만주국은 1960년대 백인 거류민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로디지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주는 함



〈그림 4〉 | 신경과 대련 간을 달던 당시 아시아 최고의 특급열차 아시아호

의는 주권국의 형식이 제국주의자들에게 꼭 유리한 장식이 아니라, 언젠가 그들에 저항할 근거를 마련하는 가능성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세계는 유일 '제국'의 일방주의가 판치며, 국민국가의 장벽과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세계화 시대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주권국가의 형태는 21세기 제국주의자들에게 편리함과 불편, 양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 ❁ 동아시아 현대사의 블랙박스

만주국은 그동안 본토 연구에만 매달려 있는 동아시아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외면되었지만 기실 그 현대사와 심각한 관계가 있다. 우선, 기시 노부스케를 위시, 태평양전쟁시 일본 정부 내 막강한 인맥을 배출했다. 그 집단은 1950년대 일본 보수정치의 기둥이 되었고, 1960년대 한일국교 정상화와 이후 양국의 유착에 막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만주국은 일본의 1930년대 경제 기적(이것은 20세기 일본의 경제 붐 중에서 첫 흐름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곳으로부터 원자재 상당량을 얻게 되었고, 거대 중화학단지를 건설, 후일 서양과 대결하는 경제적 자립체(엔 블록이라 부르는)의 바탕을 마련했다.

일제는 만주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린했지만, 역설적으로 1945년 패망시 중국에 상당한 경제유산을 남겼다(물론 현재 만주는 동부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만주는 또한 오랜 중국의 국공(國共)내전 역사에 중지부를 찍은 곳이다. 일본 패망 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전투가 재개되었는데, 후자는 만주전투에서 승리, 여세를 몰아 완승한다. 중국공산

당의 성공에는 중국 인민의 지지, 일본의 침공, 청말 이래 농촌사회 엘리트의 권위상실 등 여러 이론이 있으나, 전투의 관점에서 만주는 승리의 모루였다.

한국인들에게 만주는 착잡한 장소이다. 항일투사들에게는 피난처이자 항전의 무대, 뿌리 잃은 이주민들에게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질시, 차별 속의 낯설고 험한 땅이었다. 조선조 말 이래, 1910년대 조선 총독부의 대토지조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주했다. 1920년대 중국 민족주의가 일면서 만주의 군벌은 조선인들을 일제의 침병으로 간주, 탄압했다. 만주국이 세워진 뒤, 만주 이주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만주는 기회의 땅이었다. 일부는 만주국 정부와 군대의 하급관리, 장교가 되었다.

## 하이모던국기의 확산

1930년대 초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만주사변 도발과 만주국 건국)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다. 만주를 차지함으로써 서양에 대항하는 경제 블록을 만들었고, 그 범위를 동남아까지 확대하는 대동아공영권을 추진했는데, 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통치범위를 차례로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자승자박적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만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미지옥'으로 빠져들었고, 일본의 부국강병을 이 끌었으나, 1945년까지 존속했던 메이지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주국은 한국에 극단적 형태의 근대국가를 전파시켰다. 완전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국가도 복제된다. 혹은 국가 만들기의 기술

이 모방, 전파된다. 동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형성에 시대를 넘는 통시적 확산이 있는 것이다. 원래 국가 형성은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메이지국가, 그리고 동서양의 식민국가들의 경우에서처럼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나, 이 과정에도 메이지국가의 경우처럼 후발주자의 유리함이 있다. 만주국은 더욱 빨랐다. 무엇보다 만주국 국가에 도전할 만한 강력한 사회계급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만주국은 메이지국가의 청사진을 복사했지만, 메이지국가의 도안부터가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의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만주국 국가 형성의 많은 부분이 20세기 냉전의 중심무대 남북한에 전달되었다. 그런즉 만주국은 과거와 미래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절묘한 고리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주국에서 한국 근대국가로의 흐름이다. 국민의례, 행진, 강연, 영화상영, 운동회, 전단, 표어 등 광복 후 한국 사회에 너무도 익숙한 행사들이 기실 만주국 시대에 행해지던 것들이다. 한국 근대국가는 그 골격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대에 만들어졌으나, 1960~1970년대 이른바 박정희 정부 시대에 완성된다. 이것은 1990년대 이른바 외환위기에서 그 한계를 노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국가 형성에는 대체로 세 가지의 자원(‘부국강병’ 이념 등을 전해 준 메이지국가, 광복 전 조선총독부, 광복 직후 미군정)이 있었으나, 경제개발과 건설을 지향한 한국 근대국가에게 큰 자원은 만주국이었다.

만주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혹은 국가발전의 모델이다. 양국의 특이성은 사회주의를 방불케 하는 계획경제 이외에, 근대(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확신하에서 자연과 사회를 자로 켜 듯이 배열시킨 하이 모던(high modern)적 성격이다. 속도와 효

을 앞에 문화재와 전통가옥 등 많은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스포츠와 영화, 음악 등이 국가 형성에 수반되었다. 속도, 획일성은 양국의 상표였다. 메이지국가와 식민국가의 요소들은 만주국의 증폭, 강화된 실험을 통해 한국 근대국가로 유입되었다.

만주국은 역설의 세계이다. 어느 연구 분야에도 속하지 않았던, 잔학한 통치와 동아시아 첨단 of 근대를 동시에 지닌, 여러 지역을 버무린, 소멸했으나 사라지지 않은 제국이다. 또한 만주국은 새 제국주의 전략의 소산이지만, 이것에 제동을 거는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한국에 근대국가를 복제시켰다. 오늘날 세계화 현상에서 이런 국가 번식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세계화는 국가의 장벽을 깨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나, 동시에 자신의 라이벌일 수 있는 국가의 확산에 역설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滿

洲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 제 4 부

### 만주와 조선인

- 조선인은 왜 만주로 갔을까
- 간도협약이 무효면 간도는 우리 땅인가
- 만주 지역 독립운동과 한국 현대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 만주의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 조선인은 왜 만주로 갔을까

김기훈 | 육군사관학교

滿洲

**현** 재 중국 거주 조선족 동포의 숫자는 약 20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 100여 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를 약 500만 명으로 볼 때, 재중 조선족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동포가 중국에 거주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 빈궁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만주(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량 이주는 그 후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증가하였다. 1910년 초기에 20만 명 정도이던 재만 조선인 수는 광복 직전에는 170여만 명까지 이르게 된다. 광복 후 집단이주는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이 때 귀국하지 않고 만주 지방에 잔류하였던 조선인과 그들의 후예가 지금의 중국 조선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의 만주 이주사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약 1세기에 걸쳐 진행된 것이며, 이것은 바로 현재 재중 조선족 형성의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다.

재중 조선족 100년의 이주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주가 시작된 조선 말기와 이주가 고조된 일제 강점기의 두 시기로 크게 구분하고, 일제 강점기는 다시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 조선 말기의 만주 이주

만주 지방은 고대 한민족의 주요한 활동무대의 하나였으나, 고구려(B.C. 37 ~ A.D. 668)에 뒤이어 발해(698 ~ 926)가 멸망함에 따라 10세기 이후 한민족의 활동무대는 한반도로 축소되고 말았다. 근대 시기에 조선인들이 만주 지방으로 이주하여 중국 내 소수민족의 하나로 정착하고 있는 것은 조선인들의 만주 '채등장'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조선족의 선조가 되는 조선인들의 이주는 대략 19세기 중엽부터 이루어졌다. 청조(1644 ~ 1911) 이후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정부의 감시 눈길을 피하여 몰래 강을 건너가는 소위 월강잠입(越江潛入)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청조는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 이북 1,000여 리 되는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로 간주하여 만주 풍속을 보호 육성함과 아울러 이 지역의 특산물 수입을 독점할 목적으로 만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의 이 지역 출입을 금하는 봉금정책(封禁政策)을 취하였다. 조선 정부도 청조와의 약정에 따라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실시하여 조선인들의 월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월강죄로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양국 정부의 이러한 봉금령은 17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까지 변하지 않고 200여 년간 계속 유지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엄격한 통제 정

책에도 불구하고, 조선 북부지방의 조선인들이 몰래 월강하여 인삼과 약재를 캐거나 사냥을 하고 밭을 일구는 등 월강잠입하는 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임시적인 월경이거나 또는 계절적인 이주 형태일 뿐이었다. 이것이 정착 이주의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였다.

19세기 중엽 청조 정부는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족들의 만주 이주를 장려하는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75년 요령성 지역의 봉금령을 해제한 것을 필두로 만주에 대한 봉금정책을 점차 해제하여 1880년대에는 거의 모든 만주 지역을 개방하기에 이른다. 한족에 대한 봉금정책의 해제는 조선인에게도 점차 적용되어 나갔다. 최초에는 묵인하는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조선인의 개간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19세기 중엽 조선 북부지방은 지속적인 대한밭과 수재로 많은 농민이 생계수단을 잃고



〈그림 1〉 | 재민 조선 농민과 농기구(1900년대)



〈그림 2〉 | 변발을 한 재민 조선인(1908)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에 함경도와 평안도의 농민들 중 일부는 양국 정부의 봉급령에도 불구하고 살길을 찾아 집단적으로 만주, 특히 두만강 대안지역인 간도(지금의 연변)로 건너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필사적인 만주 이주를 조선 정부는 물론 청조 정부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출발한 근대 조선인의 만주 이주 및 정착은 184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860년대에 들어서 자연조건의 악화로 대흉작이 계속되자 기근에 시달리는 조선 농민이 대량으로 만주 이주를 시작하였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정착을 1880년대 초에 알게 된 청조 정부는 처음에는 귀화 입적을 권유하거나 묵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나중에는 황무지를 개간시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조선인 유치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한족 지주들도 청조 정책에 호응하

여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환영하였다. 이즈음 조선 정부도 역시 국내사정의 악화를 인식하고 1870년대부터는 집단이주를 묵인하다가, 1880년대 초에 월강금지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기에 이른다.

1880년대 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변화가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가속화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조선인은 대부분이 평안도와 함경도의 농민들로서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경의 대안지대, 즉 두만강 대안지방인 간도와 압록강 대안지방인 동변도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그 중 이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던 간도 지방으로의 이주가 많았고, 그 결과 간도는 재만 조선인의 가장 중요한 거주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19세기 중엽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정착은 간도 영유권 문제의 도화선이 되었다. 청조가 동만주 지방인 간도 일대의 황무지 개간을 위하여 1881년 최초의 조사단을 파견하였을 때, 조사단은 이 지역에 이미 다수의 조선인이 이주하여 토지를 경작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고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청조는 이주 조선인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귀화하여 청조에 입적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간도 거주 조선인들은 백두산 정계비를 근거로 간도 지방은 조선의 영토이니 청조 관리가 이주 조선인을 구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거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은 마침내 조선 정부를 움직여 청조에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 국경분쟁으로 청조와 조선 정부는 수차례 걸쳐 조사와 회담을 열었으나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1909년 일본과 청조 간에 맺어진 소위 '간도협약'으로 타결된다.

간도협약은 조선 정부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해 간 일본이 조선과 청조 간의 현안문제였던 간도문제를 만주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 협약을 통하여 일본은 요동 지방의 철도 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을 청으로부터 양보받았고, 그 대가로 두만강을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삼는다는 청측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국경 문제와 간도 귀속문제는 이와 같이 일본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청과 교환조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실로 어이없게 종결되고 만 것이다. 한편, 이 협약에 따라 청나라는 간도의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거주권 이외에 토지 소유권도 부여하였는데, 그 결과 더 많은 조선인이 간도로 몰리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이래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이와 같이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반 조건의 변화 속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만 조선인에 대한 추정 인구수가 그러한 경향을 반증해 준다. 1881년에는 1만 명 정도이던 재만 조선인이 1894년에는 6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04년에는 7만 8,000명에 이르렀다. 이것이 1905년 을



〈그림 3〉 | 보리 타작을 하는 조선 농민(1900년대)

사조약 이후 국내 의병들과 그 가족들의 만주 이주가 시작되고, 또한 간도협약 등으로 간도 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가 증가하면서 1910년경에는 재만 조선인이 약 2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 중 75% 정도인 15만 명이 간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일제 강점기 전기(1910~1930)의 조선인 이주

일제의 조선 강점기는 재만 조선인 이주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재만 조선인의 수적인 면에서 볼 때 1910년에는 20여만 명이던 것이 1930년에는 60여만 명, 1945년경에는 약 160만 내지 170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분포면에서 보면 간도와 동변도만이 아니라 서부와 북부 만주에도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게 되어 일제 말기에는 거의 전 만주 지역에 분포되었다. 출신지별로 볼 때도 이주 초기에는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부지방의 농민들이 이주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후기로 갈수록 경상, 전라, 충청 등 남부지방 농민들의 이주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식민통치 결과 조성된 한반도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아울러 일제의 이주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재만 조선족의 구성 및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만 조선인 이주사에서 일제 강점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이주를 1931년 만주사변 이전을 전기로, 사변 이후를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일제 강점기 전기 조선 농민들의 만주 이주는 정치적·경제적



〈그림 4〉 수전을 경작하는 재만 조선 농민(1920년대)

원인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되자, 반일적 성향의 조선인들이 계속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주하였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만주 이주의 물결은 1919년의 독립만세사건을 전후하여 다시 한번 고조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주자들의 증가는 만주가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이주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보다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비롯된 조선 농민들의 극심한 빈곤화라는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한 이주 동기가 되었다. 식민 통치로 구조화된 경제적 궁핍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만주로의 이주, 즉 경제적인 동기가 사실상 일제 강점기 전 기간에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주 동기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1910년대에 시행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에 강행된 산미증식 계획은 조선 농민을 광범위하게 몰락시켜 토지를 빼앗기거나, 소작할 땅마저 잃게 만들었다. 특히 파산 농민은

미작지대가 몰려 있고, 농촌 노동력이 과잉 집중되어 있던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많은 남부지방 농민이 농촌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내에서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만주를 포함한 국외로 이주하는 길밖에 없



〈그림 5〉 용정 소시장(1800)



〈그림 6〉 용정 소시장(1920년대)

었다.

남부지방 농민들의 만주 이주 급증은 이 시기 조선인의 이주 양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종래에는 주로 북부지방 농민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만주 지역(특히 간도)으로의 이주였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는 남부지방 농민들의 이주(특히 중만, 북만)가 많아진 것이다. 수전 경작에 능한 남부지방 농민들의 이주는 초기 조선인 이주민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만주 지방의 수전 경작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선 말기 중국 정부의 태도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조선인 이주를 우호적으로 대하였으나, 일제가 조선인의 만주 이주 문제와 연관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부정적으로 바뀌어 나갔다. 이것은 일제가 그들의 '신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재만 조선인 문제에 간섭하고, 또한 조선인을 '이용'하여 토지 구입을 시도하는 등 만주로의 세력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일제의 이러한 조선인 이용 정책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재만 조선인을 각종 방법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제가 만몽 적극정책을 추진하게 되자 중국 당국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어 재만 조선인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은 물론 구축정책까지 취하게 되었다.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인 '만보산 사건(1930)'은 바로 이러한 중·일 양국 정부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보던 조선 농민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다. 만주 지방에서의 이러한 박해가 극에 달하였던 1920년대 후반에도 이주 농민들이 계속

늘어난 사실은 당시 조선에서의 생활고가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 일제 강점기 후기(1931~1945)의 조선인 이주

1931년 만주사변으로 괴뢰 만주국을 세우면서 일제는 만주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조선인 이주를 탄압하던 중국 정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제가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취하여 조선인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만주국 시대는 기본적으로는 일제에 의하여 조선인 이민이 통제를 받던 통제 이민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제정책은 만주와 일본 및 조선에 있던 일제의 통치기관들 간의 조율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만주국 초기인 1930년대 초반에는 특별한 장려도 금지도 하지 않는 소위 '방임' 정책으로 시작하였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통제' 정책으로 변화하게 된다.

만주사변 후 일제는 일본 국내의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만주 지역을 자신들의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만주국은 '일본 이민은 장려하고 조선 이민은 방임하며 중국인 이민은 제한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점차 조선인 이주민들에 대한 방임정책이 결과적으로 일본 이주 농민들의 입식지에 대한 잠식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조선 이주민들의 자유로운 입식을 '억제' 하기 위한 '통제'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통제정책은 입만 조선인에게 지역적·양적·질적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 정책은 외관상 조선 농민들의 이주를 보조하고 알선해 준다고 선전되던 '선만척식회사'라는 식민회사에서 추진하였다. 식민회사에서 추진한 조선인 이민은 그 규모와 지원의 정도에 따라 소규모의 '집합이민'과 대규모의 '집단이민'으로 구분되었다. 식민회사는 사전에 선정한 지역으로 조선인 이민들을 입식시킴으로써 지역과 인원수를 통제하려는 일제의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들 회사이민 외에 개인적 차원의 이민인 '분산이민'이 있었는데, 이들도 원칙적으로 이주증명서를 소지해야 입만이 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모든 종류의 조선인 이민은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통제정책은 태평양전쟁 이후 조선 농민들이 각종 명목으로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계획된 이민 숫자도 못 채우는 등 정책 자체가 사실상 붕괴되고 말았다.

이렇듯 말기에는 정책이민이 거의 추진조차 되지 못하였지만, 만주국 시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일제의 통제정책은 재만 조선인 사회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전에는 재만 조선인의 대부분이 북부지방 출신이었는데, 만주국 시대에는 70~80%가 남부지방 농민 출신이었다. 정책이민의 이주 지역은 처음에는 일본인 이민 지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간도와 동변도 지방에 집중되었으나, 1940년대에 소만 국경지역 개발을 위하여 조선인을 동원하면서부터 회사 이민의 70%가 서만과 북만에 집중 입식되었다. 현재도 볼 수 있는 흑룡강성과 내몽고 지역 등 서부와 북부 만주 지역 조선족의 존재는 이러한 정책이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37년부터 1942년 사이에 기록상 파악된 통제 이주민은 집단, 집합, 분산 이주민을 모두 합하여도 15만 명 이하이다. 기록에 파악되

지 않은 이주민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만주국 시대의 재만 조선인 숫자의 증가를 보면 쉽게 짐작이 간다. 궁핍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이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려는 도시 인들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만주국 시대의 재만 조선인의 증가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았다. 1930년에 60만 명 정도였던 조선인 수가 1940년 총인구조사에서는 145만여 명, 1944년에는 대략 160만~17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100만 명 정도의 증가가 만주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그 중 약 80만 명이 귀국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귀국하지 않고 만주에 남아 있던 조선인들이 현재 중국 조선족의 인적 기반이 된 것이다.

## 맺음말

비옥한 황무지가 무한히 펼쳐진 만주 땅은 19세기 중엽 이래 조선 북부지방의 빈궁한 농민들에게는 이상적인 이주지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주는 청과 조선 양국의 봉금령 속에서 몰래 이루어진 필사적인 탈출과 잠입이라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20세기 중엽 한국이 일제 치하로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약 100여 년간 계속되었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 동기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 궁핍이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이민도 발생하였지만, 주류는 여전히 경제적 곤궁 해결을 위한 이주였다. 경제적 궁핍과 탈출 모색이라는 구조는 19세기 중엽 이래 변하지 않았던 만

주 이주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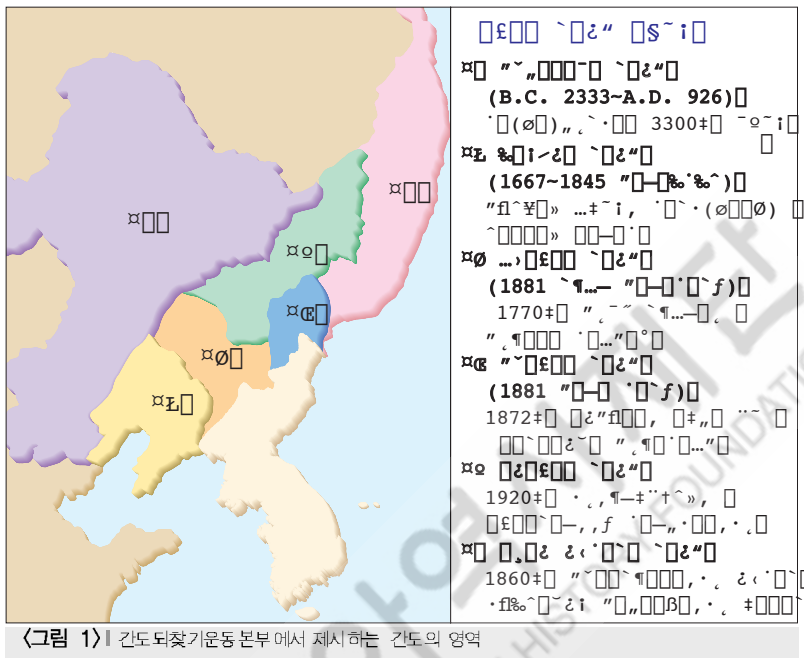
한편,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이 지역을 차례로 장악하였던 청조 정부, 만주 군벌, 만주국 등의 정책에 크게 좌우되었다. 중국인들은 만주 개간의 필요에 따라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일제가 조선인을 이용하는 정책을 취한다고 판단하여 이주민에 대한 각종 탄압 정책을 취하였고, 이것이 만주로의 조선인 이민을 위축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조선 이민을 탄압하던 중국 정부가 사라진 만주국 시대에 일제는 예상과 달리 조선 농민의 만주 이주를 무조건 장려하지 않았다.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에 우선권을 둔 까닭이었다. 조선 농민의 이주는 최초에는 방임되었다가, 나중에는 식민회사를 통하여 통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이전과 이후의 두드러진 변화는 이민자가 북부지방 출신보다 남부지방 출신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이주 지역이 국경 대안 지방에서 점차 만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조선족은 이렇게 1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조선인 이주사회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온갖 풍파 속에서 끈질기게 진행되었던 만주 이주사는 한반도 조선인의 해외 이민사임과 동시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정착한 조선족의 형상사이기도 하다.

# 간도협약이 무효면 간도는 우리 땅인가

배성준 | 고구려연구재단 |

‘간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자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고토(故土)라는 이미지이거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가 벌어졌던 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국사를 배우면서 흘러들었던 어스름푸레한 기억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으로 알려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2004년 여름,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간도 되찾기’가 제기되면서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고토라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7월에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발족되고, 9월에 국회의원 59명이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간도 되찾기와 간도협약 무효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해방 이후 최초로 간도 문제가 대중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갑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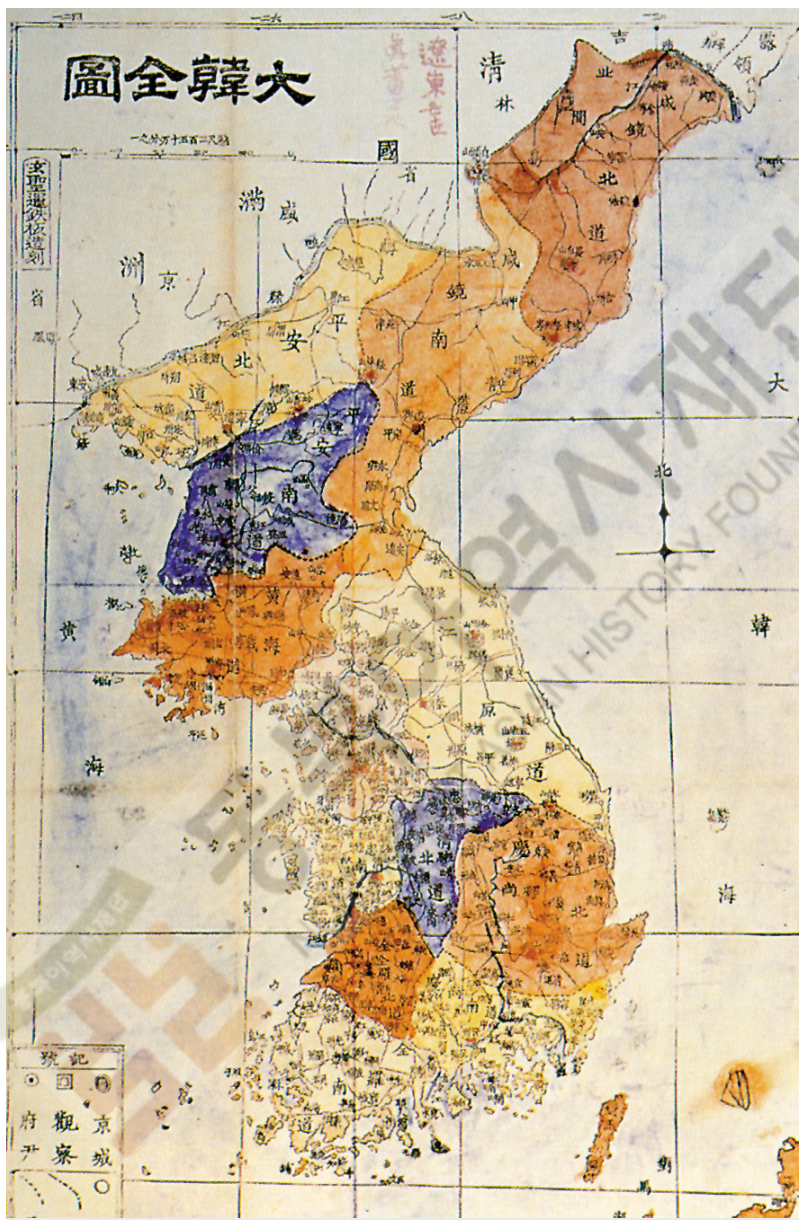


<그림 1>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간도의 영역

런 도발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민주와 연해주를 포괄하는 저 넓은 간도가 되찾아야 할 우리 땅이라는 소식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일거에 뒤집는 후련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간도협약 무효'로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도가 단군 이래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17세기부터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던 것을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하여 개간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아 왔던 간도를,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일본이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간도라는 명칭이 근대 이전에 기원한다고 생각한



〈그림 2〉 대한제국의 대한전도(1907)

다. 즉, 간도란 신주(神州) 또는 신향(神鄉)을 나타내는 말인 '간터'에서 나왔고,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丸都)와 현도(玄菟), 발해 및 거란의 수도인 환도(桓都)라는 말도 동일한 어원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간도가 조선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穆祖)가 다스리던 두만강 북쪽 지역의 '알동(幹東)'에서 전와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도 명칭의 유래를 끌어올릴수록 간도의 범위는 넓어지고 모호하게 된다. 즉, '간터'라는 어원을 근거로 고구려와 발해의 최대 판도를 간도라고 상정하거나, 17세기에 형성된 간광지대(間曠地帶, 중립지대 또는 무주지)를 근거로 산해관 이동의 봉금지대 전부를 간도라고 하거나,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土門江)이 송화강(松花江)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송화강에서 흑룡강(黑龍江)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아래쪽을 간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도(문제)의 역사를 검토해 보면 간도협약 무효로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과는 상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문헌에서 '간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80년대이다. 1885년 조·청 국경회담을 마치고 조선측 감계사 이중하가 고종에게 올린 보고서에 간도에 대한 설명이 처음 등장한다. 1885년 12월에 올린 '을유장계'의 별단에 의하면 1877년 종성과 온성 사이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작은 땅을 주민들이 여러 번 청원하여 개간하고 이를 간도(間島)라고 불렀으며, 그 후 종성, 회령, 무산, 온성 4읍의 주민들이 점차 두만강 대안 지역의 개간지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를 통칭하여 간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1930년대에 간행된 윤정희의 『간도개척사』에 간도 명칭의 유래가 자세하게 나온다. 『간도개척사』에 따르면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가 대기근의 구제책으로 두만강 맞은편의 토지를 개간하게 하고 이를

간도라고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처음 개간한 땅은 회령부 서쪽 25리 되는 평야 100여 정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 개간지가 확대되어 길이 50리, 폭 40~50리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간도 용어의 출현 배경과 더불어 간도 용어가 개척지를 의미하는 ‘간토(墾土)’와 혼용되었다는 사실은 간도 역사의 시작이 1870~1880년대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가 개간한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18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조·청 국경 회담도 두만강을 건너 개간, 이주한 조선인들의 호소가 계기가 되었다. 두만강과 ‘토문강’은 별개의 강이고 토문강이 조선과 청의 국경이라고 생각하던 두만강 대안지역 이주 조선인들은 청국의 일방적인 철수 명령에 반발하여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호소하였으며, 당시 종성에 머무르고 있던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백두산정계비를 조사하고 정식으로 청국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1885년에 제1차 국경 회담, 1887년에 제2차 국경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조·청 국경 회담의 쟁점은 간도 문제가 아니라 두만강의 국경선 여부였다. 당시 조선과 청은 두만강 대안지역 이주 조선인의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토문’이 두만강과 동일한 강인가 아닌가를 두고 대립하였다.

두만강의 국경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문’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던 것이며, 두만강 대안지역의 조선인 개간지를 지칭하는 간도 용어는 이제 조선인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이렇게 두만강 맞은편의 개간지를 가리키던 간도 명칭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과 청 사이의 영토분쟁에 개입하면서 간도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간도의 범위도 남만주 일대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 제2의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부간도파출소'를 개설하여 간도 점령의 첫발을 내디뎠다.

러일전쟁 이후 간도 점령을 획책하고 있던 일본은 간도의 영역을 남만주 일대로 상정하고 간도가 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1906년에 간행된 『만주지지(滿洲地誌)』에서는 해란강(海蘭河) 이남, 두만강 이북의 땅을 간도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간도를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으로 소개하였으며,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대륙 낭인들의 견해가 신문에 자주 실리곤 하였다. 또한 통감부와 일진회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를 해란강 넘어 길림(吉林)까지 확대시키고 있었다. 통감부간도파출소에서 조사, 정리한 간도 인식에 따르면 간도는 고려의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복속시킨 땅이자 조선의 이성계가 여진을 정벌하고 복속시킨 땅이다. 정묘호란 때 체결된 강화조약으로 간도는 양국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간광지대'가 되었으며, 약 200여 년 동안 간광지대로 유지되다가 19세기 후반 조선인이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에서 노야령(老爺嶺)산맥에 이르는 남만주 일대라고 하였다.

1909년 간도협약 당시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간도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위하여 간도 문제를 날조하였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간도 명칭을 거부하고 간도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반면 간도 문제를 조선 점령과 만주 침략의 발판으로 생각한 일본은 간도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간도 귀속문제를 결정하는 조약 명칭에도 반영되어 중국측의 조약 명칭은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이며, 일본측의 조약 명칭은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日

淸協約)이다. 간도협약으로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으로 귀속되었지만 중국은 일본의 영토 침략에 맞서 영토 주권을 수호했다는 생각이었고, 일본은 자신의 영토인 간도를 중국에게 넘겨 주었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간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분쟁이 제기되던 당시 조선(대한제국)의 간도 인식과 일본의 간도 인식이 상이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두만강 대안지역의 조선인 개간지를 간도라고 지칭한 데 비하여 일본은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간도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조·청 국경회담이 벌어지던 1880년대에 간도 명칭이 출현했지만 간도 귀속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반면 청과 일본은 처음부터 간도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으며, 약 2년에 걸친 간도 교섭의 결과 일본은 간도 영유권을 청에게 양보하고 그 대신 만주의 이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간도 인식의 차이에 주목할 때, 오늘날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이 일본의 간도 인식, 즉 통감부간도파출소의 간도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근거로 간도협약 무효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간도는 통감부간도파출소에서 간도 점령을 위하여 만들어 낸 간도의 이미지인 것이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국수적인 고토 회복 의식은 간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국측의 입장에 반대하면 할수록 만주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와 공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 간도라는 것인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을 근거로 송화강 이동 및 흑룡강 이남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 4〉 || 오늘 날의 백두산정계비터 — 중앙 하단에 보이는 흰 표석이 백두산정계비 자리를 가리킨다.

대한제국 시기 간도관리사가 통치하였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합의된 바도 없다. 간도를 되찾자고 외치면서도 되



멀리 압록강이 발원하는 골짜기가 보인다.

찾아야 할 땅이 어디인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둘째, ‘토문’이 송화강의 지류라는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이미 알고 있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백두산정계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사실을 중국측에 내놓기만 하면 간도를 넘겨 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양측의 백두산정계비 공동조사를 기초로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제시하였으나 중국측에 의하여 반박되었다. 1880년대 조·청 국경회담에서 이중하가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결국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며, 간도협약 직전 만주 침략을 노리던 일본이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물러서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는 영유권 주장이 곤란함을 보여 준다.

셋째, 간도 영유권 주장은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 국경조약’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 간도협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새로운 국경선을 긋기 위한 국경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 천지의 중앙과 홍토수(紅土水, 두만강의 최상류)를 잇는 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하였다. 당시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국경선이 획정되고 지금까지 40여 년이 흘렀다. 설령 흡수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중 국경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는 국제법상 복잡한 문제이겠지만,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나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무시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간도는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간도협약 무효를 제기하는 것은 북방 고토 회복이라는 환상에 갇혀 현실적인 곤란과 위험에 맹목적이게 만들 뿐 아니라 영토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힐 뿐이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간도 문제를 공식화하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 갈등의 파고가 높아 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평화와 연대의 장소로서 간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중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조선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서서 전망을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 만주 지역 독립운동과 한국 현대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장세운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 ❁ 근현대사기의 만주—한민족이주지·독립운동의 본거지

만주는 어떤 곳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 우리가 '만주'라고 불렀던 중국 동북지방은 고조선·고구려·발해 등 한민족이 세웠던 고대국가의 영역이었고, 고려·조선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곳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만주'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만주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다. 19세기 후반 평안도와 함경도 주민들은 재난에 따른 굶주림과 부패관리의 토착질을 피해 이 땅으로 건너갔고, 어떤 사람들은 진인(眞人)이나 정도령이 있는 '이상향'을 찾아 이곳을 찾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또 적지 않은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1930년대 이후에는 주로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이주하기도 했다.

1932년 3월 일제의 괴뢰국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 만주는 일부 친일적 한인들에게는 ‘별천지’일 수 있었으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별과 한숨, 그리고 눈물과 회한의 땅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20세기 전반기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단체와 애국지사들이 비장한 각오로 일제와 결전을 벌였던 투쟁의 공간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들이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곳을 빼놓고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던 1960~1970년대에 양 분단국가를 통치한 박정희와 김일성은 모두 만주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당시 박정희와 김일성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었다. 이들의 만주에서의 경험은 각각 북한과 남한에서 정권을 잡은 뒤 국가운영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만주 지역의 근현대사는 한국 및 북한 현대사는 물론 동북아 전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이곳은 중국과 러시아(소련), 한국(조선)과 일본, 미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쟁과 각축의 무대였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동북아의 중추적 지역으로 부상하며 미래 번영을 좌우할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해 왔지만, 북한의 주석을 지낸 김일성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핵심요체이다.

한국 현대사를 좌우한 박정희·최규하·전두환 등 전 대통령이 만주 지역과 깊은 연고가 있다. 박정희는 일제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

의 수도 신경(지금의 장춘) 만주군관학교(정식 명칭은 만주국 육군군관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최규하 역시 만주국 관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전두환은 길림성 반석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범석, 군인·외교관과 정치인으로 크게 활약한 김홍일과 지청천 등이 이곳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분투하기도 했다.

만주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계속된 중국 국공내전의 승패를 가름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만주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의 확산 및 지연과도 관련이 깊다. 또 이곳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배후 인맥이 활동한 곳이기도 하다. 1961년 5·16군사쿠



〈그림 1〉 청산리전투 현장

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해 한일협정을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 이를 뒷받침한 한·일 양국의 주요 인물들이 바로 만주군 인맥이었다. 박정희가 국가 개발 및 발전의 전략으로 적용한 방식이 '만주국 모델'이었다는 학계의 평가도 있다.

'만주'라는 명칭은 과거 일상적으로 쓰였던 용어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동북(지방·지역)'으로 정착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점차 만주라는 용어 대신 '중국 동북(지방·지역)'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광복 전후시기 만주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동향

독립운동이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개한 일련의 저항운동 및 다양한 형태의 항일 투쟁을 총칭한다. '민족운동' 또는 '민족해방운동'이라고도 한다. 특히 우리 민족과 같이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이 전개한 독립운동은 그 성격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라 할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의 서간도와 북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은 해외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곳은 1860년대 이래 이주한 한인(조선인)들이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곳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면 쉽게 국내로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10년 8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전후하여 주요 국외 독립운동기지로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들을 통해 독립군을 양성하

였고, 많은 독립군 단체들이 결성되어 강력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통해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빛나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30년대 말까지 이러한 독립군들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만주 지역은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여러 독립운동 방략 가운데 핵심을 이룬 것이 바로 ‘독립전쟁론’이었다. 독립전쟁론은 한말 의병들의 무장투쟁 노선과 구국계몽운동론자들의 실력양성론이 합류하여 형성되었다.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국외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격화하였다. 이는 한민족으로 구성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가 일본이 중국·미국·소련 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등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



〈그림 2〉 신민회 왕청군에 있는 양세봉 독립군 사령관 석상



\*조운찬 제공

이들 열강과 함께 독립전쟁을 결행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략이었다. 특히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독립운동 방략을 실천하기 위  
한 무장투쟁의 중심지가 바로 만주였다.

1930년 간도 ‘5·30봉기’를 전후하여 간도(중국 연변) 지역에서  
사회주의운동이 고양되고, 1931년 ‘9·18사변(만주사변)’ 이후 한·중  
양 민족의 연대가 성립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이 고조되었다. 1930~1940  
년대 초반 만주에서 활동한 무장투쟁 세력으로는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  
혁명당·조선혁명군 등과 중국공산당 산하의 항일유격대·동북인민혁  
명군·동북항일연군 등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중국 남만주 지방에서 10여 년 동안이나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재만 조선혁명당 세력(조선혁명당, 국민부,  
조선혁명군)은 일제와 만주국 군경의 탄압으로 1938년 말경 거의 해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세력은 중국공산당의 동북항일연  
군에 가담하거나 중국인 항일투쟁 세력에 가담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하  
였다. 특히 이들은 일제가 패망한 뒤 중경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당·한  
국광복군, 그리고 중국국민당 및 중국 국민정부군 계열과 연계하여 다  
시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김학규 등 조선혁명당·조선혁명군 출신 인사들은 광  
복 직후 남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계열의 한국독립당 동북당부  
와 ‘장연민주자위군(長延民主自衛軍)’으로 결집되었다. 이들은  
1946~1947년경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의 ‘만주계획’에 따라 한국과 미  
국 등의 국가 및 동북아 전략에 부응하여 정치세력화 동향을 보였다.  
이른바 ‘만주계획’이란 중국국민당 정부와 미국·일본·남한 등이 연  
대하여 중국공산당과 소련·북한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

하는 동북아 반공 블록 구상과 이에 따른 만주 동포들의 참여 및 활동계획을 말한다. 특히 김학규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등과 연계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호응하여 구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출신 인사들을 중국 동북지역의 현지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때 결성된 김학규 등의 ‘한국독립당 동북특별위원회’는 중국 국민당 및 임시정부의 동북지부 조직과 긴밀히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광복 직후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주의 세력은 동북지역의 한인 교민회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광복 이후 상당수의 임시 정부나 한국독립당, 장연 민주자위군 계열 인사들의 행적과는 달리 대다수 중국 동북지방 거주 한인들



〈그림 3〉 1940년대 초 소련에서 활동한 동북 항일연군 교도 여단 간부들

은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 중국공산당 세력을 지지하였다. 그것은 중국국민당보다 중국공산당이 훨씬 더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사회경제 및 민족정책, 나아가 보다 현실적이며 민주적인 각종 실무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조선)계 중국인의 형성, 그리고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과정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30년대 후반 남만주 지역에서 투쟁하다가 일제의 탄압에 쫓겨 1940년 12월 소·만 국경을 넘은 김일성 등의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제1로군은 제2로군의 일부와 함께 연해주 보로실로프 근처의 남야영(B야영)으로 도피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114명의 대원이 있었다. 이후 1942년 7월에 소련 극동군은 남·북 야영을 정리하여 '동북항일연군 교도려(教導旅)'로 편성하였다. 또 1942년 8월 1일 소련 극동군은 이 부대 대원들을 '소련 적군 88특별저격여단(일명 88독립보병여단)'으로 정식 개편하였다.

이 때 여장은 중국인 후보중, 부참모장은 한인 최용건이었다. 제1영 영장은 김일성, 정치위원 안길(한인), 2영 영장은 왕효명, 정치위원은 강신태(한인)였다. 3영 영장은 허형식(한인), 정치위원 김책(한인), 4영 영장은 시세영(한족), 정치위원은 계청(한족)이 임명되었다. 이처럼 한인들이 주요 간부로 두각을 나타냈다. 주요 간부들에게 소련군 계급을 수여했는데, 김일성 등 각 영장은 소련군 대위로 임명되었다. 88려의 한인은 광복 직전에는 140~18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후보중은 1944년 9월경 100명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월경 한인 항일 빨치산 그룹에서 점차 김일성이 부상하였다.

1945년 8월 초 소·일전쟁이 발발하자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의

일부 한인들은 소련군을 따라 작전에 참가했으나, 대부분의 한인 대원들은 조국 해방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해 9월경 귀국하였다. 일본 패망 후 김일성 등은 9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여 9월 19일 원산에 도착하였다.

중국공산당의 만주 지부조직이 주도한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활동한 한인들은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 때문에 1940년대 전반기 중국 관내지역에서 활동한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처럼 독자적 조직체를 결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광복군이나 조선의용군처럼 3대 주요 해외 독립운동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동북항일연군 계열 한인들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기 항일투쟁 시기의 온갖 악조건에도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대중조직 연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광복 직후 북한 사회에서 '통일전선'과 '민주기지론' 전략·전술을 채택하여 복잡다기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결국 북한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림 4〉 | 보천보전투 보도 『동아일보』 호외

동북항일연군 참가 한인들의 최후항쟁과 대중조직의 결성은 한국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들은 중국공산당과 소련이라는 국제 지원세력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조선혁명'이란 자신들 고유의 임무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일본인 연구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북한을 김일성 등 항일 빨치산 투쟁세력이 주축이 되어 세우고 경영한 국가라는 입장에서 '유격대 국가'로 간주하기도 했다. 김정일 체제의 북한 역시 유격대 국가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김일성 등 항일투쟁세력이 크게 득세한 반면, 남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광복 직후 미군정의 정책과 임시정부의 미군정과의 대립, 개인적 역량 차이, 이승만 정권의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거의 27년간이나 존속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요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한 뒤, 김구 등 임시정부 핵심요인들은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에 대립하는 방침을 취했다. 또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정에 반대하였고,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 대부분이 공직에 진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광복 이후 한국의 역대정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친일세력이 득세하였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단적인 예로 1950년대 초 봉천군관학교나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만주군 인맥이 한국군의 핵심요직을 일시에 장악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1950년대 초 육군참모총장에 정일권, 제1군 사령관에 백선엽, 제2군 사령관에 강문봉이 재직하는 등 만주군 출신 인사들이 맹위를 떨쳤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립군이나 광복군 출신으로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오르거나 한국군에서 고위 장성이 된 인물은 김구의 아들인 김신(金信) 정도를 꼽을 정도로 드물다. 또 이들은 육군참모총장이나 야전군 사령관 등 군의 핵심요직에 기용되지도 못했다. 다만 김홍일·박시창·이준식·박영준·안춘생·최석용 등 일부 독립군이나 광복군 출신 장교들이 그나마 군에서 장성으로 예우받았을 뿐이다.

### **만주독립운동세력과 연변조선족자치주, 6·25전쟁, 조선족**

중국공산당 동북(만주)조직은 1928년 이후 중국 동북, 특히 연변의 한인들을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파악하고 중국인과 동등한 일체의 권리, 즉 자치권과 분립 권을 인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연변 조선족의 일정한 자치를 허용하게 되었다. 즉,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인 1952년 9월 연변 지역에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설치되고, 다시 1955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600여만 명의 해외 동포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동포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대규모 자치단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변 지역은 과거 우리가 흔히 ‘북간도’라고 불렀던 곳이다. 이 자치주의 성립과정에서 조선의용군 출신 인사들의 영향이 컸고, 또한 조선혁명당과 동북항일연군 출신 인사들 역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 민족의 자치주가 성립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초대 주장(州長)을 맡아 오랫동안

안 연변 조선족의 발전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주덕해 역시 조선의 용군 출신 간부였다.

1930~1940년대 초 치열하게 전개된 재만 한인들의 투쟁은 광복 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물리치고 그곳을 장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인 대중의 중국공산당 등 관련 단체 참가, 항일유격대 및 근거지, 자치조직의 경험과 치열한 무장투쟁의 경험 등이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던 것이다. 또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광복 후 연변 지역에 수립된 연변조선족 자치주 탄생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곧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민족자치'의 원칙과 그 실현이 한인들의 '혁명전통



〈그림 5〉 16·25전쟁 때 파괴된 압록강 단교

(항일투쟁과 중국공산당 참여)' 과 결합되면서 일정한 자치조직의 성립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만주를 석권한 직후인 1949년 7월부터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4월까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중국 인민해방군 사단 병력 3만 5,100여 명이 북한 인민군 제6·5·12사단으로 개편되어, 6·25전쟁 개전 초기 북한인민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아침 38선을 돌파한 남진 보병 21개 연대 가운데 47%인 10개 연대가 바로 만주 조선인(조선족) 부대였다고 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국공내전에 참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투력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전쟁 초기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인 동포들을 특유의 정치·법률적 개념을 적용하여 '조선족'이란 용어로 부르고 있다. 200여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 동포는 중국 국적을 소유한 조선민족 그룹에 대한 호칭이며, 국적과 민족 출신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용어이다. 즉 '중국 조선족'이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중국 행정당국의 법적 승인을 받은 조선민족 출신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현재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한국 및 한국인, 한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 만주 지역 독립운동과 한국 현대사의 의미

1930년대 초 만주의 한국독립당·한국독립군이나 조선혁명당·조선혁명군·국민부에서 활동하던 일부 인사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관내 독립운동의 발전에 공헌했다. 즉, 지청천·조경한·김학규·유동열·최동오·이준식·현익철등 상당수 인사들은 관내로 진출하여 통일전선조직을 표방하며 형성된 ‘민족혁명당’에 참가했고, 후일 임시정부나 광복군에 합류하여 만주 독립군의 이념과 인맥, 무장투쟁론 등이 일부 계승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투쟁하던 일부 한인들도 1940년대 전반기 연해주로 피신하여 재기를 도모하였다. 이들이 해방 후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으로 진주한 뒤 북한 정권의 핵심부를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은 한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

1930~1940년대 초 재만 한인들의 투쟁은 중국 동북의 상당수 중국인 대중을 각성시켜 항일투쟁을 고양시켰으며, 국내 진입작전 역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시달리던 대중들을 자극하여 한반도 북부의 독립운동을 격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만주 지역 독립군이나 동북항일연군 참가 한인들의 최후항쟁과 대중조직의 결성은 한민족에게 은연중 퍼져 있는 ‘패배주의’와 ‘허무주의’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이는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의 상징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이 8·15 광복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재만 한인들의 투쟁역량은 일제를 타도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으나, 적지 않은 일본군·만주군과 관헌 등을 살상하고 일제의 만주(중국

동북) 통치를 교란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강대한 일본 군경과 만주국 관헌 등을 일정하게 만주 지역에 묶어둠으로써 일제의 중국 관내 침략을 견제하는 실질적 전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 근현대사의 한 범주로 인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라고 안타까워했다는 내용이 『백범일지』에 실려 있다. 무장투쟁을 통해 일본과 교전함으로써 연합국, 즉 승전국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제의



〈그림 6〉 | 1945년 12월 서울에서 거행된 임시정부 환영대회

패망 이후 미국 등 승전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은 연합국 또는 참전국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이 광복 전후 시기 임시정부 산하에는 한국 광복군이 활동하고 있었다. 또 만주 독립군은 물론 동북항일연군 교도려 산하 한인 대원들 역시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결국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지 못하고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말았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분단상태는 따지고 보면 일본의 한국 강점과 식민지 통치,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 데 결정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경우 해외에서 투쟁했던 드골 정권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인받음으로써 프랑스는 전승국의 일원으로 행세하며 많은 권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윽게도 미국과 소련·영국을 비롯한 열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끝내 승인하지 않았고, 한국광복군이나 만주 독립운동세력의 일제와의 항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한반도 분단의 비극과 신탁통치안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만주 지역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은 1910년까지 지속되었던 전제군주제 체제를 청산하고 광복 이후 건설할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한인 교민들을 기반으로 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서 이를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선열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기억’으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온갖 열악한 조건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투쟁했던 우리

선열들의 자주와 독립을 향한 치열한 몸부림과 그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거대한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주와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불완전한 독립으로 민족과 국토가 양단되고 말았지만, 이러한 결과조차도 우리 선열들의 피땀어린 독립운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우리의 생존과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주목되는 전략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만주, 즉 중국 동북지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러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전략과 밀접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림 7〉 압록강 상류의 한·중 국경지대

# 만주의 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김경일 | 한국학중앙연구원 |

滿洲

## ❁ 만주와 재만 조선인의 형성

20 세기로 이행하면서 만주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권력의 무력 수단들이 집중되어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사의 주요한 장이 되었다. 동시에 만주는 이미 19세기 후반 이래 다양한 동기와 경로를 통해 동아시아의 주요 민족과 인종 집단이 흘러들어와 배제와 포섭, 억압과 관용, 대립과 공존, 경쟁과 타협 등을 통하여 공동의 주거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또 변화시켜 갔던 지역이기도 했다. 미국의 중국 연구자 라티모어(Owen Lattimore)가 지적했듯이, 만주는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어 온 근대적 창조물(a modern creation)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의 지도에서 만주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주요 제국주의 세력

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야심을 키워온 장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두아라(Prasenjit Duara)는 만주를 ‘초국적 현상(transnational phenomena)’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만주는 이산, 정착, 유리(遊離)와 탈출, 방황으로 점철된 무수한 다중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경험되어 왔던 역사적·현재적 장소이다. 일찍이 19세기부터 만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여러 지역으로 민족 이산을 경험하여 왔던 한국은 20세기 들어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면서 중국을 논외로 한다면 이 지역에 가장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제일 많은 이민자를 보낸 국가였다. 외교통상부의 「해외 거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수는 663만 8천여 명으로 이중에서 재중동포의 수가 243만 9천여 명(전체 재외동포의 36.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9세기 중후반 이래 이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청조와 중화민국 정부,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교체되어 갔던 지배 국가들로부터의 민족적 동화의 공세에 직면하며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주변인과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조선인들의 대부분이 기근과 기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1910년 강제 합병을 전후한 시기의 이주는 일제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여기에 더해졌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고 조선 농민의 궁핍과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식민지 농촌의 경제적 추락은 이들 ‘정치망명가’의 뒤를 이어 다수의 농민을 불러들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에 더하여 1919년 3·1운동의 발발은 만주로의 이주를 재촉한 정

치적 계기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1929년 세계공황의 여파로 농민의 피폐와 궁핍이 극에 달하였던 사정을 배경으로 만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 시기 이주민의 상황은 '지(既知)의 사지(死地)로부터 미지(未知)의 사지(死地)로의 분출'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실로 죽음의 광란과 같은 참상'으로 흔히 묘사되어 왔다. 1940년 말 옛 만주 지역인 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총수는 145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봉천과 신경, 하얼빈을 비롯한 17개 주요 도시 지역에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서 살았다. 도시권 농촌이건 만주에서 조선인은 일본과 중국이 각축하는 정치적 대립의 영향권 아래에서 정착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1945년의 광복은 이들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복이 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였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향에서의 생활기반이 없거나 만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던 사람들은 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돌아갔다. 이렇게 하여 귀환한 인구는 동북 3성에 거주하던 조선인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귀환자의 비율은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 되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연변 지역보다는 다른 만주 지역에서 훨씬 더 높았다.

1949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날이면서 동시에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 1949년 이전부터 중국은 조선을 포함하여 몽고와 회, 티베트 등 11개 소수민족을 민족으

로 승인하였으며, 이 숫자는 중국 정부가 ‘민족식별공작’을 개시한 건국 이후 더욱 늘어나서 오늘날 56개의 민족에 이르고 있다. 이들 소수 민족에게는 일정한 생활지역이 할당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에 창립되었는데, 자치주는 자치구(自治區)-자치주(自治州)-자치현(自治縣)-민족향(民族鄉)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민족구역지방’의 하나에 해당된다. 1990년의 센서스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의 총수는 192만여 명이고 이는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11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대략 90% 정도가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연변자치주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1〉 | 도문강 국경세관

## ❁ 근대국가와 민족정체성

19세기 중엽에 조선에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입적이나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에 있었다.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은 법률상으로는 일본인과 같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1937년에 일본이 '만주' 제국에서의 치외법권을 철폐하는 형식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조선인은 일본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치외법권의 폐지 이후 재만 조선인은 '일본인인 본질의 아래 만주국 구성분자'로서 일본



〈그림 2〉 | 도문의 조선인 거주지

과 만주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호적제도를 통하여 조선인은 ‘반도인’으로 분류됨으로써 일본인과는 다른 차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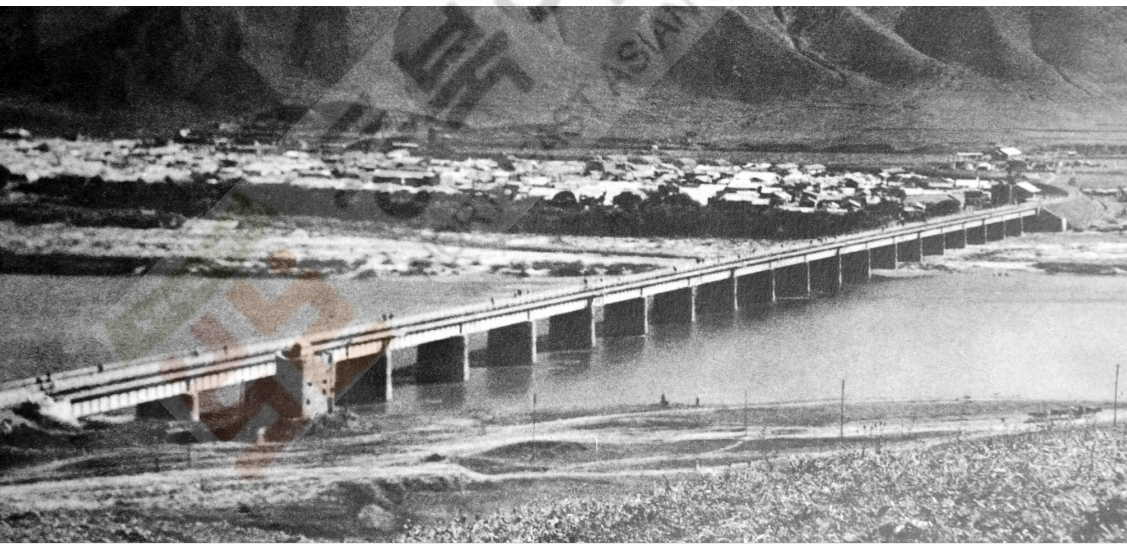
재만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중성과 복합성, 그리고 주변성은 광복 이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착화되어 갔다고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따라 이들은 이제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민족은 조선족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이중적 정체성, 즉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조선 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다.

물론 시기에 따른 변화는 있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는 1949년에 이르는 시기의 연변지구는 국가의 영향력이 희박한 일종의 ‘해방 공간’이었다. 조·중 공동에 의한 항일투쟁의 영향도 있었지만 일종의 다국적관과 소박한 국제주의의 경험은 근대적 주권국가의 국적 개념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진 것이었다. 근대적 국적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은 일종의 이중국적 상태에서 민족적 평등을 누렸다. 대부분의 조선인 사이에서 ‘귀국 지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우리나라’라는 생각은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들 세대는 스포츠 경기 관전 때에 자신이 국적을 두고 있는 중국보다도 같은 민족이 사는 북조선이나 한국에 감정이입을 하는 강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성립 이래 국내 소수민족에 일정한 영역과 자치권



〈그림 3〉 조선인의 왕래가 잦은 도문 철교



〈그림 4〉 도문 철교 전경

을 주는 한편 그 분리·독립을 금지한 집권적 색채가 강한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시행하였다. 정권 수립 이후 국민통합이 점차 진전되면서 조선족 학교에서 ‘국어’나 ‘한글’로 칭해지던 조선어 수업은 ‘조선어’로 되었으며, 조선역사나 조선지리는 각각 세계사나 세계지리로 흡수되었다. 1957년에 시작한 반우파투쟁과 이듬해인 1958년의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말에 이르는 20년 사이에 조선인들은 민족으로서의 존립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국가의 이익은 각 민족의 공동이익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최고의 형태이며,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이익과 완전히 일치한



〈그림 5〉 철교 위를 오가는 인력거와 사람들(동행인은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는 사회주의 민족론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각 소수민족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였다.

계급주의 시각에 따른 사회주의의 건설은 기존의 다국적관과 이 중국적에 대한 모호성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제도로 민족들 사이의 공통성이 높아지고 격차가 없어졌다고 하는 주장은 기존의 민족정책을 민족특수주의나 민족분리주의로 비판하면서 그에 대신하는 '민족융합론'으로 이끌었다. 민족들 사이에서 불평등의 제거를 표방하면서 시작된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개조는 민족의 이익보다 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계급의 이익이 곧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반지방민족주의'로 치달았다. 사회주의 민족론과 민족융합론은 실제로는 소수민족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한족중심주의와 대중화주의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는 '문화대혁명'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은 거의 건국 초기의 노선으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1982년 헌법이나 1984년의 민족구역자치법 제정을 통하여 중국 정부는 민족자치 지방의 권한과 국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과 한족 지역의 경제격차를 시정하고 21세기 중반까지 소수민족 지역의 근대화를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이며, 경제의 통합을 통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개혁개방' 시대의 도래는 한편으로는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전체의 국가적 통합



〈그림 6〉 | 잔교 위에서 세탁하는 조선 여인들

에 대한 동력을 제공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족 민족정체성의 기반이 되어 왔던 농촌의 급속한 파괴와 아울러 도시와 해외로의 인구 이동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른 경쟁원리의 도입은 소수민족이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민족의 경제건설을 주도하기 위하여 단일한 공동언어로서 중국어에 대한 필요를 강화하였다. 명분으로서의 ‘민족평등’이 어떠한 간에 각 소수민족들은 결국 중국어(韓語)나 한족 문화를 익히지 않고서는 주류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향을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시대에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문혁기의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 정치와 폭력을 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개혁개방 시기의 소수민족은 개방과 경제의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모든 소수민족의 내부에서 민족정체성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조선족 또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장경제 체제에 순응하고 참여하고자 할수록 스스로의 민족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시장경제의 이러한 효용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도 충분히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에서 행한 의식조사나 설문조사의 결과는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한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광복 직후 기성세대의 다수가 ‘조선이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이들에게 ‘조국’은 중국이며, 한국이나 북한은 기껏해야 ‘고국’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중국의 민족주의를 기조로 한 학교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의 영향도



〈그림 7〉 옛 조선은행 봉천 지점 건물

있겠지만,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민족과의 섞임이 진행되면서 민족교육이 거의 무력화된 시장경제 체제는 비슷한 조건에서 급속하게 ‘탈민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재일 조선인 3세대의 경험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한국과 재만조선인

한국인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이주 역사가 오랜 만큼이나 다양한 이미지로 부가되어 왔다. 식민지 시기에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동기로 귀환을 기약하지 못하고 편도 차표만을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이동하였던 만주로의 유·이민들에 대해서 멀리 떠나보낸 가난한 동포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불안과 근심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선 일제의 선전과도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비록 ‘2등국민’의 신분으로나마 끝없이 펼쳐진 광대하고 기름진 땅을 개척하는, 미래의 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표상되기도 했다. 친일분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인, 관료, 군인, 학자, 문화인에게 만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기회의 땅이었다. 동시에 만주는 일제 꼬나풀의 활동무대이자 마약과 매춘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전파하였다. 무엇보다도 만주는 조선인이 모여 살면서도 일제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지역으로, “독립투사들의 의기가 충천하고 민족의 기상이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곳, 무력으로 당당하게 일본군과 싸워 대승한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만주는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서로 상충되는 상반된 이미지와 상들에 의해 형성된 그 무엇이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국에서 분단정부의 수립과 6·25전쟁, 그리고 냉전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이 지역은 40여 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심지어는 '기민(棄民)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 무관심하였다. 1980년대까지 이들은 '적성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의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1980년 초기부터 연변에 불기 시작한 '출국열'을 배경으로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거리의 행상이나 식당이좁마, 노동자라는 형태로 출현하기 전까지 일반인에게도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한국에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정책적이고 도구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최하층의 이주노동자로 사회의 저변에 위치한 주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자의 맥락에서 이들은 중국과의 정치·외교 관계를 개선하거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 혹은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노동력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후자의 맥락에서 이들은 가난한 나라 중국에서 불법 입국하여 저임금·단순노동에 종사하면서 중노동과 차별, 냉대를 받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식민지와 분단, 전쟁이라는 동아시아 역사의 한 장에서 농민이자 항일투사로서 그리고 소수민족의 성원으로 살아온 과정에 대한 역사의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돌이켜 보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집단이 근대 이래 타국에 이주하여 이미 대여섯 번의 세대교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문화의 순수성을 지켜 오면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해온 사례는 다른 재외동포

가운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의 56개 소수민족에서도 드문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이 민족공동체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나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해외 '노무수출'에 의한 외화송금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제3차 산업의 발전이나 '과소비' 현상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확대, 배금주의의 만연 등으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취업한 재만 조선인은 동포의식의 발로보다는 냉혹한 계급관계의 경험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인에 대한 민족연대감(ethnic solidarity)은 약화되는 반면 중국인으로서의 국가



〈그림 8〉 | 조선인 농촌 마을

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냉전체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최대의 고난은 민족이산과 민족분단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들 재민 조선인이 겪은 수난과 차별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



〈그림 9〉 조선인 시장 풍경

해 싸워 나간 과정에 대한 역사적 감수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는 한 세기에 걸친 억압과 수난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 민족의 신화를 뛰어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통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재일 조선인 서경식이 말했듯이 일제의 수탈과 억압, 해외이주, 민족분단, 민족차별 등으로 점철된 한 세기의 역사를 통해 공유된 고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다.



滿

洲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나오며

-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인가

#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인가

윤휘탁 | 고구려연구재단 |

滿洲

## ✿ 최근 중국 사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중** 국 정부가 2002년 2월부터 ‘동북 변강(邊疆)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속적인 연구 프로젝트(동북공정)’를 추진하기까지 중국 사회는 소수민족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중국인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 나라들의 실태를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분명 중국인에게 상대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세계정세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만, 동시에 중국 사회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도 깨닫게 해 주었다. 더욱이 1990년을 전후로 같은 사회주의권인 소련과 동구 유럽이 붕괴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중국인 중에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회의감을 품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1989

년에 발생한 ‘천안문사태’는 바로 그러한 사회현상의 반영이었던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개혁·개방이 진척되면서 지역 간·계층 간·부문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빈부격차가 벌어지자 불만을 품게 된 사람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사회적 이완현상도 심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잘사는 동남연해지역과 낙후된 내륙지역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륙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사회적 불만과 경제적 박탈감을 품게 되었다. 특히 신강(新疆) 위구르 자치구나 서장(西藏)의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분리독립운동마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한·중 수교를 계기로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중국 동북지구(만주)의 조선족 중에는 상대적으로 발달한 한국 사회에서 큰 돈을 벌어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큰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한국에 왔다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10여만 명 가량의 조선족은 5~6년씩 이곳에 살면서 자연히 한국인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에 물들어 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인을 동경하면서 한국인이 되고 싶은 심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이중적인 심리를 지닌 조선족 가운데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세를 벗어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거나 돈을 벌려는 의도에서, ‘재외동포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차별철폐를 요구하거나 ‘국적회복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더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은 이미 한국의 경제활동 부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을 만큼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분명 조선족이 한국적 공동체 속에 깊숙이 발을 들여 놓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선족이 향후의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민족 공동체의 틀 속에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 ❁ 한반도 정세는 동북공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체제의 낙후성과 빈곤으로 탈북자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대규모 탈북자 현상은 중국인에게 북한 정권의 붕괴 조짐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계기로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만주)의 사회안정에 커다란 영향과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전문가의 예측대로 북한 정권의 붕괴가 곧바로 남한의 흡수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만일 중국이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김정일 정권이 급속하게 붕괴될 경우, 게다가 한국의 경제적 실상과 위상을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의 통일을 원할 경우, 그래서 북한 체제의 와해가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북한 정권의 후원자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 전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사회불안과 경제적 궁핍이 초래될 경우 북한 사람들의 탈북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대규모의 탈북자들이 중국 동북지구(만주)에 떠돌면서 ‘국제난민’으로 전락될 경우, 중국 정부로서는 국제적인 골칫거리를 떠안는 셈이 된다. 또한 대규모 탈북현상을 계기로 중국 동북지구는 탈북자와 조선족이 서로 어울려 상호간에 한민족의 혈통의식을 부추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와 조선족이 동일 혈통의식에 기초한 ‘심리적 유대(紐帶)’를 형성

할 경우, 그들 사이에 통일 한반도와의 연계의식이 강화되면서 만주는 한민족의 잠재적인 근거지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평소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대규모의 조선족이 한반도 통일의 과도기에 편승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한반도로 유입할 수도 있다. 만일 그들이 기존의 불법체류 조선족 및 한국인과 더불어 살게 될 경우, 통일 한반도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이들의 한국인화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 때 만일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나 한국 정부의 정책이 호의적으로 바뀔 경우 중국 국민으로서의 조선족의 정체성은 더욱 흔들릴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에서 탈북자·조선족·북한인·한국인이 어울리게 될 경우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의 국경선은 모호해질 것이고 조선족 및 중국 동북지구 사회에 대한 통일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데 반해 조선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은 약해질 수 있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것이고 일부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탈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 지구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중국 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주에서의 조선족의 정체성 동요는 자칫 중국 소수민족 문제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조선족으로 하여금 한반도와의 혈통적 연계의식이나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켜 만주와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더욱이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림)’의 관계로 비유되는 북·중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붕괴와 남한의 흡수통일 및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재편이 초래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와는 별개로 한국인 중에는 백두산이나 고구려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만주가 한국 땅’이라고 조선족에게 선전하거나 한국 역사를 설파함으로써 조선인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려는 사람이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수년 전부터 단독으로 고구려 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다. 이 소식은 중국 정부를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 문화유적만의 단독 등재는 자칫 고구려 문화가 북한 것(즉, 한국사)임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중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고구려 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단독으로 등재하는 것을 막고 중국 내 고구려 문화유적을 등재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짧은 기간에 고구려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2004년 7월 북한과 동시에 자국 내 고구려 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 ❁ 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과 동북공정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상술한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가 이완되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영토적 통합’을 강화해서 사회안정과 중국 국민으로서의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려고 애써 왔다. 중국 정부의 그러한 노력은 역사관에도 투영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선언적 의미를 띠었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중국의 국민적·영토적 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중국은 한족

과 다수의 이민족이 생존경쟁하면서 분열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일적인 국가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은 중국이라는 역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중화) 민족이고, 그들(한족과 비한족 포함)의 역사적 활동이나 그들이 세운 왕조들은 모두 중국 역사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민족이 세운 왕조들의 관할범위를 합친 것이 '역사상의 중국 영토(疆域)'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존재했던 고조선·고구려·발해 민족은 중국 민족이고 그들의 역사 역시 중국 역사가 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몽골족이 주로 거주하는 내몽골 지역, 위구르족이 주로 거주하는 신장 지역, 티베트족이 주로 거주하는 서장 지역 등에 대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적용시켜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미 역사 교과서나 각종 매체를 통해 이들 민족을 중국 민족으로 규정해 왔고 그들의 역사적 활동(왕조를 포함해서)도 모두 중국 역사의 범주에 귀속시켜 왔다. 그렇지만 남북한을 의식해서인지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동북지역(만주)에 대해서만큼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역사논리, 즉 고구려나 발해의 영역이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내에 존재했기 때문에 고구려나 발해는 중국사라는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동북지역에 적용하기를 꺼려 왔다.

그런데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004년 7월 중국 내 고구려 문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관영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고구

리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고구려사=중국사' 논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민적·영토적 통합을 강화해야 할 중국 정부로서는 이 논리를 동북지구에도 적용시켜 과거에 존재했던 고구려·발해 민족을 중국 민족으로, 이들 왕조를 모두 중국 역사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정체성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완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동북지구에 적용되면서 추출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북공정의 출현과 추진과정에는 중국 정부의 또 다른 역사 프로젝트들도 한몫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과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다. 1996년 5월 16일부터 2000년 9월 15일까지 추진된 하상주단대공정은 중국 고대문명(중화 문명)의 기원을 새롭게 조명해서 역사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던 하·상·주의 연표(年表)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2000년 8월 '고대문명연구센터'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설립된 것을 계기로 2002년부터 본격화된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중국 전설에 대한 연구 및 화하족(華夏族, 한족의 선조)의 활동 중심지역에 대한 고증, 화하족의 기원과 중화 민족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증 등을 통해 중국 고대문명의 뿌리를 찾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과학적 근거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중국 민족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전설시대를 역사시대로 바꿔 중국 역사를 늘리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화 문명의 유구함과 찬란함을 밝혀 중국 민족의 자긍심과 역사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중국 국민의 결속력을 강화시키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들은 동북공정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체의 추진과정에서 동북공정 논리를 강화시켜 주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 동북공정 추진기구는 어떻게 조직되었고 어떤 문제들을 연구할까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을 통해 어떤 연구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흑룡강성·길림성·요령성)은 중공중앙의 비준을 얻어 ‘동북공정’이라는 대형과제를 연합적으로 조직하여 2002년 2월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아울러 동북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고 지도기관으로 ‘동북공정영도협조기구(東北工程領導協助機構)’를 조직했다. 중앙차원의 영도협조기구를 조직한 것은 동북공정 자체가 단일 행정기관만의 독자적인 프로젝트 차원을 넘어 중앙의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省)이 모두 관련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성 단위를 뛰어넘어 연구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들보다 상급인 중앙차원의 지도·협조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영도협조기구의 고문은 설립 당시 중국공산당 정치국 국무원인 이철영과 중국 재정부 부장인 항회성 등이 맡았다. 동북공정영도협조기구 밑에는 실질적인 지도기관으로 ‘동북공정영도소조(東北工

程領導小組’가 조직되었는데, 여기에는 동북 3성 성(省)정부의 부성장(副省長)이나 각 성 공산당위원회의 부서기(副書記),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의 핵심인물 등이 포진되어 있다. 또한 소조 예하에 조직된 ‘전문가위원회’는 동북 3성의 선전부와 사회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변강사지연구센터·민족연구소·세계사연구소·고고학연구소·과학연구국, 중국인민대학 청사(淸史)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적인 실무기관으로는 ‘전문가위원회’ 예하에 ‘동북공정판공실(東北工程辦公室)’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동북공정의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5년을 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다. 2002년도 동북공정의 순수학술 연구경비는 인민폐로 환산하면 약 27억 위안(元)이다. 이 경비는 중국 연구자들의 임금수준과 물가를 감안할 때 대략 우리돈으로 270~4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3월에 출범한 고구려연구재단의 2004년도 순수학술경비는 30여억 원에 불과하다.

동북공정의 연구과제들은 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포함한 연구부문, ② 외국(주로 남북한)의 관련 서적을 번역하는 부문, ③ 관련 사료의 수집·정리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기초연구란 역사 사실의 규명과 그에 수반되는 학문적인 이론연구를 가리킨다. 응용연구에는 기초연구를 토대로 현실의 국제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의 통일 등)가 중국 동북지구에 미칠 영향과 충격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 마련,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전략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공개된 기초연구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1차 연도

(2002)에는 기초연구 27개 과제, 응용연구 8개 과제, 번역 14개 과제, 자료편집 4개 과제가 책정되었다. 제2차 연도(2003)에는 기초연구 15개 과제, 응용연구(몇 개 과제가 책정되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번역 2개 과제, 자료편집 3개 과제가 공모되었다. 제3차 연도(2004)에는 기초연구 15개 과제, 응용연구(비공개)가 공모되었고 기초연구로 6개 과제가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중 간의 논쟁이 불거지면서 2005년도 이후의 공모과제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이 정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2005년도 이후에 공모된 과제들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기초연구의 주요 과제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역사와 뿌리, 기자(箕子)조선, 고구려사, 고구려 민족의 뿌리와 유민(遺民)문제, 고구려의 귀속문제, 발해사, 발해 민족의 뿌리와 유민문제, 발해의 귀속문제, 한·중 간의 국경논쟁문제, 조선의 북진정책, 원(元)과 고려의 관계, 조선인의 만주 이민문제, 조공·책봉 문제, 고대 중국 영토이론, 동북지방사, 동북민족사, 간도문제, 한반도의 국(國)·족(族),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遠東)지구의 정치·경제 관계사,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문제 등이 있다. 기초연구 과제항목들을 살펴보면 몇 개의 러시아 관련 과제가 있을 뿐 대부분은 한반도, 즉 남북한과 관련된 과제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북공정이 사실상 남북한을 염두에 둔 연구 프로젝트임을 시사해 준다.

응용연구는 한반도 정세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예측과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응용연구의 주제항목이나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과학연구(科研) 항목에서 「조

선반도의 북남통일 과정 및 그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응용연구과제가 동북공정의 연구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응용연구는 한반도 및 만주의 현실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주제들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응용연구는 기초연구보다 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북공정의 핵심과제는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에 필요한 역사적 논리를 개발하고 찾아내는 학술적 작업은 그것을 해결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보조과제라고 볼 수 있다.

## ❁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고구려사 논리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논리를 살펴보자. 우선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고구려사 관련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구려 왕조는 서한(西漢)의 관할 구역 내에 존재했던 변강 소수민족이 수립한 지방정권이었고 고구려 영토는 원래부터 중국 영토였으며, 고구려인 역시 중국 고대의 민족이었으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구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유물·유적 역시 중국의 문물·고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고구려 정권은 남하한 일부 부여족 일파와 예맥족·한족·선비족·숙신인 등이 공동으로 수립했으므로, 고구려 민족은 한반도의 한민족과는 완전히 무관

한 중국 변강의 민족이며, 정권수립 주체 역시 한민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 정권은 서한의 관할하에 있었고, 활동지역 역시 중국 역대왕조의 통치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의 고구려 정벌은 ‘침략’이 아니라 ‘중국 국내의 통일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의 수도가 서기 472년 장수왕 때 한반도의 평양으로 옮겨졌지만 그 지역 역시 한사군의 관할범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고구려의 활동범위는 한사군의 관할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는 줄곧 중국 역대 중앙왕조와 조공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관계를 끊고 ‘중국’ 밖에 존재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넷째,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의 대다수는 한족을 비롯한 중국민족으로 흡수·융합되었으며,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4분의 3)도 중국 영토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고려가 고구려를 역사적으로 계승했다는 한국측 논리와 달리, 중국에서는 고구려와 고려 사이의 역사적 계승관계를 부정한다. 중국측에 따르면 “고구려의 약칭인 고려(즉, 고구려)와 왕건이 세운 고려는 시간적으로 보나 왕족의 성씨(姓氏)로 보나 예속신민(臣民)의 구성실태로 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고씨(高氏, 高朱蒙) 고려와 왕씨(王建) 고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왕씨 고려의 영토는 기본적으로 신라의 영토를 계승했고 구성원도 대부분 신라인(辰韓·弁韓)과 백제인(馬韓)이므로, 고려 민족의 뿌리는 한반도 남부의 삼한인(三韓人)이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중앙왕조에 조공을 바친 속국으로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역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와 고려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계승관계가 없고 한반도의 민족과 국가는 삼한을 뿌리로 하고 있으며, 그 관할



구의 역사적·지정학적·민족적 관련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교육지책에서 파생된 것이다.

## 동북공정의 추진배경과 의도, 본질은 무엇일까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의 홈페이지(www.chinaborderland.com)에서는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으로, 개혁·개방 이래 만주의 국제관계가 변하였다는 점, 동북변강이 동북아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면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 일부 국가(사실상 남북한을 지칭함)의 연구기구와 학자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연구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 몇몇 정객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릇된 논리를 공개적으로 펼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주장, 변강사지연구센터가 공모한 연구과제들의 내용,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의 내부분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동북공정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을 차단하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동북공정 추진의 최대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는 중국이 국가주의 역사관, 특히 각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동북지구에 적용시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서의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완결하려는 데 있다. 셋째는 만주 고대사(고조선·고구려·발해)=중국사’ 논리를 일반화시켜 남북한에서

의 '만주 수복론(收復論)'이나 '고구려 영토=한국 땅'이라는 주장에 썩기를 박고 한반도와 만주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함으로써, 조선족 사회 및 만주에 대한 (통일)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다. 넷째는 중국 주변의 민족국가들이 해당 민족의 왕조를 자국사로 주장하는 상황을 방지할 경우, 중국 역사는 여기저기 찢겨나가 일맥상통한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영토'를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존재했던 민족이나 왕조는 무조건 중국 민족이고 중국사라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주변 민족국가의 역사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데 있다. 다섯째는 북한이 단독으로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막고 중국 내의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킴으로써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공정은 현대 중국의 역사관·민족관·국가관·영토관이 집약되어 표출된 역사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만주 전략'이자 '동북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의 논리 속에서는 전통사회 중국인이 지녔던 화이관(華夷觀)이 배어나오고 있으며, 중화제국의 논리(혹은 중화주의)도 풍기고 있다. 또한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 역사 속의 민족이나 왕조의 귀속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동북공정의 논리는 '영토 지상주의 역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주 — 그 땅·사람 그리고 역사

초판 1쇄 인쇄 2005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05년 12월 25일

펴낸이 김정배

펴낸곳 고구려연구재단

등록 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6-1 일흥빌딩5층

전화 02-6260-2600

팩스 02-6260-2698

ISBN 89-91448-23-2-0391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고구려연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